

2018년도 제22차 정기총회

2018년도 제22차 정기 총회 자료집

일 시 : 2018년 1월 29일(월) 18:30

장 소 : 여성미래센터 지하 교육장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제 22차 정기총회 자료집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다.

1. p21. 사업총평 21줄에 '평창올림픽에'를 '평창올림픽으로'수정하다.
2. P89. 회계보고에 총결산내역과 함께 자산 부채를 추가 정리하여 부착하기로 하다.
3. p95. 인선위원외에 김정아는 오기임을 확인하고 제외하기로 하다.
4. p96. 배삼희 감사는 사임이 아니라 임기만료임으로 수정하다.임기도 '2018~2020'이 아니라 '2015~2017'로 수정하다.
현재 임기 중인 이사들의 역대임기를 비고란에 추후 총회자료집에는 넣기로 하다.
5. p100.첫째 줄 '프로그램의 상시적 운영'을 '프로그램을 상시적 운영으로' 로 수정하다.
6. p101~p102. 평화통일 사업은 아래와 같이 순서를 바꾸기로 하다
4)5)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다.
 - 1) 남북여성교류의 지속적인 추진
 - 2) 분단/정전체제 종식을 위한 캠페인과 국제적인 연대활동 모색
 - 3)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유엔 안보리결의 1325' 국가행동계획 모니터링 계획수립 등 대응모색
 - 4) 여성의 일상적 삶과 연결된 평화의제 발굴
 - 5) 한반도의 군사기지화 반대 활동 전개
성주의 사드배치나 강정해군기지는 남북의 군사적 대립 보다는 미국의 대중국 방어 기지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유사시 한반도가 동아시아 무력분쟁의 현장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위기를 막기 위해, 본회는 한반도가 동아시아의 군비경쟁을 심화하는 데 도구로 활용되는 군사기지화를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 6) 평화협정 체결 촉구를 위한 다양한 활동 전개
2018년은 한국전쟁 정전협정 65주년이 되는 해이다. 65년 동안의 정전체제 하에서 남북의 주민들은 많은 고통을 겪어왔고, 남북의 이질화와 적대화는 점차 심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제 남과 북, 그리고 중국과 미국은 종전을 선언하고 불가침선언, 평화협정으로 이어지는 평화체제로의 출발을 올해를 기점으로 시작되기 바란다. 이를 위해 본회도 시민사회, 여성단체들과 함께 노력하고자 한다.
 - 7) 2018 평창, 여성평화걷기
7. p107. 예산안에서 업무추진비를 20만원으로 수정하다.



2018년도 제22차 정기총회

2018년도 제22차 정기 총회 자료집

일 시 : 2018년 1월 29일(월) 18:30

장 소 : 여성미래센터 지하 교육장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차 례

| | |
|-----------------------|-----|
| ■ 정기총회 순서 | 3 |
| ■ 제21차 정기 총회 회의록 | 5 |
| ■ 2017년 감사 보고 | 13 |
| ■ 2017년 사업보고 및 평가 | 19 |
| I. 사업 총평 | 21 |
| II. 사업보고 및 평가 | 23 |
| 【1】조직 사업 | 23 |
| 【2】평화·통일 사업 | 33 |
| 【3】정보·홍보 사업 | 39 |
| 【4】회원 사업 | 42 |
| 【5】재정 사업 | 43 |
| 【6】연대 및 협력사업 | 43 |
| 【7】부설 갈등해결센터 | 59 |
| 【8】부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 | 82 |
| ■ 2017년 결산보고 | 87 |
| ■ 임원 인선안 | 93 |
| ■ 2018년 사업계획안 | 97 |
| I. 2018년 사업기조 및 방향(안) | 99 |
| II. 2018년 사업계획(안) | 100 |
| ■ 2018년 예산안 | 107 |
| ■ 부록 | 109 |
| 평화여성회 정관 | |
| 평화여성회 조직 현황 | |
| 2017년 성명서 목록 | |
| 회원가입서 | |

정기총회 순서

I 부 회원등록 및 식사 나눔, 인사나누기 (오후 6:00 ~ 오후 6:30)

II부 본 회의 (오후 6:30 ~ 오후 8:30)

1. 개회선언
2. 서기임명
3. 성수보고
4. 회순재택
5. 전차회의록 낭독
6. 2017년 감사보고
7. 2017년 사업보고와 승인
8. 조직개편의 건
9. 2017년 결산보고와 승인
10. 임원 선출 및 승인
11. 2018년 사업계획안 보고와 승인
12. 2018년 예산안 보고와 승인
13. 기타토의
14. 회의록 받음
15. 폐회

제21차 정기(제22차) 총회 회의록

제21차 정기총회 회의록

□ 서기: 명희, 이은영

1. 일시: 2017년 2월 9일(금) 19:00 ~ 22:00

2. 장소: 여성미래센터 교육장

3. 주요내용

1) 개회선언

: 안김정애 의장이 오후 7시 개회 선언을 하고, 정기총회를 시작하다.

2) 서기 임명

: 명희, 이은영 회원을 총회 공동서기로 임명하다.

3) 상수보고

: 신민서 활동가가 재직회원 52명 중 참석 23명, 위임 7명, 총 30명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고, 안김정애 의장이 정관에 의거하여 성회되었음을 선언하다.

4) 회순채택

: 안김정애 의장이 자료집의 회순을 제안하고, 모두 가하여 이를 받기로 하다.

5) 전자회의록

: 전자회의록을 눈으로 읽고 통과하기로 하다.

6) 감사보고

: 안김정애 의장이 사업감사와 회계감사를 보고하다.

7) 2016년 사업보고와 승인에 관한 건

: 총회 자료집 15쪽에서 126쪽을 토대로 영상자료와 안김정애 의장이 자료집을 요약보고하다.

정현택 회원이 2015년 대비 2016년 사업의 비교를 요청하여, 안김정애 의장이 여성평화 걷기 행사가 상반기에 집중되었고, 하반기에 서울시 프로젝트가 승인되어 9월부터 집중적으로 행사를 진행하였음을 보고하다. 김성은 회원이 프로그램이 훌륭했으나 행사 홍보가 부족했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김선혜 회원이 갈등해결센터가 정부소장체제로 정착하였으며, 각 교육이 지역커뮤니티 사업으로 일원화되고, 강사트레이닝 과정이 폐지되었으며, 조정과 대화의 과정에 집중하여 교육과정 운영을 진행했음을 보고하였으며, 해외연수를 통해 교육과 삶의 연결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음을 보고하다.

김명신 회원이 여성평화연구소의 활동에 대해 질문하였고, 안김정애 의장과 조영희 회원이 그동안 출판사업과 등을 통해 여성평화운동이론 제시의 역할을 하였음을 설명하다.

2016년 사업보고에 대해 정현택 회원 동의, 조영희 회원 재청하고, 모두 가하여 받기로 하다.

8) 조직개편의 건

: 김선혜 회원이 별첨자료를 토대로 갈등해결센터의 정체성과 확장성을 위한 조직 논의를 제안배경에 대해 설명하다.

김명신 회원이 구체적 조직개편안이 있는지 질문하였고, 김선혜 회원이 검토 중에 있음을 설명하다. 박수선 회원이 제안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동의 이후에 추진과정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 주길 요청하다. 정현택 회원이 차이를 인정하는 연대의 방식에 대한 대안적 방안 여 대해 함께 제안해 주길 요청하다. 김선혜 회원이 총회 후에 조직발전위원회와 총회준비위원회를 조직하여 논의하는 것까지 진행되었음을 설명하다. 박수선 회원이 별도의 조직 설립을 논의하는 것을 결정하고, 구체적 내용은 2018년 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제안을 수정하는 것을 제안하다. 정현택 회원이 조직발전특위를 만들어 논의하고, 그 결정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으로 제안하다. 조영희 회원이 조직발전특위의 역할과 구성, 일정과 결정사항을 제출할 기구 등을 구체화해서 논의하길 요청하다. 박수선 회원이 조직발전특위에서 논의하고, 논의사항을 평화여성회 이사회로 제출하여 승인하는 것을 제안하다. 전상희 회원이 오늘의 안건을 정리하여 조직발전특위에서 올해 논의하길 제안하다. 조영희 회원이 갈등해결센터를 별도의 조직으로 설립하는 것을 검토하고 조발특위에서 논의하며, 조발특위에 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논의하는 것을 제안하다. 이경순 회원이 절차와 역할, 권한을 명확히 하길 제안하다. 김명신 회원이 조발특위 구성과 관해서 임시총회로 최종결정하길 제안하다.

김선혜 회원이 제안의 취지가 구체적 논의를 위해서는 갈등해결센터 분리에 대한 회원들의 동의가 필요함을 설명하다. 정현택 회원이 운영위원회가 주축이 된 조발특위를 구성하고 논의내용의 승인을 이사회에서 할지 임시총회에서 할지 결정함이 필요함을 제안하다. 전상희 회원이

정편에는 이사회 승인사안으로 되어있으나, 총준위에서 총회에서 회원들의 동의불 양자는 의견이 있어 총회 안건으로 삼정하였음을 설명하다. 정연백 회원이 구체적 내용을 조발특위에서 논의하고 이사회에서 승인하거나, 임시총회에서 승인하거나, 내년 총회에서 승인하는 세 가지 방안으로 결정할 수 있음을 제안하다. 김귀옥 회원이 그동안의 논의내용을 잘 모르는 회원들이 있으므로 형식적이더라도 총회 절차를 거치길 제안하다.

김지선 회원이 조발특위의 주체가 평화여성회와 갈등해결센터 두 개의 주체인지 새로운 조직 추진위원인지 명확히 하길 요청함. 박수선 회원이 조직 개편을 추진하기로 하고, 앞으로 만들어가는 내용을 회원들이 충분히 공유하는 시간도 필요하므로 향후 조발특위를 구성하여 논의한다는 것만 결정하길 제안하다. 조영희 회원이 분리할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구체적인 상 없이 결정하는 것은 할 수 없음을 설명하다. 전상희 회원이 분리 독립하는 것을 동의하는 지의 여부가 결정되면, 조직을 어떻게 분리할 것이며 어느 단위에서 결정할 것인지 분리하여 논의하길 요청하다. 양승광 회원이 이사회 위임이 부결되도 정관 28조에 따라 이사회에서 승인하게 되어있으므로, 최종 승인을 총회에서 의결할지 이사회에서 의결할지를 정하길 제안하다.

김성은 회원이 조직 분리하기로 결정하는지 명확히 하길 요청하다. 정연백 회원이 조발특위의 논의내용을 이사회에서 승인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분리 결정이 최종결정이 아님을 설명하다. 전상희 회원이 분리 독립을 전제로 안건을 올렸으나 분리 독립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분리를 추진하는 것을 결정하는지에 대해 정하고 나서 향후절차를 논의하길 제안하다. 양승광 회원이 최종 결정을 총회에서 할지 이사회에서 할지 결정하길 제안하다.

'평화여성회는 부설 갈등해결센터를 조직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고 확장성을 위해 별도의 조직으로 분리하는 것이 필요성에 동의하며, 이에 대한 세부내용은 조직발전특위를 구성해서 논의하기로 하다.'는 안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다.

박수선 회원이 동의하고 김성은 회원이 재청하고, 모두 가하여 받기로 하다.

9) 2016년 결산보고 및 승인에 관한 건

: 별도 자료를 토대로 신민시 활동가가 결산보고하다.

김명신 회원 동의, 신민시 회원 재청하고, 모두 가하여 받기로 하다.

10) 임원 선출 및 승인에 관한 건

: 김성은 인선위원장이 정관을 토대로 인선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보고하다. 김성은 인선위원장이 상임대표에 안김정에 연임, 공동대표 정경란 신임, 이사 박현선, 여해숙, 정현백, 조영희 연임, 김귀옥 신임을 제안하고 모두가 박수로 동의하다.

김희정 회원 동의하고, 김명신 회원 재청하고, 모두 가하여 받기로 하다.

11) 2017년 사업계획 및 승인에 관한 건

: 안김정에 의장이 총회 자료집 139쪽부터 146쪽을 토대로 2017년 사업계획안을 보고하다. 정현백 회원이 141쪽 '2. 평화통일 관련 대선 의제 제시'에 '여성'이 들어가야 함과 '3.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활동과 국제적 연대활동 모색'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활동'과 '국제적 연대활동'으로 구분하길 제안하고, 여성관련 대선의제를 구체화하여 여성주의적 시각을 넣은 공약, 여성담당 부서 구성 제안, 북쪽 여성노동자의 인권 등에 대한 구체적 제안이 필요함을 제안하다. 김귀옥 회원이 대신특위를 구성하여 논의하길 제안하였으나, 조영희 회원이 조직 내에서 논의하는 것을 제안하여, 이를 받기로 하다. 조영희 회원이 143쪽 '2-3. (가칭)조직개발특별위원회' 구성 및 역할에 관하여 1차 이사회에서 검토하도록 하는 것과 '(가칭)조직발전특별위원회'로 정정하는 것을 제안하여, 이를 받기로 하다. 정현백 회원이 145쪽 '1. 국내 상설 연대'에 '1-6 시민평화포럼', '1-7 한반도평화회의'를 추가하는 것을 제안하고, 이를 확인한 후 추가하기로 하다.

김진희 회원 동의, 김명신 회원 재청, 모두가 가하여 이를 받기로 하다.

김신혜 갈등해결센터소장이 총회 자료집 146쪽부터 149쪽을 토대로 사업계획안을 보고하고, 안김정에 의장이 총회 자료집 150쪽부터 151쪽을 토대로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사업계획안을 보고하다.

박수선 회원 동의, 전상희 회원 재청, 모두가 가하여 이를 받기로 하다.

12) 2017년 예산안 승인에 관한 건

: 신민서 활동가가 자료집 153쪽부터 156쪽을 토대로 예산안을 보고하다.

김선혜 회원이 부설 갈등해결센터 예산 사업비에 17,500,000원을 17,400,000원으로 수정하다.

김귀옥 회원 동의, 이정순 회원 재청, 모두 가하여 이를 받기로 하다.

13) 회원상

: 양승광에게 모범회원상을 수여하다. 안김정에 의장이 김지호 회원은 특별상을 수상하였으나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설명하다.

14) 안김정에 의장이 창립 20주년 관련 공지사항을 안내하다.

15) 회의록 발송

: 이은영 서기가 회의록을 낭독하고, 김성은 회원 동의, 김신혜 회원 재청하고, 모두 가하여 받기로 하다.

16) 폐회

: 안김경애 의장이 오후 10시 폐회를 선언하다.

2017년 감사 보고

2017년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사업감사 보고

1. 2017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으로 5월 9일 조기 대선이 있었으며,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문재인 정부의 각 분야 적폐청산과 국정개혁에 관한 수행 의지를 기대한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북한의 핵실험과 한국정부의 THAAD 배치 강행, 트럼프 미 대통령의 정세되지 않은 전쟁위협으로 한반도 내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였던 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이하 '평화여성회')는 각 위원회 별로 꾸준히 여성주의적 평화 정책 수립과 정착을 위한 많은 사업을 하였습니다.

2. 평화여성회는 2017년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20년의 활동을 돌아보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행사로 많은 회원들이 결속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평화여성회는 감사에서 때때 언급되는 인적·물적 지원 부족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여성평화결기 행사와 기념심포지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고, 대선연계를 제시하고, 사드반대, 전쟁반대, 평화행정 재결을 위한 여성행동, 한미군사훈련 반대, 트럼프 방한 반대 여성행동 등의 한반도 평화 조성을 위한 모든 논의에 참여하여 2017년 사업기조와 방향에 따라 여러 사업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됩니다.

3. 특히 평화여성회의 국제협력위원회의 주도로 '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유엔 안보리결의 1325 이행을 위한 대한민국 국가행동계획'과 관련한 공청회 행사와 정현택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관련 청문회에서 관련 질의를 요청하고 그 답변을 받은 것은 문재인 정부의 내실 있는 이행과 추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시의 적절한 활동으로 평가됩니다.

4. 2018년에도 많은 사업과 활동으로 좋은 성과를 내시길 기대하며, 부설 갈등해결센터를 별도의 조직으로 분리하기 위한 꾸준한 논의가 2018년도에는 결실을 맺고 좋은 성과를 이루기를 기원합니다.

2018. 1. 18.

감사 배삼희



2017년 평화여성회 회계감사 보고

(사)평화를만드는여성회 귀중

감사 기간 : 2017.1.1.~2017.12.31.
 감사 일시 : 2018.1.18
 감사 장소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사무실
 감 사 인 : 윤수경

2017년 (사)평화를만드는여성회 회계감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본 회계감사는 본회를 비롯, 부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을 포함합니다. 단, 부설 갈등해결센터는 그동안 사업을 주도해온 회원들이 2017년 7월자로 독립법인체를 설립하여 본 회계감사도 7월까지만 합산하였습니다.

본인은 월별 수지결산서, 금전출납부, 수입지출결의서와 그 영수증을 검토한 결과 자료가 잘 정리되어 있고 통장과도 일치함을 확인하였습니다.

1. 평화를만드는여성회의 2017년 총 수입액은 96,504,329원이며, 총 지출액은 93,605,688원으로서 이월액은 2,898,641원 입니다.

2. 평화여성회 2017년 수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 총 수입 | 총 지출 | 이월금 | 비 고 |
|--------------|------|------------|------------|-----------|--------------|
| 본 회 | 일반회계 | 50,167,651 | 47,701,417 | 2,466,234 | |
| | 소 계 | 50,167,651 | 47,701,417 | 2,466,234 | |
| 부설 갈등해결센터 | 일반회계 | 42,012,931 | 42,012,931 | | |
| | 프로젝트 | 2,990,840 | 2,990,840 | | 사회적기업 진흥원 |
| | 소 계 | 45,003,771 | 45,003,771 | | |

| | | | |
|--------------|------------|------------|-----------|
| 부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 | 1,332,907 | 900,500 | 432,407 |
| 합 계 | 96,504,329 | 93,605,688 | 2,898,641 |

3. 본 회의 경우, 2016년과 비교할 때, 수입 8,744,633 (58,912,284-50,167,651)원이 줄었으며, 총 지출 역시 7,721,112 (55,422,529-47,401,417)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4. 수입 부분의 달성률을 보면 회비가 예산 대비 76.4%, 후원금이 51.3%에 그쳤으며, 이에 따라 지출 또한 사업비 집행률이 61.9%, 운영비 집행률도 80%에 머물렀습니다. 적극적인 회원유치와 후원금 모금이 필요합니다.

5. 결산액으로 볼 때 사업비가 23%에 그치고 그 중 연대사업비가 사업비의 19%에 달합니다. 이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6. 부설 갈등해결센터를 주도해온 회원들이 독립법인체로 분리된 것은 그간 평화여성회가 인큐베이팅 역할을 잘 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점차 높아져가는 무력분쟁, 남북분단이 가져온 남남갈등의 심화 등 평화운동이 보다 결실히 요구됩니다. 이 사명에 가연찬 여성평화운동을 기대합니다.

2018년 1월 18일

감사 윤 수 경



2017년 사업보고 및 평가

I. 2017년 사업 총평

II. 2017년 사업 보고 및 평가

I. 2017년 사업 총평

2017년은 1700만 명의 시민이 만들어 낸 촛불시민혁명의 해였다. 2016년 9월 중순부터 드러나기 시작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으로 촉발된 촛불행진은 10월에 시작되어 올해 4월까지 계속되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작년 12월 9일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고, 5월 9일에 조기 대선으로 치러진 19대 대선에서 당선된 문재인 정부는 촛불시민혁명 과정에서 나타난 적폐청산의 바람을 반영하여 검찰·국정원 개혁,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문제들을 국정개혁과제로 설정하여 개혁 의지를 다지고 있다.

그러나 통일·외교·안보 분야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는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개성공단 폐쇄, THAAD 배치 합의 등 국가안보와 직결된 문제들을 철차적 정당성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운전석’에 앉아 한반도평화를 이끌며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을 중시하겠다고 주장하였으나 취임 이후 태복압박을 전제로 한 한·미동맹의 공고화 천명하고 성추위에 THAAD를 추가 배치하여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시민들에게 실망을 주기도 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강경정책은 취임 이후에도 계속된 북한의 핵실험과 핵미사일 발사로 인한 정세의 악화에 대한 대응이었다. 특히 북한과 미국의 실전(活戰)은 모든 옵션은 테이블에 있다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공개적인 전쟁위협과 전략자산이라 불리는 핵잠수함과 전륙기를 통한 대북무력시위를 통해 더욱 악화되었고 이는 문재인 정부의 운신의 폭을 줄일 수 밖에 없는 한계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운전자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북한과의 직접 대화와 협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내는 적극적 역할을 통해 오랫동안 중단된 북한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동북아 다자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 마침 2018년 2월부터 열리는 평창올림픽에 북한도 적극 참여하는 평화의 올림픽으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같은 한반도 태평 분위기를 계기로 동북아의 신냉전 기류를 평화의 기류로 바꾸어 내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한반도 정세 속에서 2017년 평화여성회의 활동은 아래와 같이 전개되었다.

1. 평화물만드는여성회는 촛불혁명으로 인한 정권의 변화와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인한 북-미간의 대결이 최악의 상태까지 치달은 과정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아내고 평화를 촉구하는 적극적 노력을 기울였다. 대선시기에 여성들의 평화·통일·안보에 관한 정책의견을 제시하였고, 2016년에 이어 ‘5·24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여성평화심포지엄과 평화걷기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시켰으며, 사드배치반대활동, 7월 27일 정전협정 64주년을 맞이하여 평화환경 제철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등으로 평화담론, 정책제안, 실천 활동에서 여성평화리더십을 확고히 하였다.

2. 본 회의 북-미의 대결로 인한 한반도 전쟁의 위험성과 동북아 평화를 위한 국제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국제연대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였다. 3월 UN CSW 회의, Women Cross DMZ, GPPAC 올란바토르 프로세스 3차 회의(8월)에서 한반도의 비평화적 상황을 소개하고 여성평화운동의 대응, 그리고 더욱이 평화를 위한 국제평화운동의 연대와 지지를 요청하였다. 아울러 오키나와에서 개최된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국제여성평화네트워크(TWNAM) 9차 회의(6월)에서 미군사기지가 존재하는 지역의 여성 활동가들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대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일본 도시샤 대학에서 열린 '여성-전쟁-인권 연례학술회의'(10월, 일본 교토)에서 한국여성의 안보문제를 기지촌 여성의 소송과 임부투쟁의 사례를 통해 군사주의의 피해 양상을 알렸으며, 12월에는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여성평화회의'에서 계속되는 미국의 군사적 협박을 막고 한반도 평화분위기를 조성을 위해 캐나다 정부와 의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3. 본 회의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20년의 성과를 돌아보면서 새로운 20년을 준비하기 위하여 회원들이 함께 공부하고 실천하는 평화공동체를 모색하는 공부모임을 진행하였다. 특별히 지난 9년간의 반평화적인 보수정권에서 촛불혁명을 통해 정권이 바뀐 상황에서 제기된 다양한 여성평화운동의 주제들을 여성평화담론 차원에서 다루는 새로운 시도로서 △ 동북아 평화를 위한 국제연대의 흐름 △ 변화된 북한사회와 여성, △ 군사주의적 분단체제에 녹아 있는 여성혐오, △ 통일교육의 새로운 접근으로서의 갈등해결 방법론 등의 주제에 대해 함께 성찰적으로 논의하고 여성평화운동의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4. 2017년은 본 회의 조직에 변화가 있었다. 지난 15년간 갈등해결센터에서 활동하던 회원들 일부가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분리해 나갔으며, 이어 본 회의는 센터 설립 초창기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 평화통일을 전제로 무력분쟁과 갈등상황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갈등연구, 남북분단이 초래한 남남갈등에 대한 통일·평화 지향적 갈등해결 담론과 방법론 개발, 그리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와 실천 역량 발굴 과제를 다시 정비하기로 하였다.

5. 본 회의 올해 한 해 소수의 활동가, 제한된 실무역량을 통해서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한반도의 전쟁위기에 대응하고 평화를 만드는 여성의 역할이라는 책무를 담당해 왔다. 향후 지속가능한 여성평화운동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재정적, 조직적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Ⅱ. 2017년 사업 보고 및 평가

【1】 조직사업

1. 회 의

1-1. 총회

- 1) 역할: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임원의 선출 및 불신임, 단체(법인)의 해산 및 정관의 변경,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예산 및 결산의 승인, 사업의 기본 정책과 방향의 결정, 사업 계획 및 보고의 승인, 기타 주요한 사항을 결정한다.
- 2) 구성: 본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 하고, 소정의 가입절차를 거쳐 본회의 사업에 같이 활동하며 정기적으로 회비를 내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 3) 내용 : 2017년 사업계획 수립, 공동대표 및 임원 선출 등

4) 사업내용

(1) 정기총회

- 일시: 2월 9일(목) 18:00~21:00
- 장소: 여성미래센터 지하 교육장
- 성원보고: 재직회원 52명 중 참석 23명, 위임 7명, 총 30명
- 주요 내용: 2016년 사업 및 결산보고, 2017년 사업계획, 예산안 승인, 임원 변경, 조직 변경의 건

(2) 총회준비위원회

- 구성: 안김정애(위원장/본회 상임대표), 김정수(부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장), 신민시(활동가), 여혜숙(회계), 이덕경(서기), 정경란(본회 공동대표), 조영희(부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

① 1차 총회준비위원회

- 일시 및 장소: 11월 28일(화) 17:00~19:00, 여성교회
- 참석: 안김정애, 김정수, 신민시, 여혜숙, 이덕경, 조영희
- 내용: 전자 이사회 회의록 보고, 2017년 1월~11월 사업결과 보고, 12월 사업계획 점검

② 2차 총회준비위원회

- 일시 및 장소: 12월 22일(금) 20:00~21:00, 여성교회
- 참석: 안김정애, 김정수, 여혜숙, 이덕경, 조영희
- 내용: 1월~11월 사업결과 보고, 2017년 사업 총평안 검토, 2018년 사업기조, 방향 검토

③ 3차 총회준비위원회

- 일시 및 장소: 2018년 1월 8일(월) 18:00~20:00
- 참석: 안김정애, 김정수, 신민시, 이덕경, 조영희
- 내용: 2017년 사업 총평 검토, 2018년 사업기조, 방향 초안 검토, 결산안, 정관, 규정 검토

1-2. 이사회

- 1) 역할: 본회의 사업집행에 관한 심의기구로서,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위원회와 부설 기구의 설치, 정관의 변경 발의,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재산관리, 총회 부의 안건의 작성, 회원의 제명, 총회 위임 사항,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2) 구성

- 이사장: 김성은
- 이사: 김귀옥, 김선혜(7월 사임), 김정수, 김지영, 박현선, 안김정애, 여혜숙, 이나영, 정경란, 정현택(6월 사임), 조영희, 한정숙(존칭생략, 가나다순)

3) 회의

(1) 1차(44차) 이사회

- 일시 : 1월 18일(월) 18:00 ~ 20:00
- 장소 : 여성미래센터 2층 여성교회
- 참석 : 김성은(이사장), 김선혜(부설 갈등해결센터 소장), 안김정애(대표), 여혜숙, 한정숙
- 배석 : 신민시(활동가)
- 내용 : 2016년 사업보고 및 평가, 2016년 결산보고 및 평가, 2016년 이사회 평가, 갈등해결센터의 정체성과 확장상을 위한 조직 논의 제안 및 추진(안) 등

(2) 2차(제45차) 이사회

- 일시 : 6월 19일(월) 18:00~21:00
- 장소 : 평화문
- 참석 : 김성은, 김선혜, 김정수, 박현선, 안김정애, 여혜숙
- 배석 : 권상희, 명희, 신민시

- 내용 : 조직발전특별위원회 회의 보고에 관한 건, 운영위원회 구성, 이사 사임

(3) 3차(제46차) 임시이사회

- 일시 : 월 24일(월) 19:00~21:00
- 장소 : 광화문
- 참석 : 김성은, 김정수, 김지영, 박현선, 안김정애, 여혜숙, 이나영, 조영희
- 배석 : 신민시
- 내용 : 이사 변경, 부설기구 갈등해결센터 차후 구성과 운영 계획, 3/4 분기 계획

(4) 4차(47차) 임시이사회

- 일시 : 10월 26일(목) 20:00~21:00
- 장소 : 여성교회
- 참석 : 김성은, 안김정애, 김정수, 박현선, 여혜숙
- 위임 : 김귀옥, 김지영, 이나영, 정경란, 조영희, 한정숙
- 배석 : 신민시
- 내용 : 사단법인 '갈등해결과 대화' MOU 체결

1-3. 운영위

1) 역할: 본회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상설 의사결정기구로서, 총회와 이사회에서 위임한 주요사업과 기타 정관에 명시한 본회 목적사업과 관련한 일상적 업무를 관장하고 집행한다.

2) 구성 : 공동대표, 각 위원회와 부설기구의 장, 서기, 회계, 사무처장 등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 : 안김정애 (상임대표)
- 위원 : 안김정애(상임대표), 김선훈(부설 갈등해결센터소장), 김정수(부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장), 전상희(부설 갈등해결센터 부소장), 정경란(국제협력위원장)
- 위원(8월 10일 자로 일부 변경) : 안김정애(상임대표), 김정수(부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장), 정경란(공동대표/국제협력위원장), 조영희(부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연구위원), 여혜숙(회계), 이택경(서기),

3) 회의

(1) 제1차

- 일시 및 장소 : 4월 20일(목) 18:00, 평화여성회 사무실
- 참석 : 안김정애, 김선훈, 전상희, 신민시(배석)

- 내용: 사무국, 위원회, 부설기구 사업보고, 1~3월 회계결산보고, 2017년 운영위원회 운영방식, 총회 위임 사안/총회 회의록 검토, 정기 총회 평가, 4~5월 사업계획 검토

(2) 제2차

- 일시 및 장소: 8월 10일(목) 18:00, 여성교회
- 참석: 안김정애, 김경수, 조영희, 여해숙, 이덕경, 신민시(배석)
- 내용: 새로운 운영위원회 구성, 부설기구 갈등해결센터 차후 구성과 운영 계획, 3/4분기 계획, 사무실 공동 이용

(3) 제3차

- 일시 및 장소: 9월 22일(금) 20:00
- 참석: 안김정애, 김경수, 신민시(배석)
- 내용: 사) 갈등해결과 대화와 MOU체결안

(4) 제4차

- 일시 및 장소: 11월 13일(월) 18:00, 여성교회
- 참석: 안김정애, 김경수, 여해숙, 이덕경, 신민시(배석)
- 내용: 2018 총회준비위원회 구성, (사)갈등해결과 대화와의 MOU 관련 정리, 부설 갈등해결센터의 구성과 사업방향

1-4. 사무국회의

- 1) 역할 : 본회 사업집행에 필요한 사안을 논의, 진행사업 점검 및 공유 등을 진행한다.
- 2) 구성 : 공동대표, 실무집행 책임자, 실무활동가 등으로 구성한다.
 - 위원 : 안김정애(상임대표), 신민시(활동가)
- 3) 내용 : 주 1회 혹은 격주 1회 시행. 일정 및 업무 공유, 주간 사업 논의.
- 4) 일시: 1/9, 1/31, 2/16, 3/6, 3/20, 4/4, 4/17, 5/8, 5/30, 6/14, 7/4, 8/8, 8/21, 9/26, 10/17, 11/14, 11/27

2. 위원회

2-1. 국제협력위원회

1) 역할: 여성과 평화의 관점에서 국제협력력을 추진한다. 무장갈등예방글로벌파트너십(GPPAC)과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관련 국제연대를 진행한다.

2) 구성

- 위원장 : 정경란

3) 활동

(1)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유엔안보리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 관련 활동

①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관련 청문회 국회 질의 요청 및 질의서 작성

- 일시: 6월 22일

- 작성 및 조직: 정경란

- 내용: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여성평화외교포럼',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국회의원에게 '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유엔 안보리결의 1325 이행을 위한 대한민국 국가행동계획'과 관련하여 질의를 요청하기로 함.

- 평화여성회에서 질의서를 작성하고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 정춘숙 의원을 섭외하여 정춘숙 의원이 정현백 후보자에게 서면 질의하여 서면 답변을 받았음.

- 질의 내용:

▶ '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유엔 안보리결의 1325호'지식 정도

▶ 주무부처로서 여성가족부의 국가행동계획 이행 정도

▶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 수용 여부

▶ 향후 국가행동계획 재점검 과정에서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 행동계획에 대한 예산 책정, 국가행동계획 이행 평가 지표(index) 개발을 포함한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를 구체화할 의지가 있는가 등

- 정현백 후보자 답변:

▶ 국가행동계획은 지난 '14년 수립된 이후 매년 이행성과를 공유하고, 8개 부처기관 및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점검회의를 연 2회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국가행동계획 수립 후 3년이 경과('17.5.)함에 따라 관계기관 및 시민 사회의 협의를 거쳐 동 행동계획을 재점검·보완하고, 내실있는 추진과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검토하겠습니다.

②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유엔안보리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 관련 공청회

- 일시 및 장소: 11월 22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층 대강당

- 참석 및 의견 발표 : 정경란
- 내용: 여성가족부가 주최한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유엔안보리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 관련 공청회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 이행평가와 향후 추진방향”을 제안하고 이 내용을 정리해 평화여성회 홈페이지에 게재함.

③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 이행을 담보하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을 환영한다’ 논평 작성

- 일시: 11월 27일
- 작성: 정경란
- 내용: 2017년 11월 24일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엔 안보리 국가행동계획 이행을 촉진하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이를 환영함.

(2) GPPAC 관련 활동

① GPPAC 동북아시아 코디네이터와 만남

- 일시 및 장소: 5월 26일, 강북구 커피숍
- 참가: 정경란
- 내용: 문재인 정부 집권으로 남북관계 발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GPPAC의 향후 방향과 관련하여 논의함.

2-2. 조직발전특별위원회

1) 구성 배경

평화여성회 제 21차 정기총회 의결 - ‘평화여성회는 부실 갈등해결센터를 조직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고 확장성을 위해 별도의 조직으로 분리하는 것이 필요성에 동의하며, 이에 대한 세부내용은 조직발전특위를 구성해서 논의하기로 하다.’ 에 기초함.

2) 위 원

안김정애(위원장), 김선혜, 김정수, 명희, 박수선, 여혜숙, 전상희, 정경란, 조영희

3) 진행 경과

(1) 회 의

① 사전회의

▶ 일 시 : 2017년 3월 4일 5시

- ▶ 장 소 : 광화문
- ▶ 참석자 : 안김정애, 김선혜, 김정수, 박수선, 여혜숙, 전상희, 조영희
- ▶ 기 록 : 신민시
- ▶ 논 의 :
 - 총회 의견사항 확인
 - 조발특위 위원 구성
 (평화여성회 전 현직 대표와 갈등해결센터 전 현직 소장단 외 1인)

② 1차 회의

- ▶ 일 시 : 2017년 3월 28일(화) 17:00
- ▶ 장 소 : 여성미래센터 2층 여성교회
- ▶ 참석자 : 안김정애, 김선혜, 김정수, 명희, 박수선, 여혜숙, 전상희, 조영희 (위원 : 정경란)
- ▶ 기 록 : 신민시
- ▶ 안 건 :
 - 조발특위에서 다뤄야할 사항 논의
 - 갈등해결센터 내부 논의 결과 공유

③ 2차 회의

- ▶ 일 시 : 2017년 4월 24일(월) 18:10~22:30
- ▶ 장 소 : 여성미래센터 2층 여성교회
- ▶ 참석자 : 안김정애, 김선혜, 김정수, 명희, 박수선, 여혜숙, 전상희, (위원: 정경란, 조영희)
- ▶ 기 록 : 이고은
- ▶ 안 건 :
 - 타 기관의 분리 독립 사례 조사 보고
 - 분리독립 관련 사항 논의(분리방법, 회원, 공간, 사업영역, 재정)

④ 3차 회의

- ▶ 일 시 : 2017년 6월 1일 목요일 저녁 6시30분

▶ 장 소 : 여성미래센터 2층 여성교회

▶ 참석자 : 안김경애, 김신혜, 김정수, 명희, 박수선, 여혜숙, 전상희, 조영희
(위임: 정경란)

▶ 기 록 : 이고은

▶ 안 건 :

- 지적재산권

- 이사회 날짜 결정(2017년 6월 19일)

- 이후 논의 : 상임대표와 갈등해결센터 소장을 중심으로 실무협의를 하되, 필요시 조발특위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 조발특위 논의 내용을 기반으로, 이사회(제47차, 10월 26일)에서 아래와 같이 결의함

1. (사)'평화를만드는여성회'는 (사)'갈등해결과 대화' 일부 구성원들이 (사)'평화를만드는여성회 부설 갈등해결센터'에 관여했음을 확인한다.

2. (사)'평화를만드는여성회'는 (사)'갈등해결과 대화' 홈페이지에 (사)'평화를만드는여성회 부설 갈등해결센터'의 일체의 연구·활동성과와 저작물에 관련된 내용을 게시할 수 없음을 확인한다.

3. (사)'평화를만드는여성회'는 부설 갈등해결센터 명의로 발표된 저작물 및 성과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사)'평화를만드는여성회 부설 갈등해결센터'에 있음을 확인한다.

4. (사)'평화를만드는여성회'는 부설 갈등해결센터의 저작물 및 성과물에 참여한 이들이 (사)'평화를만드는여성회'의 사전서면승인을 받아 개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5. (사)'평화를만드는여성회'는 (사)'갈등해결과 대화'가 (사)'평화를만드는여성회' 및 (사)'평화를만드는여성회 부설 갈등해결센터'와 관련이 없는 별도의 법인임을 확인한다.

3. 법인행정

3-1. 감사

- 1) 역할 : 본 회 사업과 재정을 감사한다.
- 2) 구성 : 사업감사 (태삼희 변호사), 회계감사 (윤수경 전 공동대표)
- 3) 결과 : 감사보고서 참조

3-2. 법인, 행정, 사무

- 1) 목표
 - 본 회 법인의 합리적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이룩한다.
 - 여성평화운동의 안정적 추진과 실천, 회원들의 활동을 지원한다.
- 2) 통일부 법인 업무
 - (1) 통일부 2016년도 법인현황 제출
 - 일시 : 3월 9일
- 3) 법인 세무 업무
 - (1) 2016년 기부금 내역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
 - 일시:1월 17일
 - (2) 4대보험 취득신고
 - 일시: 1월 25일(신민시) 3월 7일(신민시) 3월 14일(이고은)
 - (3) 4대보험 탈퇴신고
 - 일시: 2월 15일(이지혜) 2017년 3월 7일(신민시)
 - (4) 피직금 지급
 - 일시: 2월 21일
 - 대상: 이지혜 (2016년 2월~2017년 1월 근무)
 - (5) 동기이사 변경
 - 일시: 2월 21일
 - (7) 산재보험, 고용보험, 2016년도 보수총액신고
 - 일시 : 3월 15일
 - 대상 : 김선혜, 전상희, 김지호, 정유미, 이지혜, 오주연, 유지연

- (8) 건강보험 2016년도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신고
 - 일시: 3월 24일
- (9) 기부금모금액과 활용실적 공개
 - 일시: 3월 31일
- (10) 16년도 12월 결산 공익법인 출연재산보고서 제출
 - 일시: 3월 31일
- (11)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 일시: 5월 2일
- (12) 2016년 귀속 소득총액 신고
 - 일시: 5월 30일
- (13)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 신고
 - 일시 : 3월 31일
 - 신고처 : 국세청 홈택스
- (14) 2016년 귀속 소득총액 신고
 - 일시 : 2017년 5월 30일
 - 대상 : 김선훈, 전상희
- (15)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
 - 일시 : 2017년 6월 30일
- (16) 퇴직금정산
 - 일시 : 9월 27일
 - 대상 : 김선훈, 전상희

4) 행정 업무

- (1) 오즈메일러 사용분 결제(6개월)
 - 기간 : 2017년 9월 23일 ~ 2017년 3월 22일
- (2) dropbox 결제(1년)
 - 기간: 2017년 11월 7일~2018년 11월 6일

【2】 평화·통일 사업

〈2017년 사업 계획안〉

1. 평화여성의 창립 20주년 행사

2. 한반도 평화 조성을 위한 활동

2-1 '2017 여성평화걷기'를 통해 지속적인 한반도 문제 알려내기, 평화와 상생, 생명을 기치로 한 한반도 평화통일안 제시

2-2 평화협정 체결의 필요성 여론 조성

2-3. 대신의제 제시 활동

3. 남북여성교류 및 협력사업

3-1 남북여성의 교류 재개

3-2 지속가능한 만남 기획 실행.

4. 일상의 평화문화 확산 운동

1. 평화여성회 창립 20주년 행사

1-1. 창립 20주년 행사

1) 회의

- 구성: 여혜숙, 유은주, 김진희, 안김정애, 신민서
- 1차: 2월 15일(수), 15:00, 프로그램 구성, 역할 분담, 자리 배치 등
- 2차: 3월 9일(목), 행사 당일 역할 분담, 사진 전시 공간, 공간 꾸미기
- 3차: 3월 27일(월), 예산검토, 진행 사항 논의, 전체 프로그램 논의.

2) 행사

- 일시 및 장소: 3월 27일(월) 18:00-20:00 서울NPO지원센터 대강당 "품다"
- 대상 : 기존과 신규 등 전 회원, 창립 멤버 등
- 내용 : 20년의 역사 돌아보기, 미래의 비전 만들기, 활동보고, 창립 초기 활동상 증언, 토크쇼
- 참석: 59명
- 프로그램

| 시간 | 프로그램 | 진행내용 |
|-------|------|------|
| 06:00 | 식사 | |

| | | |
|-------------|-----------------------|---|
| 07:00 | 바자회 | |
| 07:00~07:10 | 인사 | 김성은, 안김정애, 김선희, 김정수 |
| 07:10~07:20 | 축사 | 박원순 서울시장, WCD (영상) 백미순(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최형민(대전 평화여성회) |
| 07:20~07:25 | 참석자 소개 | 테이블 뎀 소개(여신협), 김형환 (인권정책연구소 소장) |
| 07:25~07:30 | 20년의 발자취 | 20년간 활동영상 |
| 07:30~07:40 | 축하공연 1 | 한정숙 이사 |
| 07:40~ | 토크쇼: 평화여성회 20년을 이야기하다 | |
| | 20가지 평화이야기 | - 안김정애, 김정수 |
| | 내 인생의 키워드 | - |
| | 경품과 퀴즈 | |
| 08:30~08:45 | 경매 | 개성 자수와 글씨 작품 등 |
| 08:45~09:00 | 축하공연 2 | 평화가무단 |
| 09:00 | 마무리 | |

2. 한반도 평화 조성을 위한 활동

2-1. 2017 여성평화결기

- 주제: 전쟁 없는 한반도! 생명 평화 상생의 한반도를 기원하는 평화결기

- 주최: 2017 여성평화결기조직위원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YWCA연합회,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너머서, 두레방, 어린이어깨동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예류메니칼청년네트워크, 새로운백년을여는통일여성, 세계교회협의회, 이화민주동우회, 전국여성연대, 전더정치연구소여성세션, 참여연대, 천주교의정부교구민족화해위원회-민족화해센터, 평화통일연대, 평화어머니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사건가협회,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학자협의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옛살사회복지협의회)

- 주관: 경기여성단체연합 (실무단체: 고양파주여성민우회)

1) 회의

- 실행위원회의 구성: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YWCA연합회, 평화어머니회, 평화통일연대, 경기여성단체연합, 고양파주여성민우회, 문화세상이프토피아
- (1) 1차 준비 회의: 2월 3일(금), 조직위구성방안, 기획안 초안 논의, csw회의를 위한 제안
- (2) 2차 준비 회의: 2월 28일(화), 사진전시 및 실무단체 진행보고, 조직위 참여단체 추가
- (3) 3차 준비 회의: 3월 22일(수), 조직위 참여단체 1차 확정명단, 경기도 지원관련 보고, 여성평화심포지엄 논의
- (4) 4차 준비 회의: 4월 13일(목), 진행보고, 여성평화걷기 당일 행사 프로그램 논의, 추진위원 구성방안
- (5) 평가회의: 5월 10일(수), 2017 여성평화걷기 및 심포지엄 평가, 이후 대책 논의

2) 행사

- 일시 및 장소: 5월 27일(토) 09:00~13:00,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
- 참석: 김성운, 안김정애, 신민시, 조명희, 여배숙, 김정수, 한산희
- 주최: 2017여성평화걷기조직위원회
- 주관: 경기여성단체연합 (실무단체: 고양파주여성민우회)

| | |
|-------------|------------------------------|
| 09:00~10:00 | 등록 및 접수 |
| 10:00~10:30 | 평화의 열림 |
| 10:30~12:30 | 평화걷기 (전체코스 6.5km, 거북이코스 4km) |
| 12:30~13:00 | 평화의 어울림 |

3) 2017 여성평화심포지엄

- 주제: 전쟁 없는 한반도와 동북아를 위한 여성의 역할
- 주최: 2017 여성평화걷기 조직위원회
- 주관: 문화세상이프토피아,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어머니회, 평화통일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WCA 연합회

(1) 회의

- 가. 1차회의 : 4월 13일(목), 심포지엄 참가단체 확인, WCD측 참가자 확인, 라운드 테이블 토론 주제 논의
- 나. 2차회의 : 5월 10일(수), 라운드 테이블 토론 주제 확정, 행사 당일 프로그램 논의

(2) 행사

- 일시 및 장소: 5월 24일(수), 14:00,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 참석: 김성은, 김정수, 여혜숙, 안김정애, 신민시, 박현선

| 시간 | 프로그램 |
|-------------|---|
| 14:00~14:30 | 1부 개회식 (사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안김정애) - 개회사 (공동대표 김성은, 최병일) - 축사(이미경 전 의원, 이명애 YWCA 회장, 최여영 WCD 실행위원) - 기조연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 김정수 원장) |
| 14:40~15:50 | 2부 라운드 테이블 주제 발표 (사회: 한국YWCA연합회 장미란) - 여성-평화-경제 넘기 (전라정치연구소 여,세,연 이진옥) - GPPAC, Peace boat, Ulaanbaatar Process Conference for Northeast Asian Peace (국제NGO퍼스보트이사 Meri Joyce) - 분단과 전쟁의 한반도, 여성의 삶과 희망 (한성대학교수 김귀옥) - 왜 평화담론의 확산이 시급한가? (평화어머니회 고은광순) - 평화와 종교 그리고 여성 (평화통일연대 윤은주) - DMZ내 남북여성 평화생태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안김정애) - 마음의 38선을 없애는 문화소통의 지속가능한 교류방안 (문화세상 이프토피아 최인숙) |
| 15:50~17:30 | 3부 라운드 테이블 진행 |
| 17:30~17:50 | 4부 라운드 테이블 논의 내용 공유 |
| 17:50~18:00 | 5부 폐회식(사회: 세계YWCA협회 한미미) |

2-2. 대선의제 제시 활동

- 1) 한국여성단체연합 대선전략 간담회
 - 일시 및 장소: 3월 30일(목) 14:00 여성미래센터 교육장
 - 참석: 안김정애

- 내용: 통일·평화 부문

- ① 5-24 조치 해제와 THAAD 배치 철회, 평화협정 체결
- ② 유엔안보리 1325 결의안 국가행동계획의 실효성 확보 방안 추진

2) 한국여성단체연합 개헌 TF 6차 회의

- 일시 및 장소: 4월 10일(월) 14:00 여성미래센터 청산홀
- 참석: 안김정애
- 내용: 개헌 내용에 들어갈 '평화권' 등 논의

2-3. 사드반대, 전쟁반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여성행동

1)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사드반대 전쟁반대 세계여성행동' 실무준비회의

- 일시 및 장소: 2월 23일(목) 14:00
- 내용: '세계여성의 날 기념 사드반대 전쟁반대 세계여성평화 행동' 기획

2) 사드반대 전쟁반대 세계여성행동

- 일시 및 장소: 3월 8일(수) 14:00 세종로

3) 사드반대 전쟁반대 세계여성행동 2박 3일

- 일시 : 8월 13일~8월 15일
- 내용: 소성리, 김천에서 사드 반대 촛불 집회, 평화로에서 제5차 세계 일본군'위안부' 기림 일 맞이 집회, 8.15 여성대회 진행

2-4. 한미군사훈련 반대, 트럼프 방한 반대 여성행동

1) 준비회의

- 일시 및 장소: 10월 17일(화), 여성교회
- 참석: 안김정애, 신민서
- 참가단체: 전국여성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평화어머니회, 여성-엄마 민중당
- 내용: 이례적으로 진행되는 한미 군사훈련을 반대하고, 11월 예정되어 있는 트럼프 방한을 반대하기 위한 여성행동 계획 논의

2) 한미군사훈련 반대, 트럼프 방한 반대 여성행동 선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10월 19일(목), 세종대양상 앞
- 참석: 안김정애, 신민서
- 주최단체: 사드반대 전쟁반대 세계여성행동

3) 반전평화음악회

- 일시 및 장소: 10월 26일(목), 광화문KT 앞
- 참석: 신민시
- 참가단체: 전국여성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평화어머니회

4) 2차 기자회견 및 평화의 춤 플래시몹

- 일시 및 장소: 10월 21일(토), 광화문 광장
- 참석: 신민시
- 내용: 세계 각국의 언어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평화의 춤 플래시몹

5) NO트럼프, NO WAR 평화시국회의 "전쟁광, 무기장사꾼 트럼프는 오지 마라!"

- 일시 및 장소: 2017년 11월 1일(수) 오후 1시, 광화문광장
- 참석: 안김정애

6) NO트럼프, NO WAR 공동행동

(1) 전국동시다발범국민대회

- 일시 및 장소: 11월 4일(토), 종로르메이에르
- 참석: 신민시

(2) 헤이 미스터 프레지던트! NO WAR! 평화염원 촛불문화제

- 일시 및 장소: 11월 7일(화) 오후 5시 30분, 광화문 광장
- 참석: 안김정애

(3) 범국민촛불

- 일시 및 장소: 11월 7일(화), 광화문광장
- 참석: 안김정애

(4) 트럼프국회연설저지행동

- 일시 및 장소: 11월 8일(수) 9시~11시, 국회 앞
- 참석: 안김정애, 신민시

2-5. 한반도평화협정검토회

- 일시 및 장소: 6월 27일~7월 8일, 유럽 6개국 주요 단체 방문
- 참석: 김성은
- 내용: 평화협정 캠페인 차 NCC화해와통일위원회와 유럽 6개국 주요단체 방문, 라프치히 세계개혁교회연맹에 참석한 북한대표 4명과 협의 진행.

2-6. 평가

올해에도 여성평화결기가 꾸준히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는 여성-평화-통일단체들과 함께 5-24 기념 심포지엄과 여성평화결기를 진행하였다. 대선 날짜가 바뀌면서 문재인 정부에게 평화통일 정책의 요구안을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등 작년보다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었다.

지원이 축소된 상황에서도 걷기 행사를 조직위의 활동으로 무사히 치러냈고, 심포지엄에서는 참가자들의 토론 시간을 보장하여 강연식 행사보다 참가자들과 소통하는 행사로 진행하였다.

2년째 동일한 코스로 참가자의 관심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내년에는 걷기 코스를 새롭게 개발하는 과제와 걷기 행사 외에도 참가 단체들의 부스 홍보를 통해 참가자들의 더 폭넓은 참여를 보장하는 새로운 형식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8년에는 분단정권 70주년과 미군 장기 하에서 통일정부수립운동도 한 목표였던 제주 4·3 70주년을 맞이하여 남북해외 여성들이 분단극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함께 걷는 행사가 기획되었으면 한다.

또, 국내외 평화통일 사안에 끊임없이 연대하고 국제연대의 끈을 이어갔다. 대선을 앞두고 의제 제시 논의에 함께했고, 사드배치를 실질적으로 막아내기 위한 활동에도 함께했다. 국내 여성·평화·통일단체들과의 연대의 끈을 계속 이어나가는 데 주력하였다.

새로 출범한 18기 '민주평화통일위원회 자문회'에 회원들이 대거 참여하여 평화통일에 여성의 목소리를 높이는데 함께 하였다.

【3】 정보·홍보 사업

〈2017년 사업 계획안〉

1.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관리, SNS 평화활동 등
2. 소식지 발행 및 온라인 소식지 발송
3. 메일을 통해 본 회 소식 전달

1. 온라인소식지 발송

- 1) 온라인 소식지 1월호 발송

- 일시: 2017년 1월 11일
- 내용: 활동보고 및 알림, 후원회비 납부자 명단보고 등

2) 정기총회 안내

- 일시: 2017년 1월 31일
- 내용: 제21차 정기총회 안내

3) 온라인 소식지 2월호

- 일시: 2017년 2월 7일
- 내용: 여성단체 대표자 초청 신년이사회, 11~13차 촛불집회, 21차 정기총회 알림

4) 여성평화수다방 알림

- 일시: 2017년 3월 2일
- 내용: '나, 다니엘 블레이크' 함께 보기

5) 20주년 후원행사 알림 및 바자회 물품 후원

- 일시 : 2017년 3월 6일 / 2017년 3월 9일

6) 온라인 소식지 3월호

- 일시: 2017년 3월 13일
- 내용: 21차 정기총회 보고, 300인 대표자 서울 평화회의, 20주년 후원행사 알림

7) 20주년 후원행사 감사인사

- 일시: 2017년 3월 30일

8) 온라인 소식지 4월호

- 일시: 2017년 4월 10일
- 내용: UN CSW 회의 참석 보고, 소성리 평화버스 참석, 2017 여성평화전기 기자회견 알림

9) '평화행동에 함께해주세요!' 긴급 발송

- 일시: 4월 24일
- 내용: <우리는 평화 대통령을 원한다> 신문광고 모금, <2017여성평화전기> 신청, 추진위원 모집

10) 5월호 발송

- 일시: 5월 16일

- 내용: 여성평화걷기 언론초청 간담회, 대선후보 통일대북정책 책임자 정책 토론회, 사드 도
독 반입 규탄 집회, 사드 도독 반입 규탄 행동 보고

11) 6월호 발송

- 일시: 6월 14일

- 내용: 1차 소성리 평화회의, 2017 여성평화걷기, 여성평화심포지엄, 시민평화포럼- 새정부
의 평화통일정책

12) 조직 변화 관련 소식 발송

- 일시: 7월 3일

- 내용: 갈등해결센터의 분리 독립

13) 7월호 발송

- 일시: 7월 6일

- 내용: 김포대향문화제, 전민족대회 남북해외여성위원회 결성식 기자회견, 군사주의에 반대하
는 세계여성평화네트워크 오키나와 9차회의

14) 8월호 발송

- 일시: 8월 9일

- 내용: 박연민OUT 기자회견, 여성가족부-여성단체 간담회, 정전협정 64주년 기자회견, 등

15) 9월호 발송

- 일시: 9월 12일

- 내용: 제주평화대행진, 여성평화행동, 한국여성단체연합 페미니즘 캠프, 울란바토르 회의,
여성평화공동체 만들기 프로젝트 홍보

16) 여성평화공동체 만들기 프로젝트 홍보

- 일시: 9월 14일

17) 여성평화공동체 만들기 프로젝트 홍보

- 일시: 9월 18일

18) 故 조영삼 님 시민사회장 장례위원 감사인사

- 일시: 9월 27일

- 내용: 故 조영삼 님 시민사회장 장례위원에게 보내는 유가족들의 감사인사

19) 10월호 발송

- 일시: 10월 11일

- 내용: 2017 한반도 평화회의, 평화정책 세미나, 민주평통자문위 여성위 상임위 워크숍, 10.4선언 10주년 평화통일대회

20) 여성평화공동체 만들기 프로젝트 2회차 모임 홍보

- 일시: 10월 17일

21) 11월호 발송

- 일시: 11월 13일

- 내용: 독일 ARD방송 인터뷰, 일본 도시샤 대학 학회 발표, 아멕스 저항행동, 18기 민주평통자문회의 전체회의 참석, 여성평화공동체프로젝트 3회차 홍보

22) 12월호 발송

- 일시: 12월 11일

- 내용: 평화활동가 대회 '평화에게 기회를', '적폐정산.사회대개혁.반전평화.촛불헌법 정취' 범국민대회, 여성평화공동체프로젝트 3회차 모임 보고, NO 트럼프 공동행동

1-2. 평가

홈페이지 관리, SNS계정 관리, 온라인 소식지와 공지메일 발송이 꾸준히 이루어졌다. 평화여성회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꾸준한 소식전달로 페이지를 정기 구독하는 인원이 22명 증가하였다.

【4】 회원 사업

〈2017년 계획안〉

회원 간의 소통과 활동의 정보교류를 통해 회원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다양성과 역량을 확대 강화한다.

1-1. 평가

회원사업으로 2년동안 진행되었던 여성평화수다방이 활동가가 줄어들면서 안정적으로 진행

되지 못하였다. 회원과의 접촉면을 넓히기 위해서, 현황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재정 사업

<2017년 계획안>

1. 꽃감 판매 등
2. 창립 20주년 후원의 밤

1. 꽃감 판매 등

- 총 판매금액 : 1,433,000
- 수익 : 206,500

2. 창립 20주년 후원의 밤 (후원의 밤 행사 - 위의 프로그램 참조)

- 후원자 및 참석자: 59명
- 수익: 5,059,000
- 지출: 1,573,356
- 수입: 3,485,644

【6】 연대 및 협력 사업

<2017년 계획안>

1. 국내 상설 연대

- 1-1. 한국여성단체연합 : 총회, 이사회, 사무국장 연석회의, 여성미래센터 운영위원회,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한국여성대회 준비위원회
- 1-2.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대의원 총회, 수요시위 주관
- 1-3.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 여성본부
- 1-4.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 대의원회, 여성위원회
- 1-5. 시민평화포럼

2. 국내 사안별 연대

- 2-1. 핵없는 세상을 위한 시민공동행동
- 2-2.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반대 전국대책위원회

2-3. 사드배치 반대 전국행동

3. 국제 연대

3-1. 무장갈등예방글로벌파트너십 GPPAC(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3-2. WomenCrossDMZ

3-3.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여성평화네트워크 IWNAM (International Women's Network Against Militarism)

1. 국내 상설 연대

1-1. 한국여성단체연합

1) 정기총회

- 일시 및 장소: 1월 12일(목) 09:00 여성프라자
- 참석: 안김정애, 신민시, 이지혜(위임)
- 내용: 활동보고, 여성연합의 비전과 운동방향 모색, 대표단 선출

2) 사무국장 연석회의 (참석: 신민시)

가. 1차

- 일시 및 장소: 2월 14일(화) 11:00 여성미래센터 1층 소방방
- 내용: 활동공유와 논의,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3회 한국여성대회, 31차 정기총회 평가

나. 2017년 여성운동 아카데미 & 2차 사무국장 연석회의

- 일시 및 장소: 6월 9일(금) 09:00, 부산 해운대 골든베이펜션
- 내용: 활동공유와 논의, 성평등추진체계(안) 공유, 기타 안전

다. 3차

- 일시 및 장소: 9월 5일(화) 13:00, 포항여성회
- 내용: 개천 관련 지역 및 단체 활동 보고 및 논의

3) 2017 페미니스트 광장 <페미니스트가 민주주의를 구한다>

- 일시 및 장소: 3월 4일(토) 13:00, 보신각
- 참석: 안김정애, 신민시, 여혜숙, 조영희, 김선혜, 전상희, 박수선, 김진희, 이고은
- 내용: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 낙태죄 폐지, 성별임금격차 해소, 여성대표성 확

내, 차별금지법 제정

4) 제33회 한국여성대회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 일시 및 장소: 3월 8일(수), 서울시청 다목적홀
- 참석: 김성은, 신민서
- 내용: 대회사와 참석자 소개, 성평등 걸림돌 발표 및 디딤돌 발표와 시상, 올해의 여성운동상 발표와 시상, 3.8 여성선언, 성평등마크 - 19대 대선주자들의 성평등 정책 발표

5) 개헌 TF 6차 회의

- 일시 및 장소: 4월 10일(월), 18:00
- 참석: 안김경애

6) 여성정책협약식

- 일시 및 장소: 5월 2일(화) 10:00, 여성미래센터 청산홀
- 내용: '19대 대통령에게 바란다' 여성정책 과제 전달

7) Herv: Her + Story + Vision '페미니스트가 만드는 세상' 페미니스트 정치 포럼

- 일시 및 장소: 6월 16일(금) 15:00, 스페이스노아 커넥트홀
- 내용: '촛불 혁명, 대선, 그리고 페미니스트 민주주의' 강연, '일상-정치-페미니즘: 우리들의 이야기' 의제별 발표 및 모듬 토론

8) '문재인 정부의 성평등 정책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여성계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7월 7일(금), 11:00, 세종문화회관 앞
- 내용: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의 실질적 총괄조정기능 보장, 성평등을 국정 중점과제로, 동수 내각 실현, 공직인사 검증 기준에 성평등 관점 추가를 요구함.

9) 2017 한국여성단체연합 페미니즘 캠프 '2017 여성운동, 무엇을 할 것인가?: 탐색, 숙고, 행동'

- 일시 및 장소: 8월 24~25일 여성프라자
- 내용: 페미니스트의 역사적 계보, 당대 여성운동의 좌표그리기, 이슈별 토론(낙태, 혐오와 차별, 노동/복지, 대표성, 국제)

10)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전라수립을 위한 집담회

- 일시 및 장소: 10월 12일(목) 10:30,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안벨라홀
- 내용: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논의 경과와 정책

11) 여성연합 성평등 개헌 TF(가칭) 1차 회의

- 일시 및 장소: 10월 24일(화) 18:30, 여성미래센터 청산홀
- 내용: 활동 및 일정 공유, 여성연합 개헌TF구성의 건, 젠더 관련 개헌(안) 정책 정리의 건 등

12) 한국여성단체연합 30주년 기념 북토크

- 일시 및 장소: 7월 5일(수) 18:00 창비 서교빌딩

13) 한국여성단체연합 30주년 후원의 밤

- 일시 및 장소: 9월 18일(월) 18:00, 여성프라자

14) 여성가족부 장관 오찬

- 일시 및 장소: 11월 15일(수), 12:00, 여성미래센터

15) 한국여성단체연합 이사회

- 일시 및 장소: 11월 15일(수), 14:00, 여성미래센터

16) 국회 여가위 위원장 면담

- 일시 및 장소: 11월 16일(목), 11:30,

1-2. 한국정신대대책문제협의회

1) 2017년도 정대협 총회(대표자회의)

- 일시 및 장소: 2월 13일(월) 15:00 정대협 교육관
- 참석: 안김정애

2) 2015한일합의 2년 외교부 2015한일합의 검증 TF 발표에 대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12월 28일(목) 16:00 외교부 앞
- 참석: 안김정애, 신민서, 안지영

1-3. 6·15 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담당

6-15 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여성본부 공동대표 : 안김정애

1) 회의

(1) 6-15여성본부 총회준비위원회

- 일시 및 장소: 1월 16일(월), 15:00-17:00 히스토리홀
- 참석: 안김정애

(2) 6-15여성본부 정기총회

- 일시 및 장소: 1월 19일(목) 여성미래센터 교육장
- 참석: 안김정애, 신민서
- 내용: 2016년 감사보고, 2016년 사업보고 및 평가, 2016년 결산보고 안, 임원선출 안, 2017년 사업계획 안, 2017년 예산 안, 기타

(3) 6-15여성본부 1차 회의

- 일시 및 장소: 2월 23일(목) 10:00 히스토리홀
- 참석: 안김정애

(4) 2차회의(대표자, 집행책임자)

- 일시 및 장소: 4월 5일, 히스토리홀
- 내용: '조국의 평화와 통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전민족대회 남북준비위원회' 회의 보고, 전민족대회 준비 관련, 대표자 회의결과에 따른 여성본부 사업계획 논의, 심양 실무 회의 보고

(5) 전민족대회 실행팀 회의

- 일시 및 장소: 5월 11일(목) 11:00 히스토리홀
- 내용: 전민족대회 조직위 확대, 사업계획서 논의

(6) 3차회의

- 일시 및 장소: 5월 18일, 히스토리홀
- 내용: 6.15여성본부 실무집행팀 논의 결과 보고, '조국의 평화와 통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전민족대회' 남북해외여성위원회 결성식 준비, 회원단체 간담회, 추진위원 확대

(7) 전민족대회 실행팀 회의

- 일시 및 장소: 5월 30일(화) 17:00, 히스토리홀

- 내용: 결성식 준비, '여성준비위원' 참여 상황 점검, 기타

(8) 4차회의(대표자, 집행책임자)

- 일시 및 장소: 6월 7일

- 내용: '6.15민족공동행사' 관련 상황 공유, '전민족대회' 남북해의여성위원회의 기자회견 준비

(9) 5차회의(대표자, 집행책임자)

- 일시 및 장소: 7월 24일

- 내용: 6-15남측위 회의 보고, 8-15광복 72돌 기념 민족공동행사, 공동행사 성사 환경 조성 위한 사업, 광복 72주년 기념 8-15민족통일대회(공동행사 무산시), 8월 사드반대 전 쟁반대 여성평화행진 구성 제안의 건, 7-27기자회견 참여의 건

(10) 6-15남측위 여성본부 7차 회의(공동대표+집행책임자)

- 일시 및 장소: 11월 29일(수) 11:00

- 내용: 평창-평화캠페인 건에 대한 논의, 여성본부 총회 준비

2) 사업 (참석: 안김정애, 신민서)

(1) 6-15남측위원회의 후원의 밤

- 일시 및 장소: 2월 22일(수) 18:00 세종홀

(2) 평창올림픽 아이스하키 테스트 대회 남북공동응원단

- 일시 및 장소: 4월 2일(일) 11:00/4월 3일(월) 16:30 강릉 하키센터/ 관동대 하키센터

(4) 대선 대응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5월 2일(화) 10:00, 광화문 세종대향상 앞

(5) '조국의 평화와 통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전민족대회 남북해의여성공동준비위원회' 결성식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6월 10일, 청계광장

(6) 6-15 공동선언 17주년 기념행사

- 일시 및 장소: 6월 15일(목) 18:30

(7) 8-15 범국민대회

- 일시 및 장소: 8월 15일(화) 15:30, 시청광장

(8) 10·4 선언 10주년 평화통일대회

- 일시 및 장소: 9월 27일(수), 광화문

(9) 한미군사훈련 중단!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12월 4일(월), 광화문

1-4.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1) 여성위원회 회의

- 일시 및 장소: 1월 25일(수) 10:30-12:30 민화협 회의실

- 참석: 안김정애

- 내용: 2016년 평가와 2017년 계획 논의

2) 여성위원회 1차 소위원회

- 일시 및 장소: 2월 15일(수) 10:00-12:00 민화협 회의실

- 참석: 안김정애

- 내용: 2017년 민화협 사업계획(안) 검토, 여성위 집중과 선택 사업 관련 논의

3) 대의원회의

- 일시 및 장소: 2월 24일(금) 14:00 한국은행협회

- 참석: 안김정애, 신민서

4) 여성위원회 2차 소위원회

- 일시 및 장소: 4월 12일(수) 10:00 민화협 회의실

- 참석: 안김정애

5) 2차 회의

- 일시 및 장소: 5월 17일(수), 14:00

- 내용: 여성평화통일간담회 추진(안) 검토

6) DMZ 내 여성평화생태마을 조성을 위한 여성평화통일간담회

- 일시 : 6월 14일(수), 09:00-18:00

- 내용 : 통선 마을, 강원도 철원군 근북면 유곡리 여성들과의 간담회

- 한국 현대사에서 기록되지 않고 있는 전쟁과 분단에 의한 여성의 삶과 경험을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기록하고 역사화함. 'DMZ 내 여성평화생태마을 조성'을 위한 사전 사업으로서 민통선 마을에 대한 이해를 높임.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는 여성단체의 참여와 연구 및 지역단체(철원역사연구소/철원공감)와의 협력으로 사업결과를 확장시켜 나갈

7) 민화협 여성위 2017여성평화회의(서울, 제주, 부산 여성단체 협력 '한반도 평화통일과 여성')

- 일시 및 장소 : 9월 19일(화)-9월 21일(목), 제주 리조트 마린
- 내용: 발표와 토론, 제주 여성영화제 참가, 4.3기념관 방문 등
- 참석 : 안김정애
- 발표 : Win-Win하는 남북한여성 프로젝트 - DMZ 여성평화생태마을 만들기

1-5. 시민평화포럼

1) '새 정부의 평화통일 정책' 포럼

- 일시 및 장소: 5월 17일(수) 15:00, 참여연대
- 참석: 안김정애

2) 시민평화포럼 - '한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전망'

- 일시 : 7월 18일(화), 14:00-17:00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 홀
- 참석 : 안김정애(사회)

3) 임시총회

- 일시 및 장소: 8월 22일(화) 16:00, 참여연대
- 참석: 안김정애

1-6. 평가

다양한 형태의 연대단위와 평화통일에 대한 꾸준한 의견 교환과 토론, 협력이 이루어진 한 해였으며, 2018년을 위한 제언과 활동방향에 대한 고민도 함께 나누는 장이었다.

2. 국내 사안별 연대

2-1. 사드배치반대전국행동

- 1) 국방부-롯데 사드 부지 교환 저지 여성계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1월 2일(월), 11:00-12:00 명동 롯데백화점 앞
- 2) 집행위원회
- 일시 및 장소: 1월 10일(화) 10:00 민주노총 회의실
- 3) 사드배치 반대 성주 여성투쟁위원회 간담회
- 일시 및 장소: 2월 18일(토) 17:00 광화문 광장 인근
- 내용: 사드배치 반대 여성투쟁위 활동 내용 공유 및 계획 논의
- 4) 사드 일박기 저지를 위한 평화버스
- 일시 및 장소: 3월 18일(토), 08:30 경북 성주 소성리
- 5) 사드 도둑반입 긴급 규탄 집회
- 일시 및 장소: 4월 26일(수), 19:00, 광화문 KT 앞
- 6) 사드배치 반대 규탄 대회
- 일시 및 장소: 4월 29일(토) 16:00, 영풍문고 앞
- 7) 소성리 평화회의
- 일시 및 장소: 5월 3일, 소성리 마을회관
- 참석: 김성은, 김정수, 조영희, 안김정애
- 8) 소성리 평화캠프
- 일시 및 장소: 5월 4일, 소성리
- 참석: 안김정애
- 9) 사드 반입 저지 행동
- 일시 및 장소: 9월 6일-7일, 소성리
- 참석: 안김정애, 신민시

2-2. 한반도 평화행동 모색을 위한 긴급회의

1) 한반도 평화행동 모색을 위한 긴급회의

- 일시 및 장소: 8월 2일,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참석: NCCK, YMCA, 시민평화포럼, 원불교, 참여연대, 평화3000, 평화네트워크, 평화여성회, 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
- 내용: 정세토론, 활동계획 논의
- 참석: 안김정애

2) 한반도 평화행동 모색을 위한 3차 회의

- 일시 및 장소: 9월 4일(일), 참여연대
- 참석: 신민시

3) 한반도 평화회의

- 일시 및 장소: 9월 19일 10:00,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 내용: 한반도 핵 갈등과 군사적 위기에 대한 시민사회의 진단과 정책제안, 공동행동 등에 관한 토론
- 제안단체: 녹색연합, 시민평화포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참여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3000, 통일맞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 참석: 신민시

2-2. 아덱스 저항행동 '웰컴 리셉션' 피켓팅

- 일시 및 장소: 10월 16일(일), 신논현
- 참석: 신민시
- 내용: 평화는 무기로 살 수 없다

2-3. 김포 대향제

- 일시 및 장소: 6월 3일(토) 오후 2시, 김포 조강나루터
- 주최단체: 김포여성외전화, 여민문화연구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여성외전화, 경기여성단체연합, 김포정실련, 김포아이클생협, 천교조김포지회, 김포시여성단체협의회, 평화어머니회, 김포티브이, 작은이의벗 친구교회 더불어함께 이주민센터, 김포차인회, 조승현 의원
- 참석: 총 100여명 / 본 회 참석 ; 김성은 (회의참석: 여혜숙)

- 목표: 1. 지역주민들과 대항의 정신을 실천한다. 2. 일본군 위안부를 주제로 하여 전쟁과 폭력의 여성피해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한다.

- 내용

사전행사: 소원목 쓰기

본 행사: 대표인사, 김원옥 할머니 인사, 노정선교수 발제, 경과보고, 발원문, 대항행사

2-4. 평가

본회는 가장 큰 국내 사안이었던 사드배치 반대를 중심으로 문제인 정부 출범 이후 시민사회의 전쟁반대 의지를 알리는 데 한 몫을 하였다.

3. 국제 연대

3-1.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국제평화여성 네트워크 IWNAM (Int'l Women's Network Against Militarism)

1) 1차 회의

- 일시 및 장소: 1월 24일(화) 15:00-17:00 인사동 지리산

- 내용: 2016년 평가와 2017년 계획 논의

- 참석: 안김정애

2) 2차 회의

- 일시 및 장소: 4월 7일(금) 12:00 인사동 아지오

- 내용: 오키나와 회의 참석자 확정 및 국가보고서 작성 등 책임집필자 선정

- 참석: 안김정애

3) 행사

- 참석: 안김정애, 신민서

| Date | Time | Schedule |
|--------|-------------|-------------------------------------|
| 6.22 목 | 11:00~12:00 | 기자회견 진행(도착한 해외 참가자) |
| | 12:00~17:00 | 나하 시내 박물관, 수리성, 시장 둘러보기 |
| | 18:30~21:00 | Opening Ceremony & Reception (개회행사) |

| | | |
|--------|-------------|--|
| 6.23 금 | 09:00-10:30 | Country/Nation Representatives Meeting (지역 담당자 회의) 영화상영: 호스트 내이션 |
| | 12:30-14:00 | International Peace Rally (오키나와 전쟁 종전일 행사) |
| | 17:00-18:00 | Dinner |
| | 18:00-21:00 | Country/Nation Presentation |
| 6.24 토 | 08:00-12:30 | Field Trip to Henoko (헤노코 방문) |
| | 15:00-19:00 | Working Group Meeting |
| 6.25 일 | 09:00-17:00 | Public Symposium & Thematic Small Group Meeting (Open to Public) |
| | | 09:00~12:30 지역보고 12:30~14:00 점심/ 영화상영 스물두번째 시간 14:17:00 주제별 그룹 토론 |
| 6.26 월 | 09:00-15:00 | Closing Ceremony (Conference Evaluation and Future Planning) (폐회 행사, 회의 평가 및 향후 계획 논의) |

3-2. 울란바타르 프로세스 3차 회의 및 몽골공화국 비핵화 선언 25주년 기념 국제회의

- 일시 및 장소: 8월 29일(화)~30일(수) / 8월 31일(목)~9월1일(금), 몽골 울란바타르 외교부
- 내용 : 동북아 GPPAC과 몽골 시민사회단체인 Blue Banner 공동 주관 회의에서 'Women's Peace Activities 2016-2017 발표
- 참석: 안길정애

3-3. '여성·전쟁·인권 학회' 2017 연차 대회

- 일시 및 장소 : 10월 22일(일), 일본 도시샤 대학
- 내용 : '한국여성의 안보 : 미군기지촌 성매매 피해여성의 입법·소송투쟁을 중심으로' 발표
- 참석 : 안길정애

3-4. 61st CSW(Commission on Status of Women) UN 61차 여성지위위원회

- 일시 및 장소 : 3월 13일~3월 24일, UN building and UN Church Center
- 참석 : 안김정애
- 내용 : 3월 14일, "Cost of Korean War : Impacts on Women's Security in the Region" 발표 일정(뉴욕시 폭설로 4월 19일, Webinar로 대체)
- 기타 :
 - 1) 3월 8일, New Jersey Rutgers University 38 Women's Day Workshop, "Women Mak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 Creating an Inter-Korean Peace Eco-Village in the DMZ" 발표.
 - 2) 3월 10일, UN Women meeting, 주UN한국대표부 공사참사관 meeting
 - 3) 3월 13일, Women Peacemaking on Korean Peninsula Roundtable and Action Plan
 - 4) 3월 13일, Council on Foreign Affairs

3-5. 평가

2012년 푸에르 리코 8차 회의 이후 5년만에 여러 지역 여성평화활동가들이 자리를 함께 한 미군사주의반대 국제여성평화 네트워크(IWNAME)는 다시 한 번 미 군사주의의 문제점과 폐해, 연대의 필요성 등을 확인하였고, update된 주한미군 주둔 하의 한반도문제를 알리고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다. 세 번째 개최되는 올란바타르 프로세스 회의는 남북 직접교류가 중단된 상태에서 북측의 대표단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자리였으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변화된 대북정책과 우리 여성평화시민사회의 적극적인 대북평화 메시지를 전달하는 장으로 활용되었다. 북측의 제안으로 2018년 4차 회의는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는데 남북 시민사회단체가 직접 머리를 맞대고 한반도 평화문제를 토론하고 제안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4. 기타

- 1) 박근혜퇴진국민행동
 - 12차: 1월 14일(토) 14:00 광화문 광장
 - 13차: 1월 21일(토) 14:00 광화문 광장
 - 14차: 2월 4일(토) 17:00 광화문 광장, 청와대
 - 15차: 2월 11일(토) 18:00 광화문 광장
 - 16차: 2월 18일(토) 17:00 광화문 광장

- 18차: 3월 1일(수) 17:00 광화문 광장, 청와대
- 19차: 3월 4일(토) 19:00 광화문 광장, 청와대, 헌법재판소
- 21차: 3월 25일(토) 17:00 광화문 광장
- 22차: 4월 15일(토) 17:00 광화문 광장

- 2) 미국의 한반도 위기조장 중단 긴급평화행동 <촛불은 평화를 원한다>
 - 일시 및 장소: 4월 15일(토) 16:00 광화문 광장

- 3) 주한미군 징백시대, 의미와 과제
 - 일시 및 장소 : 4월 19일(수), 14:00,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30호

- 4) 문재인 정부, 성평등정책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여성계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7월 7일(금), 10:00 세종문화회관 계단

- 5) 탁현민 OUT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7월 7일(금), 11:00, 청와대 분수대 앞

- 6) 전국여성연대 10주년 기념식
 - 일시 및 장소: 7월 8일(토) 14:00, 조계사

- 7) 양심수 석방 문화제
 - 일시 및 장소: 7월 8일(토) 19:30, 광화문광장

- 8) 여성가족부 장관-단체장 간담회
 - 일시 및 장소: 7월 20일(목) 11:30 광화문 프레스 센터 19층

- 9)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는 여성계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7월 27일(목) 14:00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 10) 통일부 사회문화교류협력과 면담
 - 일시 및 장소: 7월 27일(목) 16:00 광화문 종합청사 인근
 - 참석 : 안김정애, WCD members
 - 내용 : 1) 평화협정 체결 요구 기자회견문 전달
2) 남북여성교류 관련 정부지지 협조 요청

11) 남·북·미의 군사행동 중단과 조건없는 대화를 촉구하는 종교계·학계·시민평화단체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8월 10일(목) 14:00, 광화문 광장

12)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한미합동 군사훈련 반대 피스몹

- 일시 및 장소 : 8월 21일(월) 12:00, 서울시청 광장

13) 촛불 1주년 기념 대회

- 일시 및 장소 : 10월 28일(토), 광화문 광장

14) 대전 평화여성회 '10주년 후원의 밤'

- 일시 및 장소: 9월 19일(화), 대전NPO센터

- 참석 : 여혜숙

15) 2017 평화활동가대회

(1) 회의

- 4차 준비모임 : 9월 28일(목), 행사개요 및 세부 프로그램 초안, 홍보 방안, 기타 논의 등

- 5차 준비모임 : 10월 11일(수), 세부 프로그램 및 초청자 논의

- 6차 준비모임 : 10월 18일(수), 세부 프로그램 논의, 단체별 조직화 논의

- 7차 준비모임 : 10월 26일(목), 세부 프로그램 논의, 조직화 확인, 당일 역할 분담

(2) 행사

- 2017 평화활동가대회 '평화에게 기회를'

- 일시 및 장소: 11월 3일(금)- 4일(토) 파주 민족화해센터

- 주최: 2017 평화활동가대회 준비위원회

시민평화포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전쟁없는세상, 참여여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홍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

- 프로그램

| 1일차, 11월 3일(금) | |
|----------------|-------------------------|
| 10:00~10:30 | 참가 등록 |
| 10:30~12:00 | 안녕? 어색해도 괜찮아 - 아이스 브레이킹 |

| | |
|----------------|--|
| 12:00~13:00 | 점심식사 |
| 13:00~15:00 | [토크쇼] 2017 평화운동을 말하다: 그레이트 vs 스푸릿! - 한반도 위기와 남북관계 / 페미니즘X평화운동 / 평화롭게 살 권리 / 평화교육 |
| 15:00~15:30 | 휴식 |
| 15:30~18:00 | [워크숍] 2018 평화운동의 상상 - 비핵,군축/ 남북관계,민간교류/ 평화,통일교육/ 한미동맹 - 건강한 조직 만들기/ 지속가능한 활동 |
| 18:00~19:00 | 저녁식사 |
| 19:00~20:00 | [특강] 평화운동, 국회 200% 활용법 - 강사: 김종대 (정의당 국회의원) |
| 20:00~21:00 | 네트워크 게임: 100% 평화 |
| 21:00~ | 뒤꿈이 |
| 2일차, 11월 4일(토) | |
| 09:30~12:00 | 알쓸신평: 신나거나, 새롭거나 - 게임으로 평화운동하기 - 세상을 바꾸는 힘, 직접행동 - 뉴욕에서 집회하기: 국제에드보커시 |
| 12:00~13:00 | 점심식사 후 해산 |

- 16) 적폐청산, 사회대개혁, 반전평화실현, 촛불헌법 경위 범국민대회
- 일시 및 장소: 11월 18일(토), 16:00, 여의도 국회

5. 정부 기구/위원회 참여 현황

1) 서울가정법원 화해권고위원

박인혜, 박희진, 여해숙, 이덕경, 조영희, 김선혜, 전상희

2) 수원지방법원 화해권고위원

박인혜, 박희진, 이덕경, 이은영

3) 서울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박인혜, 여해숙, 이덕경

4)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박인혜, 이덕경

5) 서울시 이웃분쟁조정센터 조정위원

여해숙, 전상희

6)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김성은, 안김정애, 김정수, 김정아, 여해숙, 조영희, 고은광순

【7】 부설 갈등해결센터

* 조직

- 소장: 김선혜
- 부소장: 전상희
- 사무국: 이고은(활동가 3월-7월)
- 운영위원회: 김선혜, 전상희, 김영진, 김진희, 병희, 양승광, 유은주
- 자문위원: 강순원(한신대 교수), 김차연(변호사), 김희경, 박재근
- 전문위원: 박수선, 박인혜, 여해숙, 이경순, 이덕경, 조영희

1. 회의

1-1. 운영위원회

1) 1차 운영위원회

- 일 시: 2017년 1월 16일(월) 19:15~21:30
- 장 소: 여성미래센터 2층 여성교회
- 대 상: 갈등해결센터 운영위원
- 참석자: 김선혜, 김진희, 명희, 양승광, 유은주, 전상희
- 내 용: 2017년 운영방향 및 (가칭)갈등해결센터 별도의 조직설립 논의 프로세스

2) 2차 운영위원회

- 일 시: 2017년 3월 13일(월) 19:20~22:30
- 장 소: 여성미래센터 2층 여성교회
- 대 상: 갈등해결센터 운영위원
- 참석자: 김선혜, 김진희, 명희, 양승광, 유은주, 전상희, 김영진, 이고은(배석)
- 내 용: 조직 관련 논의 진행 공유 및 논의

3) 3차(임시) 운영위원회

- 일 시: 2017년 4월 17일(월) 19:20~21:30
- 장 소: 여성미래센터 2층 여성교회
- 대 상: 갈등해결센터 운영위원
- 참석자: 김선혜, 전상희, 김진희, 명희, 양승광, 유은주, 김영진, 이고은(배석)
- 내 용: 조발특위 결과 공유 및 조발특위 제안을 위한 분리 과정에서의 논의 사항

4) 4차 운영위원회

- 일 시: 2017년 5월 15일(월) 19:20~21:20
- 장 소: 여성미래센터 2층 여성교회
- 대 상: 갈등해결센터 운영위원
- 참석자: 김선혜, 김진희, 양승광, 유은주, 전상희, 김영진, 이고은(배석)
- 내 용: 갈등해결센터 운영위원 및 전문위원, 자문위원 활동 기한 및 회원모임 논의

5) 5차(임시) 운영위원회

- 일 시: 2017년 6월 8일(목) 19:20~21:20
- 장 소: 여성미래센터 2층 여성교회
- 대 상: 갈등해결센터 운영위원

- 참석자: 김선혜, 전상희, 김진희, 명희, 유은주, 김영진, 이고은(배석)
- 내 용: 조발특위 결과 공유 및 조발특위 제안을 위한 분리 과정에서의 논의 사항

6) 6차 운영위원회

- 일 시: 2017년 7월 5일(수) 19:20~22:00
- 장 소: 여성미래센터 2층 여성교회
- 대 상: 갈등해결센터 운영위원
- 참석자: 김선혜, 전상희, 김진희, 명희, 유은주, 김영진, 이고은(배석)
- 내 용: 상반기 활동보고 및 평가

1-2. 사무국회의

- 일 시: 수시
- 참가자: 김선혜, 전상희, 이고은(3월~7월)
- 안 건: 갈등해결센터 세부 일정 및 사업계획 논의, 사업 및 교육 진행

1-3. 청소년교육진행자모임 회의

1) 1차 회의

- 일 시: 2017년 3월 10일(금) 10:30~12:00
- 장 소: 여성미래센터 2층 여성교회
- 참 석: 김선혜, 전상희, 유은주, 김영진, 김진희, 박선숙, 엄금옥, 이은영, 최병옥, 박경아, 이고은(배석)
- 내 용: 2017 갈등해결센터 운영 방향 공유, 2017 청소년교육 방향 논의 등

2) 2차 회의

- 일 시: 2017년 6월 30일(월) 16:30~17:50
- 장 소: 여성미래센터 2층 여성교회
- 참 석: 김선혜, 전상희, 김쟁아, 류순희, 유은주, 김진희, 이은영, 최병옥, 이고은(배석)
- 내 용: 2017 상반기 교육 진행 현황 및 조직 현황 공유

2. 평화적 갈등해결 교육

2-1. 센터 주관 교육

1) 갈등과 갈등다루기

- 일 시: 2017년 2월 4일(토) ~ 2월 11일(토) / 총 13시간
- 장 소: 로하스A플렉스
- 참가자: 간현임 외 20명(17명 수료)
- 진 행: 김선혜
- 내 용: 갈등에 대한 이해, 갈등을 다루는 대화, 협력적 갈등해결

| 구분 | 일시 | 과목명 | 진행자 |
|-----|--------------------|------------------------------|-----|
| 1회차 | 2월 4일 10:30~16:30 | 갈등에 대한 이해 | 김선혜 |
| 2회차 | 2월 8일 19:00~22:00 | 갈등을 다루는 대화 "맥락대로 듣고, 말하기" | |
| 3회차 | 2월 11일 10:30~16:30 | 협력적 갈등해결 | |

2) 중립적 3자로 갈등다루기 *조정*

- 일 시: 2017년 2월 15일(수) ~ 2월 25일(토) / 총 17시간
- 장 소: 로하스A플렉스
- 참가자: 간현임 외 15명(11명 수료)
- 진 행: 김선혜, 박수선, 전상희
- 내 용: 조정과 조정자, 단계별 실습 및 종합 실습

| 구분 | 일시 | 과목명 | 진행자 |
|-----|--------------------|---------|------------|
| 1회차 | 2월 15일 19:00~22:00 | 조정과 조정자 | 김선혜 전상희 |
| 2회차 | 2월 18일 10:30~16:30 | 조정과정1 | 박수선 |
| 3회차 | 2월 22일 19:00~22:00 | 조정과정2 | 박수선 |
| 4회차 | 2월 25일 10:30~17:30 | 종합실습 | 김선혜 전상희 |

3) 회복적정의 피-카해 대화모임 진행자 훈련

- 일 시: 2017년 3월 18일(토) ~ 4월 8일(토) / 총 20시간

- 장 소: 로하스A플렉스
- 참가자: 김가애 외 10명(6명 수료)
- 진 행: 김선혜, 이경순, 전상희
- 내 용: 회복적정정의에 대한 이해, 피·가해 진행과 진행자의 역할, 단계별 실습 및 종합 실습

| 구분 | 일시 | 과목명 | 진행자 |
|-----|--------------------|------------------|------------|
| 1회차 | 3월 18일 10:30~16:30 | 회복적정정의에 대한 이해 | 김선혜 전상희 |
| 2회차 | 3월 25일 10:30~16:30 | 피·가해 진행과 진행자의 역할 | 김선혜 |
| 3회차 | 4월 1일 10:30~16:30 | 대화모임 실습1 | 이경순 |
| 4회차 | 4월 18일 10:30~16:30 | 대화모임 실습2 | 김선혜 전상희 |

4) 조정심화훈련과정

(1) 1차 교육

- 일 시: 2017년 3월 12일(일) 13:00~17:00
- 장 소: 서울여성플라자 세미나실1
- 참 석: 정현이, 유은주, 명희, 양승광, 박인아, 김지선, 김진희
- 내 용: 조정심화과정 안내, 조정 실습

(2) 2차 교육

- 일 시: 2017년 5월 14일(일) 14:00~18:00
- 장 소: 서울여성플라자 세미나실1
- 참 석: 최병욱, 양승광, 박인아, 정현이, 김진희
- 내 용: 조정실습 등

2-2. 외부 교육

1) 현황 보고 (2017. 07. 31. 기준)

| | 학교연계 | | | 기관연계 | 성인 | 계(누적) |
|----|------|----|---|--------------|------------------|---------------------------------|
| | 초 | 중 | 고 | | | |
| 개수 | 3 | 12 | 6 | 1개기관 1개교육 | 35개 기관 44개 교육 | 청소년교육 23개교육 성인교육 44개교육 |

*자세한 교육일정은 별첨 참조

3. 사업

3-1. 대화

1) 서대문친환경급식센터 지킴이 모니터링단 워크숍 기획 및 진행

(1) 기획회의

- 일 시: 2017년 1월 25일(수) 10:30
- 장 소: 서대문환경급식센터
- 내 용: 워크숍 기획회의
- 참 석: 전상희(친환경급식센터 전은자 센터장, 정은아 주무관)

(2) 워크숍 진행

- 일 시: 2017년 2월 28일(화) 10:00~12:00
- 장 소: 남가좌1동 주민센터 커뮤니티공간
- 주 제: 2017년 지킴이 모니터링단 역할 및 활동 방향
- 참 석: 전상희

2) 서대문혁신교육지구 사업 설명회 “함께모여, 시작” 기획 및 진행 워크숍 기획회의

(1) 기획회의

- 일 시: 2017년 2월 28일(화) 12:00~14:00
- 장 소: 서대문구청
- 내 용: 사업설명회 진행 방법 사전 논의
- 참 석: 김선애, 전상희(서대문구청 김선희 팀장, 유주봉 주무관)

(2) 서대문혁신교육설명회 진행

- 일 시: 2017년 3월 7일(화) 16:30~18:30
- 장 소: 서대문구청 6층 대강당
- 내 용: 2016년 사업보고 및 2017년 사업안내
- 참 석: 김선혜, 전상희

3) 서대문아동친화원탁토론회

(1) 기획회의

- 일 시: 2017년 5월 20일(토) 13:00~16:00
- 장 소: 서대문구청 4층 제 1회의실
- 내 용: 사업설명회 진행 방법 사전 논의
- 참 석: 김선혜, 전상희, 김진희, 박인아, 정현이, 김지선, 이고은

(2) 서대문아동친화원탁토론회 진행

- 일 시: 2017년 5월 27일(토) 13:30~18:30
- 장 소: 서대문구청 6층 대강당
- 내 용: 서대문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참여토론회
- 참 석: 김선혜, 전상희, 김진희, 박인아, 정현이, 김지선, 이고은

4) 서울시 열린대화

- 일 시: 2017년 6월 21일(수) 14:00~15:00
- 장 소: 서울 YMCA강당
- 내 용: 세대차이와 세대갈등
- 참 석: 김선혜, 이덕경, 박인혜, 김지선

3-2. 조정

1) 조정자 모임 간담회

- 일 시: 2017년 3월 22일(수) 19:00~21:00
- 장 소: 여성미래센터 1층 청산홀
- 내 용: 조정의 4가지 영역 활동 소개 및 앞으로를 위한 이야기 나누기
- 발표자: 전상희(아웃분쟁), 박인혜(주거재생코디네이터), 이덕경(가사조정), 이경순(화해권고)
- 참 석: 박인아 외 8명

2) 조정 활동

- 이웃분쟁, 상가임대차 분쟁 조정 등 (김선혜, 전상희, 박인아, 여혜숙)

3) 회복적 파가해 대화모임

- 일 시: 2017년 7월 16일(일), 17일(월), 21일(금)
- 장 소: 부천00중학교
- 진행자: 박인혜, 이경순, 이덕경
- 내 용: 사건 면담 및 본 대화

3-3. 지역평화커뮤니티

1) 광진구 '아름다운 학교'

(1) 기획 및 평가 회의

① 1차 교안 기획회의

- 일 시: 2017년 1월 18일(수) 10:30~12:30
- 장 소: 여성미래센터 2층 여성교회
- 내 용: 교육하면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교육 후 남기고 싶은 것 등
- 참 석: 김선혜, 전상희, 김진희, 이은영, 유은주

② 2차 교안 기획회의

- 일 시: 2017년 1월 24일(화) 10:30~12:30
- 장 소: 여성미래센터 2층 여성교회
- 내 용: 아름다운학교 교육 목표와 각 주체들의 교육 목표 및 방향 등
- 참 석: 김선혜, 전상희, 김진희, 이은영, 유은주

③ 3차 교안 기획회의

- 일 시: 2017년 2월 7일(화) 10:30~12:30
- 장 소: 여성미래센터 2층 여성교회
- 내 용: 2017년 상반기, 하반기 교육목표 및 수업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 등
- 참 석: 김선혜, 전상희, 김진희, 이은영

④ 4차 교안 기획회의

- 일 시: 2017년 2월 14일(화) 10:30~12:30
- 장 소: 여성미래센터 2층 여성교회
- 내 용: 1학기 교육계획안
- 참 석: 전상희, 김진희, 이은영

⑤ 5차 교안 기획회의

- 일 시: 2017년 2월 21일(화) 10:30~12:30
- 장 소: 여성미래센터 4층 사무국
- 내 용: 각 차시 별 교육계획안
- 참 석: 전상희, 김진희, 이은영

⑥ 6차 교안 기획회의

- 일 시: 2017년 2월 27일(월) 11:30~14:30
- 장 소: 서울시npo지원센터
- 내 용: 각 차시별 교육계획안
- 참 석: 전상희, 김진희, 이은영

⑦ 아름다운학교 1학기 교과 강사 회의

- 일 시: 2017년 3월 3일(금) 18:00
- 장 소: 아름다운학교
- 내 용: 대상 학생 설명 및 1학기 진행 각 교육과정 교육계획안 공유
- 참 석: 전상희, 김진희

⑧ 7차 교안회의

- 일 시: 2017년 3월 14일(수) 10:30~15:00
- 장 소: 여성미래센터 2층 여성교회
- 내 용: 1회기 교안회의
- 참 석: 전상희, 김진희, 이은영

⑨ 8차 교안회의

- 일 시: 2017년 3월 21일(수) 10:30~12:30
- 장 소: 여성미래센터 2층 여성교회

- 내 용: 2회기 교안회의
- 참 석: 전상희, 김진희, 이은영

⑩ 9차 교안회의

- 일 시: 2017년 3월 28일(수) 10:30~12:30
- 장 소: 여성미래센터 2층 여성교회
- 내 용: 3회기 교안회의
- 참 석: 전상희, 김진희, 이은영

⑪ 10차 교안회의

- 일 시: 2017년 3월 31일(금) 10:30~12:30
- 장 소: 여성미래센터 2층 여성교회
- 내 용: 3회기 교안회의
- 참 석: 전상희, 김진희, 이은영

⑫ 평가회의

▶ 교육 설계와 적용에 관한 1차 평가

- 일 시: 2017년 4월 6일(목) 17:30~19:00
- 장 소: 아름다운학교 인근
- 내 용: 교육기획
- 참 석: 김선애, 전상희, 김진희, 이은영

▶ 상반기 평가회의

- 일 시: 2017년 6월 29일(목) 17:00~19:00
- 장 소: 사무국 회의실
- 내 용: 상반기 교육 내용 및 운영 평가
- 참 석: 김선애, 전상희, 김진희, 이은영

(2) 교육

| | 회기 | 장소 | 대상 | 강의명 | 강사 |
|---|-----------|------------|-----------------|---------|-------------|
| 1 | 4월 6일(목) | 아름다운학 교 | 중학교 과정 학생 | 수업 열기 | 김진희, 이은영 |
| 2 | 4월 13일(목) | | | 갈등바라보기1 | |
| 3 | 4월 20일(목) | | | 갈등바라보기2 | |

| | | | | | |
|----|-----------|--|--|-------------|--|
| 4 | 4월 27일(목) | | | 감정알기 | |
| 5 | 5월 11일(목) | | | 다양한 갈등해결 방법 | |
| 6 | 5월 18일(목) | | | 차이와 다양성1 | |
| 7 | 5월 24일(목) | | | 차이와 다양성2 | |
| 8 | 6월 1일(목) | | | 의사소통1 | |
| 9 | 6월 8일(목) | | | 의사소통2 | |
| 10 | 6월 15일(목) | | | 의사소통3 | |
| 11 | 6월 22일(목) | | | 의사소통4 | |
| 12 | 6월 29일(목) | | | 의사소통5 | |

2) 중앙구 '마을활동가 양성과정'

(1) 기획회의

- 일 시: 2016년 2월 28일(화) 14:00~16:00
- 장 소: 서울시NPO센터
- 내 용: 마을활동가 양성과정 목표와 프로그램 논의
- 참 석: 김선혜, 전상희

(2) 교육일정

| 일시 | 장소 | 강의명 | 강사 |
|--------------------------|----------------|----------------------|-----|
| 3월 23일(목) 10:00~13:00 | 원광장애인 종합복지관 | 모임 운영과 회의 진행에 필요한 요소 | 김선혜 |
| 3월 30일(목) 10:00~13:00 | 원광장애인 종합복지관 | 신뢰가 쌓이는 듣고 말하기 | 전상희 |
| 4월 13일(목) 10:00~13:00 | 녹색병원 | 다양한 의견을 잘 듣고 모으는 방법 | 전상희 |
| 4월 20일(목) 10:00~13:00 | 녹색병원 | 결정을 민주적으로 하는 방법 | 전상희 |
| 4월 25일(화) 10:00~13:00 | 녹색병원 | 갈등을 다루기 위한 관점과 방법 | 김선혜 |

| | | | |
|--------------------------|------|-------------------------|-----|
| 4월 27일(목) 10:00~13:00 | 녹색병원 | 갈등을 다루기 위해 지켜야 할 원칙과 방법 | 김선혜 |
|--------------------------|------|-------------------------|-----|

3-4. 정책활동

1) 갈등학회 동계학술대회

- 일 시: 2017년 2월 24일(금) 10:00~18:00
- 장 소: 방송통신대학교 열린관
- 토 론: 김선혜(갈등해소와 신뢰, 차기정부 갈등관리방안)
- 참 석: 김선혜, 전상희

2) 2017년 부평 갈등과 치유 포럼

- 일 시: 2017년 6월 23일(금) 17:30~20:00
- 장 소: 부평구 갈등관리헬싱센터
- 토 론: 김선혜(센터의 지역사회 평화구축가능 강화를 중심으로)
- 참 석: 김선혜, 전상희

4. 연대활동

4-1. 평화시민대학 준비위원회

1) 2월 회의

- 일 시: 2017년 2월 7일 (화) 15:00~17:00
- 장 소: NVC센터
- 내 용: 2017년 평화시민대학 사업 논의
- 참 석: 김선혜, 전상희(박성룡, 김석봉, 한승희, 박성일)

2) 3월 회의

- 일 시: 2017년 3월 9일 (목) 10:00~12:00
- 장 소: NVC센터
- 내 용: 평화시민대학준비위 2017년 사업 논의
- 참 석: 김선혜, 전상희

3) 4월 회의

- 일 시: 2017년 4월 11일 (목) 10:00~12:00
- 장 소: NVC센터
- 내 용: 평화시민대학준비위 2017년 사업논의
- 참 석: 김선혜

4) 5월 회의

- 일 시: 2017년 5월 11일 (목) 14:00~16:00
- 장 소: 비폭력 평화물결
- 내 용: 강경 평화대학 프로그램 논의
- 참 석: 전상희

5) 6월 회의

- 일 시: 2017년 6월 14일 (목) 10:00~12:00
- 장 소: NVC센터
- 내 용: 강경 평화대학 프로그램 논의
- 참 석: 전상희

4-2. Student Wellbeing and Prevention of Violence (SWAPv)

1) 1차 회의

- 일 시: 2017년 2월 13일(금) 12:00~14:00
- 장 소: 여성미래센터 2층 여성교회
- 내 용: SWAPv내 평화교육 스페셜그룹의 일원으로 참여하기로 함
(<http://www.flinders.edu.au/ehi/swapv/special-interest-groups/home.cfm>)
- 참 석: 김선혜, 전상희, 강순원, 권순정(한신대학교)

2) 2차 회의

- 일 시: 2017년 4월 21일(금) 10:30~12:30
- 장 소: 서울대상관계장신분석대학원
- 내 용: 갈등해결센터 평화교육 활동소개, SWAPv 활동 방향 공유
- 참 석: 김선혜, 전상희, 강순원, 권순정(한신대학교)

4-3. 2017년 학교폭력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체 대화

- 일 시: 2017년 6월 17일 (토) 10:00~17:00
- 장 소: 분당종합사회복지관
- 내 용: 학교폭력 문제, 소통과 공감의 자리에서 풀자
- 참 석: 김선혜, 전상희

5. 회원활동

5-1. 회원월례모임

1) 1월 회원공부모임

- 일 시: 2017년 1월 17일(화) 19:00
- 장 소: 여성미래센터 1층 청산홀
- 강 사: 홍수경(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
- 참 석: 이도화 외 11명
- 내 용: 서울시 갈등관리 정책 방향 및 제도

2) 2월 회원모임의 날

- 일 시: 2017년 2월 1일(수) 19:00
- 장 소: 여성미래센터 1층 청산홀
- 참 석: 박미란 외 7명
- 내 용: 2017년 갈등해결센터 운영방향, 올해 회원들과 함께 하고 싶은 사업 이야기 나눔

3) 세계여성의날 기념 2017 페미니스트 광장

- 일 시: 2017년 3월 4일(토) 14:00
- 장 소: 브산각 앞 광장
- 참 석: 김진희 외 8명

4) 3월 회원공부모임

- 일 시: 2017년 3월 30일(목) 19:00~22:00
- 장 소: 여성미래센터 1층 청산홀
- 강 사: 김관호('비통한 자들의 정치학' 역자)
- 참 석: 정정민 외 13명

- 내 용: 왜 민주주의에서 대화가 필요한가

5) 갈등해결센터 회원모임의 날

- 일 시: 2017년 6월 30일(금) 18:30~21:30
- 장 소: 여성미래센터 지하 1층 소풍홀
- 참 석: 구명숙 외 20명
- 내 용: 회원들 인사 나눔, 갈등해결센터 분리독립 경과보고 및 향후 계획 공유

6. 사무국 활동보고

6-1. 교육홍보, 참가자 모집

- 교육 홍보: 센터교육수료자, 회원, 기타 관계 단체 메일 및 문자 안내 / 홈페이지 게재 등

6-2. 일상 사무

- 센터 홈페이지, 페이스북 관리
- 명함 제작, 워드 기한 연장
- 회계 관리
- 소식지 발행
- 프로젝트 사업 제안서 제출(서울시여성가족재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교육 준비 및 진행
- 서울시 시정협치형 사업설명회 참가

6-3. 프로젝트 관리

1) 2017 맞춤형 아카데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일 시: 2017년 5월 24일(수) ~ 6월 7일(수) / 총 9시간
- 장 소: 로하스A플렉스
- 대 상: 협동조합 관계자
- 참가자: 구명숙 외 22명(19명 수료)
- 진 행: 김선훈, 전상의

| | 일 시 | 장 소 | 내 용 |
|----|------------------------|----------------|--|
| 1차 | 5/24(수) 15:00~18:00 | 로하스A플렉스 대강당 | - 우리는 어떻게 논의하고 있는가 - 회의의 성공과 실패요소 - 진행자로서의 진행, 참여자로서의 진행 - 협력하는 회의를 위한 요소 |
| 2차 | 5/31(수) 15:00~18:00 | 로하스A플렉스 대강당 | - 회의 실제 '준비에서부터 결정까지' - 갈등이슈를 의제로 만드는 법 |
| 3차 | 6/7(수) 15:00~18:00 | 로하스A플렉스 대강당 | - 진행자로 듣고 말하기 · 의사소통을 저해하는 요소 · 맥락대로 듣고 말하기 · 요약하기 · 종합실습 |

별첨.

2017 외부교육 현황표

2017. 7 기준

(1) 청소년교육

| 연도 | 지역 | 기 관 | 대 상 | 회 차 | 시 간 | 주 제 | 인 원 | 진행자 | 일 시 | | | | | | |
|----|----|-----------|-----------------|-----|-----|----------------|-----|-----|----------|----------------|---------------|---|---|---|--|
| | | | | | | | | | 1 | 3 | 4 | 5 | 6 | 7 | |
| 1 | 서울 | 꿈나무 마을 | 생활시설거주청 소년 | 2 | 4 | 의사소통 | 20 | 전상희 | 11 12 | | | | | | |
| 2 | 서울 | 배화여 중 | 학생회 임원 | 1 | 2 | 회의진행자교 육 | 20 | 전상희 | | 10 | | | | | |
| 3 | 인천 | 신흥중 | 도래조정자 | 6 | 15 | 도래조정교육 및 훈련 | 19 | 김영진 | | 15 22 29 | 5 12 19 | | | | |
| 4 | 인천 | 신성중 | 도래조정교육 희망 학생 | 2 | 4 | 도래조정소개 교육 | 20 | 유은주 | | 31 | 14 | | | | |

| 연번 | 지역 | 기관 | 대상 | 회차 | 시간 | 주제 | 인원 | 진행자 | 일시 | | | | | | |
|----|----|----------|-------------------------------|----|----|--------------------------|----|--|----|---|----|----------------------|---------------|----------|--|
| | | | | | | | | | 1 | 3 | 4 | 5 | 6 | 7 | |
| 5 | 경기 | 효자중 | 포레조정자 | 3 | 6 | 포레조정교육 | 14 | 김영진 | | | 13 | 18 | 15 | | |
| 6 | 경기 | 신성중 | 포레상담반 | 2 | 4 | 의사소통 | 15 | 유은주 | | | 14 | | 2 | | |
| 7 | 서울 | 경신중 | 선도부 학생 | 1 | 2 | 포레조정 | 20 | 이은영 | | | 21 | 19 | | | |
| 8 | 서울 | 태화여중 | 포레조정반 | 8 | 16 | 포레조정 | | 강진희 | | | | 10 17 24 31 | 7 14 21 | 12 19 | |
| 9 | 경기 | 역북초 | 포레조정반 | 5 | 10 | 포레조정 | 24 | 유은주 | | | | 10 17 24 31 | 7 | | |
| 10 | 경기 | 수진중 | 1학년 6학급 2학년 7학급 3학년 5학급 | 1 | 2 | 의사소통 | | 반단위 김진희 김영진 유은주 이은영 박선숙 | | | | 11 12 | | | |
| 11 | 서울 | 마포고 | 2학년 1반 2학년 3반 | 2 | 4 | 민주적 의사소통 민주적 회의 진행 | 71 | 김영진 전상희 | | | | 15 | | | |
| 12 | 경기 | 소명여고 | 포레조정자 | 2 | 6 | 포레조정 | 14 | 김영진 | | | | 17 | 14 | | |
| 13 | 경기 | 불곡고 | 포레조정자 | 2 | 4 | 포레조정자교육 및 훈련 | 15 | 김영진 이덕경 | | | | 19 | 16 | | |
| 14 | 경기 | 성남테크노과학고 | 학교부적응학생 | 4 | 8 | 집단상담 | 10 | 유은주 | | | | 23 30 | 20 | 11 | |

| 연번 | 지역 | 기관 | 대상 | 회차 | 시간 | 주제 | 인원 | 진행자 | 일시 | | | | | | |
|----|----|----------|---------------|----|----|---------------|----------|-------------------|----|---|---|---------------------------|-----------------------------------|---|--|
| | | | | | | | | | 1 | 3 | 4 | 5 | 6 | 7 | |
| 15 | 서울 | 수명고 | 동아리 | 1 | 2 | 민주적 의사소통 | 20 | 이은영 | | | | 24 | | | |
| 16 | 서울 | 회원중 | 학생회 대의원 | 2 | 4 | 민주적 회의 진행 | 70 | 김지선 김영진 | | | | 25 | | | |
| 17 | 서울 | 성심여 중 | 학생자치회 학급임원 | 2 | 4 | 민주적 회의 진행 | 20 19 | 전상희 김진희 | | | | 29 | | | |
| 18 | 경기 | 물목고 | 1학년 10학급 | 2 | 20 | 비폭력평화교육 | 각 29 | 김영진 이덕경 박경아 | | | | 29 30 31 | 2 5 7 8 9 13 15 | | |
| 19 | 경기 | 대곡초 | 5학년 1개반 | 4 | 8 | 갈등해결 | | 김진희 유은주 전상희 | | | | 9 16 28 30 | 7 | | |
| 20 | 인천 | 석남중 | 도래조정자 | 5 | 15 | 도래조정교육 | 12 | 김영진 최병욱 유은주 | | | | 9 10 12 19 21 | | | |
| 21 | 서울 | 신북초 | 3학년 6개반 | 6 | 12 | 갈등해결과의 사소통 | | 김진희 박선숙 | | | | 19 20 26 27 | | | |
| 22 | 서울 | 목은중 | 도서반 동아리 | 1 | 2 | 민주적 의사 소통 | 25 | 김진희 전상희 | | | | 23 | | | |

| 연번 | 지역 | 기관 | 대상 | 회차 | 시간 | 주제 | 인원 | 진행자 | 일시 | | | | | | |
|----|----|-----|------------|----|----|----------|---------|---|----|---|---|---|---|----------------|-------------------|
| | | | | | | | | | 1 | 3 | 4 | 5 | 6 | 7 | |
| 23 | 서울 | 경신중 | | 1 | 2 | 도래조정 | 20 | 이은영 | | | | | | | 23 |
| 24 | 인천 | 청일초 | 도래조정자 | 5 | 10 | 도래조정자훈련 | 11 | 김진희 | | | | | | 28 | 3 5 7 13 |
| 25 | 성남 | 수진중 | 2학년 7학급 | 3 | 6 | 서울 | 반 | 김선혜 김영진 김정아 김진희 박경아 유은주 최별옥 | | | | | | 10 11 12 | |
| 26 | 고양 | 대곡초 | 3학년 4학년 | 3 | 6 | 갈등해결 | | 김진희 유은주 | | | | | | | 13 20 25 |
| 27 | 서울 | 난곡중 | 2학년 3-6반 | 1 | 2 | 민주적 의사소통 | 각 22 | 김영진 김진희 | | | | | | | 17 18 |

(2) 성인교육

| 연번 | 지역 | 기관 | 대상 | 인원 | 회차 | 총시간 | 제목 | 강사 | 일정 | | | | | | |
|----|----|------------------|------|----|----|-----|------------|-----|----|---|---|---|---|---|---|
| | | | | | | | | | 1 | 2 | 3 | 4 | 5 | 6 | 7 |
| 1 | 서울 | 연문중재위원회 | 교사 | 19 | 1 | 3 | 교실내갈등 다루기 | 김선혜 | 11 | | | | | | |
| 2 | 서울 | 어린이도서연구회 은평지회 | 신임임원 | 12 | 1 | 2 | 회의운영방식과 토론 | 김선혜 | 13 | | | | | | |
| 3 | 부산 | 부산연문중재위원회 | 교사 | 20 | 1 | 4 | 교실내갈등 다루기 | 전상희 | 13 | | | | | | |
| 4 | 서울 |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 보육반장 | 90 | 1 | 2 | 갈등해결과 의사소통 | 전상희 | 2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터 | | | | | | | | | | | | | | | | | |
| 5 | 서울 | 서울시50플러스재단 | 50플러스 컨설턴트 | 30 | 2 | 6 | 갈등관리와 의사소통 | 김선혜 | 2 3 | | | | | | | | | | |
| 6 | 서울 | 서울시50플러스재단 | 50플러스 모더레이터 | 60 | 1 | 4 | 원활한 의사소통과 관계맺기 | 김선혜 전상희 | 6 | | | | | | | | | | |
| 7 | 경기 | 도원초등학교 | 교사 | 40 | 1 | 3 | 조정역 실제 | 김선혜 전상희 | 20 | | | | | | | | | | |
| 8 | 경기 | 국도정보연구원 | 중견 여성간부 | 30 | 1 2 | 16 | 갈등관리 의사소통 | 김선혜 박인혜 | 21 22 | | | | | | | | | | |
| 9 | 전북 | 전북고원연수원 | 교사 | 20 | 1 | 3 | 회복적생활 교육/조정 | 김선혜 전상희 | 22 | | | | | | | | | | |
| 10 | 경기 | 경기도교육청 | 교사 | 각 15 | 1 | 4 | 교실내 갈등다루기 - 조정 | 김선혜 전상희 박인혜 | 23 | | | | | | | | | | |
| 11 | 서울 | 노원구마을계획단 | 노원구 마을계획단 일원 | | 1 | 3 | 마을회의 진행법 | 김선혜 | 2 | | | | | | | | | | |
| 12 | 서울 | 시설관리공단 | 공무원 | 30 | 1 | 2 | 갈등관리와 커뮤니케이션 | 김선혜 | 14 | | | | | | | | | | |
| 13 | 서울 | 인재개발원 | 공무원 | 15 | 1 | 3 | 갈등관리와 커뮤니케이션 | 김선혜 | 16 | | | | | | | | | | |
| 14 | 서울 | 동대문구 | 공무원 | 30 | 1 | 2 | 갈등관리와 커뮤니케이션 | 김선혜 | 30 | | | | | | | | | | |
| 15 | 서울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취업준비생 | 15 | 1 2 3 4 | 24 | 커뮤니케이션 | 김선혜 전상희 박수선 | 3 4 5 6 | | | | | | | | | | |
| 16 | 경기 | 경기도교육연수원 | 중등교사 | 20 | 1 | 3 | 명확로운 교실문화를 | 김선혜 전상희 | 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한 감동관리 | 김영진 이덕경 박인혜 | | | | | |
| 17 | 경기 | 경기도교육 연수원 | 중등교장 | 30 | 1 | 3 | 학교원장 감동관리_조 정 | 김선혜 김영진 이덕경 박인혜 여혜숙 | | | | 14 | |
| 18 | 광주 | 광주복지재 단 | 마을사업 자 | 50 | 1 | 2 | 편지를 만드는 대화 | 전상희 | | | | 17 | |
| 19 | 전북 | 고산고등학 교 | 교사 | 12 | 2 | 4 | 교실 내 감동다루기 | 전상희 | | | | 19 26 | 21 |
| 20 | 서울 | 서울시50플 러스재단 | 50플러스 컨설턴트 | 22 | 1 | 1 | 감동다루기 와 의사소통 | 김선혜 | | | | 10 | |
| 21 | 경기 | 송의중학교 | 교사 | 10 | 1 | 1 | 회복적생활 교육과 조정 | 전상희 | | | | 10 | |
| 22 | 서울 | 도봉구 작은도서관 | 마을서사 | 60 | 1 | 2 | 감동유형과 감동관리 | 김선혜 | | | | 12 | |
| 23 | 서울 | 마곡중학교 | 교사 | | 1 | 1 | 회복적관점 에서 본 생활지도 | 김선혜 | | | | 17 | |
| 24 | 전북 | 전북여성단 체 연합 | 전북지역 여성활동 가 | | 2 | 12 | 감동 다루기 | 전상희 | | | | 18 25 | |
| 25 | 서울 | 언론중재위 원회 | 공무원 | | 1 2 | 2 | 퍼실리테이 션과 감동애걸 | 김선혜 | | | | 18 | 20 |
| 26 | 서울 | 서울특별시 동부여성발 찬센터 | 협동조합 준비하는 사람 | | 1 | 4 | 의사소통 | 김선혜 | | | | 23 | |
| 27 | 경기 | 수정초등학 교 | 교사 | 30 | 1 | 2 | 회복적생활 교육 | 이덕경 | | | | 24 | |
| 28 | 경기 | 구름산초등 학교 | 학부모 | | 1 | 2 | | 전상희 | | | | 30 | |
| 29 | 서울 | 한국여성인 | 성폭력상 | | 1 | 4 | 감동애걸과 | 김선혜 | | | | | 1 |

| | 권진홍원 | 담소종사 자 | | | 의사소통 | | | | | |
|----|------|----------------------|-------------------------|------------------|------|---------------|---------------|------------|--|---------------------|
| 30 | 서울 | 이문동 | 마을계획 단 | 2 | 4 | 퍼실리테이 션 교육 | 김선혜 | | | 2 9 |
| 31 | 서울 | 길음동 | 마을활동 가 | 1 2 3 4 | 8 | 퍼실리테이 션 | 김선혜 | | | 8 15 22 29 |
| 32 | 서울 | 은평구 | 공무원 | 1 | 2 | 감동관리 교육 | 김선혜 | | | 8 |
| 33 | 광주 | 광주북지재 단 | 마을활동 가 | 1 | 2 | 감동해결과 의사소통 | 전상희 | | | 12 |
| 34 | 서울 | 흥사단 민족통일 운동본부 | 청소년 평화통일 교육 강사 | 35 | 1 | 2 | 감동해결 | 김선혜 | | 14 |
| 35 | 서울 | 한국여성인 권진홍원 | 여성시설 기관종사 자 | | 1 | | 감동관리와 의사소통 | 김선혜 | | 15 |
| 36 | 서울 | 연론중재위 원회 통일연구원 | | | 1 | 1 | 퍼실리테이 션 | 김선혜 | | 20 |
| 37 | 서울 | 작은 도서관 함께 놀자 | 책 읽어주는 엄마 3기 | 25 | 1 | 2 | 의사소통 | 김영진 | | 25 |
| 38 | 경기 | 별기림고등 학교 | 교사 | | 1 | 2 | 회복적생활 교육 | 김선혜 | | 28 |
| 39 | 서울 | 관악사회적 경제지원센 터 | | | 1 | 3 | | 김선혜 | | 4 |
| 40 | 서울 | 한국여성인 권진홍원 | | | 1 | 6 | | 김선혜 | | 6 |
| 41 | 서울 | 한국대학교 육협의회 | 성폭력상 당원 | | 1 | 3 | | 김선혜 전상희 | | 6 |
| 42 | 서울 | 옥수동 주민자치센 | | | 1 | 2 | | 김선혜 | | 7 |

| | | | | | | | | | | | | | | | | | | | |
|----|----|----------------|------------|---|---|------------|------------|--|--|--|--|--|--|--|--|--|--|--|----------------------|
| | | 티 | | | | | | | | | | | | | | | | | |
| 43 | 서울 | 한국방송광 고진흥공사 | | 4 | | 커뮤니케이 션 | 김선훈 전상희 | | | | | | | | | | | | 13 14 17 18 |
| 44 | 인천 | | 마을기업 대표 | 1 | 2 | | 김선훈 | | | | | | | | | | | | 18 |

[8] 부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

(2017년 계획)

| 평화여성회 20주년 기념 여성평화운동 포럼: 여성평화운동의 미션과 비전 찾기 | | | | | |
|---|--|----|---|-----------|-------------|
| 취지 | 평화여성회 20년을 맞이하여 여성평화운동의 담론과 실천활동에 대한 정책성, 미션, 비전을 재정립할 필요성 대두됨, 특별히 올해 그동안 함께 활동한 갈등해결센터가 본회로부터 조직적으로 분리되는 것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는 시점이라 위의 논의가 더욱 필요함 | | | | |
| 목적 | 평화를만드는여성회의 20년운동의 역사(과거)를 돌아다 보고, 현재를 점검하여, 미래로 나아갈 방향성을 모색함 | | | | |
| 운영 방법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text-align: center;">참여</td> <td> 평화여성회 회원(이사, 전현직 운영위원, 활동회원)과 관심있는 이 들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시기/ 횟수</td> <td> 월 1회 혹은 격월간 </td> </tr> </table> | 참여 | 평화여성회 회원(이사, 전현직 운영위원, 활동회원)과 관심있는 이 들 | 시기/ 횟수 | 월 1회 혹은 격월간 |
| 참여 | 평화여성회 회원(이사, 전현직 운영위원, 활동회원)과 관심있는 이 들 | | | | |
| 시기/ 횟수 | 월 1회 혹은 격월간 | | | | |
| 주제 | <p>※ 여성평화운동의 여러 이슈를 중심으로 평화운동의 미션과 비전에 초점을 맞춰 발제와 토론으로 운동의 과제 발굴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여성과의 만남 어떻게 할 것인가? - 평화형성 과정의 여성참여, 왜? 무엇은? 어떻게? - 갈등해결과 여성주의의 만남, 어떻게? - 일상의 평화운동이란 무엇인가? - 북한인권 문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 한미일 군사동맹에 대한 대응 - 주한미군과 기지촌 여성인권 - 통일운동에 대한 평화주의적 접근 등등 | | | | |
| 주관 | 평화여성회 부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 | | | | |

1. 조직

1) 역할: 여성평화주의 관점에서 본회의 활동에 대한 이론적 지원, 젠더와 평화에 대한 연구, 여성평화운동의 역사와 이론에 대한 정리 등을 통해 여성들의 평화통일운동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구성

- 원장: 김정수
- 연구위원: 위촉 예정

2. 활동

2-1. 학습하고 실천하는 여성평화공동체 만들기 - 2017년 가을 프로젝트

1) 개요 : 평화여성회가 창립20주년을 성찰하면서 “학습하고 실천하는 여성평화공동체 만들기”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함. 함께 모여 학습하고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모색함. 함께 성장하고 여성들의 평화의 힘을 만드는 집단지성의 공동창조자가 되는 길을 찾아 보고자 함

2) 사업내용

1회 “전쟁의 소용돌이: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국제연대의 흐름 이해하기”

- IWNAM(군사주의에 반대하는 여성네트워크) 활동과 GPPAC(Global Partnership for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활동 소개
- 일시 : 2017년 9월 22일(금)
- 발표 : 신민서 평화여성회 활동가, 안정애 평화여성회 상임대표(국제정치학 박사)

2회 북한사회의 시장화, 여성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 일시 : 10월 26일(목)
- 발표 : 박현선 이사(이화여대 북한학과 겸임교수)

3회 분단체계에 깃든 일상의 여성혐오 - 우리사회의 군사주의 들여다보기”

- 일시 : 2017년 11월 23일(목)
- 발표 : 김엘리 연세대학교 강사 (여성학 박사)

4회 갈등해결의 새로운 접근: 통일문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 일시 : 2017년 12월 22일(금)
- 발표 : 김정아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 연구단 연구위원

2-2. 통일국민협약 관련 활동

1) 개요 :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의 하나인 통일국민협약 프로세스를 만들어가는 저버너스 준비 모임에 참여함

2) 참석 : 김정수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원장)

3) 활동 내용

(1) <통일국민협약> 준비모임

- 장소: 통일부(정부종합청사) 회의실

- ① 2017.10.19. - 통일국민협약의 목표와 방법 발표 및 토론
- ② 2017.11.19. - 통일국민협약 추진계획(안) 통일부안과 시민사회안 검토와 논의
- ③ 2017.12.6. - 통일국민협약 추진계획(안) 검토와 논의 등

(2) 민화협 통일국민협약 추진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 일시와 장소 : 2017.11.27. 민화협 회의실

- 취지 : 통일-외교-안보 문제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갈등을 줄이고, 일관성 있는 대북-통일정책 추진을 통한 남북관계 발전과 통일문제 해결의 토대를 마련해 나가기 위해 <통일국민협약> 내용과 추진 방향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나가고자 함

- 참석 : 김정수(여성계 의견 발표)

3) 민화협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2017 공동회의

- 일시와 장소 : 2017. 12. 21(목)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 주제 : 통일국민협약과 지속가능한 대북-통일정책

- 참석 : 김정수(도문자)

2-3.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유엔안보리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 관련 활동

1) 여성가족부 유엔안보리결의 1325호 제2기 국가행동계획 공청회

- 일시와 장소 : 2017.11.2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

- 참석 : 김정수 (토론)

2) WPS(Women, Peace, Security) 포럼

- 일시와 장소 : 2017.12.8,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주제 : UNSCR 1325 국가행동계획 3주년의 평가와 과제
- 참석 : 김정수 (토론)

3) 여가부 1325 국가행동계획 2기 회의

- 주제 : 유연 안보리 결의 1325호 제2기 국가행동계획 수립을 위한 민·관 합동회의
- 목적 : 제2기 국가행동계획(안) 확정 및 향후 이행방향 논의
- 일시와 장소 : 2017.12.27, 여가부(정부종합청사) 회의실
- 참석 : 김정수 (제2기 민간위원으로 위촉됨)

2-4. 기타 개별활동

1) 2017 여성평화심포지엄

- 일시와 장소 : 2017.5.24, 프란치스코교육회관
- 주제 : 전쟁없는 한반도와 동북아를 위한 여성의 역할
- 참석 : 김정수 (기조발제)

2) 한반도평화포럼 2017 통일시민교육 직무연수

- 일시와 장소 : 2017.7.25, 강화로얄유스호스텔
- 참석 : 김정수, 여혜숙 (프로그램 진행 : 갈등해결 교육의 이해)

3) 21세기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국제컨퍼런스

- 일시와 장소 : 2017.9.23,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
- 주최 :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참석 : 김정수 (발표 :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한국여성평화운동의 30년의 노력: 성과와 과제)

4) 여성신문 기고

- 일시 : 2017.10.30 (1463호)
- 내용 : '여성운동 30년, 용기와 연대의 기록' - 통일·외교·안보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 담다
- 기고 : 김정수

4) 민주평통 여성분과위원회

- 일시와 장소 : 2017.11.27. 민주평통 사무처 회의실
- 주제 : 「남북한 여성교류 활성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 방안」
- 참석 : 김정수 (보조발제 : 남북여성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3. 연구원 활동 평가

- 1) 한국성단체연합 30년 운동사(출판)에서 여성통일·평화운동 분야를 집필하여 진보적 여성통일·평화운동의 성과 속에 성인지적이고 평화주의적 통일·평화운동을 전개한 평화여성회 20년의 활동을 포함하였다.
- 2) 하반기에 창립 20주년 이후 평화여성의 활동을 전망하고자 '함께 공부하고 실천하는 평화공동체' 파일럿 프로젝트로 제안하여 새로운 방향을 모색한 측면에서 보다 발전시킬 필요가 제기된다.
- 3) 2018년에는 제한된 역량을 집중하여 여성·평화·안보 의제에 대한 인식확산 활동 등 필요한 의제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이 요망된다.

2017년 결산보고

1. 본 회

| 수 입 부 | | | 지 출 부 | | |
|--------|------------|------------|---------|------------|------------|
| 항 목 | 예산 | 결산 | 항 목 세 목 | 예산 | 결산 |
| 전년 이월 | 4,249,635 | 4,249,635 | 사업비 | 18,100,000 | 11,209,338 |
| 회비 | 45,200,000 | 34,515,330 | 회의비 | 2,000,000 | 920,100 |
| 정기 | 31,200,000 | 26,015,330 | 평화통일사 | 1,000,000 | 1,580,882 |
| 이사 | 14,000,000 | 8,500,000 | 후원행사 | 5,000,000 | 1,130,356 |
| | | | 재정사업 | 1,000,000 | 1,679,500 |
| 후원금 | 19,400,000 | 9,947,600 | 연대사업비 | 2,500,000 | 2,198,000 |
| 개인 | 7,900,000 | 2,645,600 | 부설기구 | 6,600,000 | 3,500,500 |
| 후원회 | 10,000,000 | 5,859,000 | 교육세결산액 | 5,000,000 | 3,000,500 |
| 재정모금 | 1,500,000 | 1,443,000 | 기타세결산액 | 600,000 | 600,000 |
| | | | 운영비 | 38,050,000 | 28,090,579 |
| 프로그램참가 | 100,000 | 115,000 | 업무추진비 | 4,800,000 | 0 |
| 자료제공 | 40,000 | 0 | 인건비 | 15,600,000 | 13,585,460 |
| | | | 관리비 | 6,700,000 | 6,223,160 |
| 집수입 | 10,365 | 20,636 | 사무행정비 | 7,550,000 | 8,281,959 |
| 자업금 | | 1,200,000 | 경조사비 | 200,000 | 0 |
| | | | 복리후생 | 2,000,000 | 2,527,020 |
| 부설원천징수 | | 119,450 | 사무비 | 4,300,000 | 4,388,919 |
| | | | 여비교통 | 150,000 | 231,000 |
| | | | 통신비 | 1,100,000 | 924,860 |
| | | | 잡비 | 200,000 | 210,160 |
| | | | 미지급금 | 11,250,000 | 5,451,500 |
| | | | 차입금(16) | 5,250,000 | 5,451,500 |
| | | | 업무추진비 | 6,000,000 | 0 |
| | | | 적립금 | 3,600,000 | 2,950,000 |
| | | | 퇴직적립금 | 3,600,000 | 2,950,000 |
| | | | 예비비 | 1,000,000 | 0 |
| 소계 | 64,750,365 | 45,918,016 | 소 계 | 69,000,000 | 47,701,417 |
| | | 4,249,635 | 차년미불 | | 2,466,234 |
| 합 계 | 69,000,000 | 50,167,651 | 합 계 | 69,000,000 | 50,167,651 |

2. 부설 갈등해결센터

| 수입부 | | | 지출부 | | |
|------|------------|------------|---------|------------|------------|
| 항목 | 2017년 예산 | 결산 | 항목 | 2017년 예산 | 결산 |
| 전년이월 | 3,041,320 | | 사업비 | 17,400,000 | 13,305,202 |
| 교부금 | 6,000,000 | 3,000,000 | 교육훈련진행비 | 7,000,000 | 9,107,072 |
| 후원금 | 35,000,000 | 19,667,600 | 청소년교육사업 | 2,500,000 | 1,244,600 |
| 참가비 | 14,300,000 | 8,294,500 | 대회사업 | 3,000,000 | 1,201,500 |
| 자료제공 | 2,000,000 | 268,000 | 연대사업 | 500,000 | 309,000 |
| 집수입 | 58,600 | 31,431 | 회원모임지원비 | 2,000,000 | 581,740 |
| | | | 자료제작 | 1,000,000 | - |
| 사업후원 | | 2,990,840 | 회의비 | 1,400,000 | 861,350 |
| | | 7,720,000 | 운영비 | 40,000,000 | 24,667,995 |
| | | | 인건비 | 36,300,000 | 21,220,760 |
| | | | 복리후생비 | 2,700,000 | 3,017,020 |
| | | | 사무비 | 400,000 | 239,320 |
| | | | 통신비 | 300,000 | 68,945 |
| | | | 도서인쇄비 | 150,000 | 21,450 |
| | | | 경조사비 | 100,000 | 100,500 |
| | | | 잡비 | 50,000 | - |
| | | | 퇴직적립금 | 3,600,000 | 7,030,514 |
| | | | 퇴직적립금 | 3,600,000 | 7,030,514 |
| | | | | - | - |
| 소 계 | 61,000,000 | 41,962,451 | 소 계 | 61,000,000 | 45,003,771 |
| 전월이월 | | 3,041,320 | 자월이월 | | - |
| 합 계 | 61,000,000 | 45,003,771 | 합 계 | 61,000,000 | 45,003,77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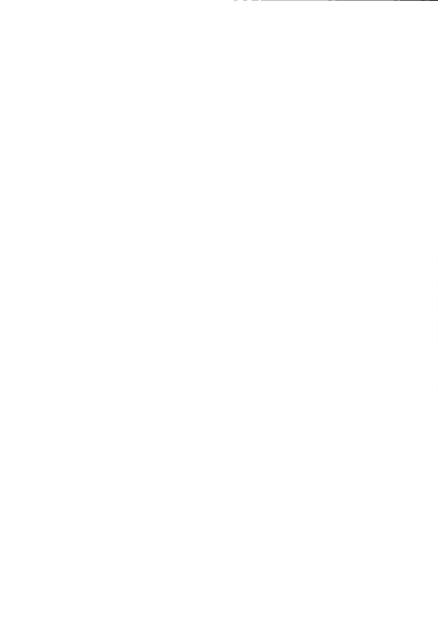
*사업후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990,840원)

3. 부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

2017년 한국여성평화연구원 결산(안)
(1월1일 - 12월 31일)

| 항 목 | 수입부 | | 항 목 | 지출부 | |
|------|-----------|-----------|-------|-----------|---------|
| | 예산 | 결산 | | 예산 | 결산 |
| 전년이월 | 538,270 | 538,270 | 사업비 | 1,300,000 | 300,500 |
| 교부금 | 600,000 | 600,000 | 회의비 | 200,000 | |
| 회비 | 600,000 | 600,000 | 워크숍 | 600,000 | 300,500 |
| 후원금 | 770,000 | - | 자료제작비 | 500,000 | - |
| 접수입 | 91,998 | 649 | 연구사업 | | - |
| | | | 운영비 | 700,000 | 600,000 |
| 사업후원 | | | 인건비 | 600,000 | 600,000 |
| 기타수입 | | 193,988 | 사무비 | 100,000 | - |
| 소 계 | 1,461,998 | 794,637 | 소 계 | 2,000,000 | 900,500 |
| 년이월 | | | 차년이월 | | 432,407 |
| 합 계 | 2,000,268 | 1,332,907 | 합 계 | 2,000,000 | 900,500 |

임원 인선안



임원 인선 안

○ 근거:

- 정관 제4장 제19조(임원의 선출) 1항 "임원은 인선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 정관 제4장 제19조(임원의 선출) 2항 "인선위원회는 이사 2인, 운영위원 5인 내외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2인으로 구성한다."

○ 인선위원회 구성: 조영희, 김정수, 이택경, 김정아, 이은영, 김지호

○ 임원 선출 (안)

- 이사 김성은, 김지영 연임
- 회계감사 윤수경 연임
- 부설기구 갈등해결센터 소장 김정아 선임

임원 인선(안)을 토대로 임원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년 임원 임기 (안)

| 구분 | 명 단 | 임기 | 비 고 | 인선(안) |
|------|----------|---------------|-----|-------|
| 이사회 | 김성은(이사장) | 2018~2020(3년) | | 연임 |
| | 김귀옥 | 2017~2019 | | 연임 |
| | 김정수 | 2017~2019 | | |
| | 김지영 | 2018~2020 | | |
| | 박현선 | 2017~2019 | | |
| | 안김정애 | 2017~2019 | | |
| | 여해숙 | 2017~2019 | | |
| | 이나영 | 2017~2019 | | |
| | 조영희 | 2017~2019 | | |
| | 한정숙 | 2017~2019 | | |
| 상임대표 | 안김정애 | 2017~2019 | | |
| 공동대표 | 정경란 | 2017~2019 | | 사임 |
| 감 사 | 윤수경 | 2018~2020 | | 연임 |
| | 배삼희 | 2018~2020 | | 사임 |
| 부설기구 | 소장 김정아 | 2018~2020 | | 신임 |
| | 원장 김정수 | 2016~2018 | | |

2018년 사업계획안

I. 2018년 사업기조 및 방향안

II. 2018년 사업계획안



1. 2018년 사업 기초와 방향

2018년은 남북한 단독정부 수립 70주년, 제주 4.3 사건 70주년이 되는 해로서, 2월에는 평창저울올림픽이 개최되는 해이기도 하다. 남북한은 평창올림픽을 통해 북-미간 갈등이 최고로 달했던 2017년의 위기를 평화로 전환시킬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할 과제도 지니며, 이를 위해 평화를만드는여성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본 회의는 올해에도 남북의 화해와 협력, 평화를 위한 성인지적 통일-평화운동의 주도적 역할을 위해 아래와 같이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1. 한반도의 전쟁관대와 평화정세 조성을 위한 여성들의 다양한 노력을 조직하고 견인한다.

올해 2월부터 열리는 열리는 평창올림픽과 피럴림픽의 기회를 지난해까지 최악의 상황으로 지달은 남북관계, 북미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평화만들기 노력에 참여한다. 이를 위해 평창올림픽의 평화적이고 성공적인 개최, 평화로운 남북관계로의 회복, 북미관계의 평화적 전환 촉구하는 여성평화걷기(평창-강릉-속초-고성 DMZ)를 기획하고 추진함으로써 2015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여성평화걷기를 지속하고, 이를 5.24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 여성평화걷기까지 이어가고자 한다. 올해는 남북해의 여성들이 함께 남쪽에서 북쪽으로 DMZ를 통과하는 여성평화걷기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2. 남북여성교류와 대북인도적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도한다.

남북관계의 개선과 함께 개개되는 남북여성교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남북사회문화교류와 대북인도적 지원사업에 성인지적이고 성평등한 제도와 정책을 제안하고 실천하기 위한 거버넌스 활동에 참여한다. 아울러 남북여성교류가 일회성 만남이 아닌 지속가능한 만남과 교류가 될 수 있도록 DMZ 내 여성평화생태공동체를 건설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경주한다.

3.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1325 국가행동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과 인식확산 사업을 진행한다.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1325 국가행동계획 제2기(2018-2020)를 맞이하여 바람직한 거버넌스를 수립하도록 한다. 제2기 국가행동계획의 이행, 평가 등에 관한 모니터링 방법론 수립, 여성시민사회에 여성-평화-안보(Women, Peace, Security: WPS) 의제의 확산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 WPS 의제의 지역화와 지방화, 일상생활 속의 의제 발굴 등 다양한 관점과 관심으로 국가행동계획을 여성들의 평화와 안전, 안보를 위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4. 갈등해결과 통일-평화-안보 영역을 결합시키는 다양한 노력을 전개한다.

성인지적 갈등-분쟁해결교육과 훈련, 통일교육과 갈등해결훈련 등 갈등해결교육과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회원들과 함께 배우고 실천하는 평화공동체를 수립하고자 한다. 또한 '여성평화수다방', '영화보기', '책읽기 모임', '찾아가는 여성평화교실'을 상시적으로 운영하여 여성의 일상

적 삶과 연결된 평화의제와 실천과제를 발굴한다. 이러한 회원참여형 프로그램의 상시적 운영하여 지속가능한 여성평화운동의 기반을 마련하는 조직적 노력을 기울인다.

5. 한반도 전쟁위기를 줄이고 분단을 종식하며 동북아시아의 평화조성을 위해 국제연대를 강화하고 아시아의 반군사주의 운동과 연대하는 다양한 연대활동을 WomenCrossDMZ, WILPF(국제평화자유여성연맹), GPPAC(무장갈등예방글로벌파트너십),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여성네트워크(IWVWAM) 등과 함께 전개하기로 한다.

II. 2018년 사업계획안

【1】 조직사업

1. 회의

1-1. 총회

- 1) 역할: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임원의 선출 및 불신임, 단체(법인)의 해산 및 정관의 변경,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예산 및 결산의 승인, 사업의 기본 정책과 방향의 결정, 사업계획 및 보고의 승인, 기타 주요한 사항을 결정한다.
- 2) 구성: 본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 하고, 소정의 가입절차를 거쳐 본회의 사업에 깊이 활동하며 정기적으로 회비를 내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 3) 내용 : 2018년 사업계획 수립, 임원 선출 등

1-2. 이사회

- 1) 역할: 본회의 사업집행에 관한 심의기구로서,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위원회와 부설 기구의 설치, 정관의 변경 발의,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재산관리, 총회 부의 안건의 작성, 회원의 제명, 총회 위임 사항,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2) 구성: 공동대표 및 이사로 구성한다.
 - 이사장: 김성은
 - 이사: 김귀옥, 김경수, 김경아, 김지영, 박현신, 안김정애, 여혜숙, 이나영, 조영희, 한정숙



1) 역할: 본회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상설 의사결정기구로서, 총회와 이사회의에서 위임한 주요사업과 기타 정관에 명시한 본회 목적사업과 관련한 일상적 업무를 관장하고 집행한다.

2) 구성: 공동대표, 각 위원회와 부설기구의 장, 서기, 회계, 사무처장 등으로 구성한다.

1-4. 사무국회의

1) 역할: 본회 사업집행에 필요한 사안을 논의, 진행사업 점검 및 공유 등을 진행한다.

2) 구성: 공동대표, 실무집행 책임자, 실무활동가 등으로 구성한다.

- 위원: 안김정애(상임대표), 안지영(활동가)

3) 내용: 매주 월요일 오전 혹은 오후

2. 위원회

2-1. 정책위원회

1) 역할: 여성과 평화의 관점에서 평화통일운동의 정책과제를 모색하고 조정한다.

2) 구성

2-2. 국제협력위원회

1) 역할: 여성과 평화의 관점에서 국제협력을 추진한다. 무장갈등예방글로벌파트너십(GPPAC)과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관련 국제연대를 진행한다.

2) 구성

【2】 평화통일 사업

1. 남북여성교류의 지속적인 추진

남북직접대화와 개성공관 재개,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정책으로 채택할 것을 꾸준히 요구하고, 중단되었던 남북여성교류를 재개하여, 일회성 만남이 아닌 DMZ내 여성평화생태공동체 건설 등 지속가능한 제안과 실천

2. 분단/정전체제 종식을 위한 캠페인과 국제적인 연대활동 모색

5·24세계여성평화군축의 날 기념, WomenCrossDMZ, 국제평화자유여성연맹(WILPF), 무장갈등예방글로벌파트너십(GPPAC),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여성평화네트워크(TWNAM)등과 함께 남에서 북으로 한반도 조디해사, 구미, 서울, 부산, 여성평화회의



3.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유엔 안보리결의 1325' 국가행동계획 모니터링 계획수립 등 대응모색

4. 여성의 일상적 삶과 연결된 평화의제 발굴.

여성평화수다방 등 함께 영화보기, 함께 책 읽기 모임 가동

5. 한반도의 군사기지화 반대 활동 전개

성주의 사드배치나 강정해군기지는 남북의 군사적 대립 보다는 미국의 대중국 방어기지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유사시 한반도가 동아시아 무력분쟁의 현장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위기를 막기 위해, 본회는 한반도가 동아시아의 군비경쟁을 심화하는 데 도구로 활용되는 군사기지화를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6. 평화협정 체결 촉구를 위한 다양한 활동 전개

2018년은 한국전쟁 정전협정 65주년이 되는 해이다. 65년 동안의 정전체제 하에서 남북의 주민들은 많은 고통을 겪어왔고, 남북의 이질화와 적대화는 점차 심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제 남과 북, 그리고 중국과 미국은 종전을 선언하고 불가침선언, 평화협정으로 이어지는 평화체제로의 출발을 올해를 기점으로 시작되기 바란다. 이를 위해 본회도 시민사회, 여성단체들과 함께 노력하고자 한다.

7. 2018 평창, 여성평화결기

1월 중에 평창올림픽의 평화적이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한미군사훈련 중단과 남북 직접대화를 요구하며 평창-강릉-속초-고성 DMZ 여성평화결기 추진

[3] 정보 홍보 사업

1.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관리, SNS 평화활동 등
2. 소식지 발행 및 온라인 소식지 발송
3. 메일을 통해 본 회 소식 전달

[4] 회원 사업

1. 회원 간의 소통과 활동의 정보교류를 통해 회원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다양성과 역량을 확대 강화한다.
2. '찾아가는 여성평화교실' 등 회원 참여 구조와 사업을 개발하고 실행.

[5] 연대 및 협력 사업

1. 국내 상설 연대

- 1-1. 한국여성단체연합 : 총회, 이사회, 사무국장 연석회의, 여성미래센터 운영위원회, 3·8세계여

성의 날 기념 한국여성대회 준비위원회

- 1-2.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대의원 총회, 수요시위 주관
- 1-3.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여성본부
- 1-4.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 대의원회, 여성위원회
- 1-5.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2. 국내 사안별 연대

- 2-1. 사드배치 반대 전국행동

3. 국제 연대

- 3-1. GPPAC(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 3-2. WomenCrossDMZ

【6】 부설기구

1. 갈등해결센터

1) 역할: 평화·여성·통일의 가치와 의미를 살리는 갈등해결센터의 활동을 전개한다.

2) 구성: 센터장(김경아), 전문위원(이덕경, 여해숙, 조영희)

3) 사업

(1) 목표 : 성인지적 갈등·분쟁해결교육과 훈련, 통일·평화교육과 갈등해결훈련 등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갈등해결교육과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회원들과 함께 배우고 실천하는 평화공동체를 수립한다.

(2) 방향

- ① 안보교육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평화감수성 교육으로 전환을 모색한다.
- ② 분단과 여성의 현실을 반영한 갈등해결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③ 통일교육 전문가사 훈련, 여성평화활동가 퍼실리테이션 훈련을 위한 내용과 방법론을 개발한다.
- ④ 통일교육네트워크 활동(민회협)에 참여하여 통일교육, 평화교육 단체들과 교류하고 협력한다.

(3) 세부사업(안)

| 일 정 | 기간별 목표 | 내 용 | 비 고 |
|----------|-------------|----------------------------------|-----|
| 2018. 3. | 학습 | 여성·평화·통일 분야의 갈등해결 이론과 방법론 등 자료 등 | |
| 2018. 6. | 프로그램 구성 | 강사양성/ 학교교육 프로그램 | |
| 2018. 9. | 프로젝트 제안과 실행 | 통일교육협의회, 통일부(통일국민협약), 여성부 등에 제안 | |
| 2018. 12 | 평가 및 향후 계획 | | |

2. 한국여성평화연구원

1) 역할: 여성평화·통일운동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고,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글로벌 인식을 국내적으로 확산하는 노력을 경주한다.

2) 구성: 원장(김정수), 연구위원(김정아, 조영희)

3) 사업

- (1) 여성·평화·안보 의제에 관한 성평등 인식 확산 연구와 활동
- (2) 상인지적 통일국민협약 준비를 위한 연구와 활동 (갈등해결센터와 협력)
- (3) 타 연구기관과 실천의 협업 모색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소통, 치유, 통합의 가치로 사람과 사람, 사람을 통일한다)
 -영상물로 북에 대한 인식, 역사적 드라마마 보여주기 등
- (4) 제2기 국가행동계획 민간자문위원 활동(원장)
- (4) 기타

2018년 예산(안)



1. 분 회

<영광출판사여성회>

| 수 입 부 | | | 지 출 부 | | | |
|--------|------------|------|---------|-----------|------------|--|
| 항 목 | 예 산 | 합 | 목 록 | 세 목 | 예 산 | |
| 전년이월 | 2,561,455 | 사업비 | | | 5,500,000 | |
| 회비 | 29,000,000 | | 회의비 | | 900,000 | |
| 정기 | 18,000,000 | | 영화통일사업 | | 1,600,000 | |
| 미사 | 11,000,000 | | 후원행사 | | 1,000,000 | |
| | | | 재정사업 | | | |
| 후원금 | 9,400,000 | | 연대사업비 | | 2,000,000 | |
| 개인 | 4,400,000 | | 부설기구 | | | |
| 후원회 | 5,000,000 | | | 갈등해결센터 | | |
| 재정모금 | | | | 한국여성평화연구원 | | |
| | | 운영비 | | | 32,000,000 | |
| | | | 업무추진비 | | 2,400,000 | |
| 참가수입 | 200,000 | | 인건비 | | 16,800,000 | |
| | | | 관리비 | | 6,000,000 | |
| 자료제공 | 100,000 | | 사무행정비 | | 6,800,000 | |
| | | | | 경조사비 | 100,000 | |
| 접수입 | 38,545 | | | 복리후생비 | 2,500,000 | |
| | | | | 사무비 | 3,000,000 | |
| 자입금 | | | | 여비교통비 | 100,000 | |
| | | | | 통신비 | 900,000 | |
| 부설원천징수 | | | | 잡비 | 200,000 | |
| 부설정산잔액 | | 미지급금 | | | 1,000,000 | |
| | | | 차입금(1기) | | 1,000,000 | |
| | | | 업무추진비 | | 0 | |
| | | 적립금 | | | 1,800,000 | |
| | | | 퇴직적립금 | | 1,800,000 | |
| | | 예비비 | | | 1,000,000 | |
| 소계 | 38,738,545 | 소 계 | | | 41,300,000 | |
| | 2,561,455 | 차년이월 | | | | |
| 합 계 | 41,300,000 | 합 계 | | | 41,300,000 | |



부 록

- 평화여성회 정관
- 평화여성회 조직 현황
- 2018년 성명서 목록
- 회원가입서



【 부 록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정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 ① 본 단체는 사단법인 평화를만드는여성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하고 '평화여성회'라는 약칭을 사용한다.
- ② 본회의 영문표기는 Women Making Peace로 하고 약칭은 WMP로 한다.

제2조(위치) 본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국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여성의 힘을 모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루고, 아시아와 세계평화를 실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성주의 관점과 평화주의 관점을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통해 평화통일운동을 전개한다.

1. 평화통일사업
2. 평화교육
3. 통일교육
4. 평화통일연구
5. 국내외 연대사업
6. 기타 본회의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구분과 자격)

- ① 본회 회원은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 ② 본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은 모두 회원이 될 수 있으며,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 본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고 소정의 가입절차를 거쳐 본회의 사업에 같이 활동하며 정기적으로 회비를 내는 사람으로 한다.
2. 후원회원 : 본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고 소정의 가입절차를 거쳐 후원을 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가입)

- ① 본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가입신청서를 본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본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
- ③ 회원의 가입절차는 별도규정에 따른다.

제7조(회원의 권리)

- ① 정회원
 1. 본회 활동과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2. 본회 활동상황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3. 총회에서 의사결정권을 가지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 후원회원
 1. 본회 활동과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2. 본회 활동상황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의무)

- ① 회원은 본회의 정관, 제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한다.
- ② 본회의 모든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③ 회비를 납부한다.

제9조(회원의 탈퇴)

-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② 본회의 재산은 회원의 탈퇴로 환급되지 않는다.

제10조(회원의 제명, 징계)

- ①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 의결권 제한, 제명 등 징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특별한 이유 없이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 ② 회원을 제명 등 징계할 때에는 당해 회원에게 사유를 통지하고 해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회원의 제명 등 징계의 종류와 절차는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3장 총회

제11조(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제12조(소집)

-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공동대표 전원의 명의로 소집한다.
-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임대표가 소집한다.
 - 1. 정회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고 요구하는 때
 - 2.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요구하는 때
 - 3. 감사직무와 관련하여 소집을 요구하는 때
 - 4. 공동대표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때
- ③ 임시총회의 소집 요구를 받으면 상임대표는 3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기간 내에 상임대표가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공동대표 중 연장자 순으로, 공동대표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기간 내에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상임대표의 총회에 관한 업무를 대행 할 수 있다.

제13조(총회 개최 및 통지) 공동대표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과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서면 또는 전자메일로 정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총회의 의결사항)

- ① 임원의 선출 및 불신임
- ② 단체(법인)의 해산 및 정관의 변경
- ③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 ④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⑤ 사업의 기본정책과 방향의 결정, 사업계획 및 보고의 승인
- ⑥ 기타 주요한 사항

제15조(총회의 의결)

- ① 총회는 재직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최하며,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정관의 변경, 본회(법인)의 합병 및 분할, 임원의 해임, 회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참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상임대표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 ③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6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그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17조(총회 의사록)

-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2인 이상의 서기가 이에 기명날인한다.
- ② 총회 개최 후 총회의사록 요지를 참석하지 않은 총회구성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임원

제1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 ① 공동대표 3인 내외 (상임대표포함)
- ② 이사 15인 이내 (공동대표 포함)
- ③ 감사 2인

제19조(임원의 선출)

- ① 임원은 인선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인선위원회는 이사 2인, 운영위원 5인 내외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2인으로 구성한다.
- ③ 본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우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 ④ 그밖에 임원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규정에 따른다.
- ⑤ 선임된 임원은 통일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임원의 제한)

- ① 임원은 임원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배우자의 삼촌이내의 혈족관계

에 있는 이가 임원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감사간에 위 ①항에 규정된 관계가 없는 이로 하여야 한다.

제21조(임원의 직무)

① 공동대표는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제반업무를 관장, 관할한다. 그 중 1인은 상임대표가 되고, 총회 의장이 된다. 상임대표 유고 또는 결위시 이사회에서 공동대표 중 직무대행의 순서를 정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총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항을 의결하고, 사업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 의장이 되며, 본회 사업에 관한 사항을 통리하고, 법인 등기부등본의 대표가 된다.

④ 감사는 본회의 재산상황, 이사회 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제22조(임원의 임기)

① 공동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②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④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장 이사회

제23조(구성)

① 이사회는 본회의 사업집행에 관한 심의기구로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가 있다.

② 이사회는 공동대표와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은 이사 중에 호선한다.

③ 필요한 경우 후원이사를 둘 수 있고, 이사회 운영에 관한 별도규정을 둘 수 있다.

제24조(소집)

① 정기이사회는 매년 2회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 이사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2. 감사의 요구가 있는 때

3.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임시 이사회 소집 요구를 받으면 이사장은 14일 이내에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기간 내에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사중 연장과 순으로 이사장의 이사회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④ 이사회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등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규정에 따른다.

제25조(개회 및 통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전까지 회의안건, 일시, 장소를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메일을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전원이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6조(의결)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 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이사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는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등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범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때

제28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2. 예산 및 결산
3. 위원회와 부설기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정관의 변경 발의에 관한 사항
5.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에 관한 사항
8.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9.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10. 기타 정관에서 이사회의 권한으로 정하는 사항

제29조(감사)

- ① 본회의 사업과 재정을 감사하기 위해 사업감사와 회계감사를 두고, 연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감사는 필요한 경우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③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될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사실을 동일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부설기구

제30조(부설기구) 본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설기구를 둘 수 있다.

제31조(부설기구의 장)

- ① 부설기구의 장은 본회의 당연직 이사로서 본회의 목적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② 부설기구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③ 부설기구의 장은 자체 운영규정에 따라 추천하고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32조(부설기구의 구성 및 운영) 부설기구의 구성 및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정에 따른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33조(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4조(재산의 관리)

- ①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통일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제공 등으로 처분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5조(재정수입)

- ① 본회의 재정수입은 회비, 후원금, 특별모금, 기타 잡수입으로 한다.
- ② 회원의 회비는 총회에서 정한다.
- ③ 본회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36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로 한다.

제37조(예산의 수립) 본회의 세입 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제38조(임원의 보수) 사업운영을 전담하는 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사무부서

제39조(사무처) 본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사무처를 둔다. 사무처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규정에 따른다.

제40조(구성 등)

- ① 사무처에는 처장 1인과 약간 명의 실무자를 둘 수 있고 사무처장은 공동대표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 ② 사무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 ③ 실무자는 사무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 ④ 실무자의 인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정에 따른다.

제9장 보칙

제41조(정관제정 및 개정)

1. 정관의 제정은 총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결의로 한다.
2.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 요구에 의하여 발의한다.
3. 발의된 정관 개정안은 총회 출석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2조(법인해산)

1.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통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본회 해산시 잔여 재산은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제43조(결산) 공동대표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통일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재산 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 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기타) 본회의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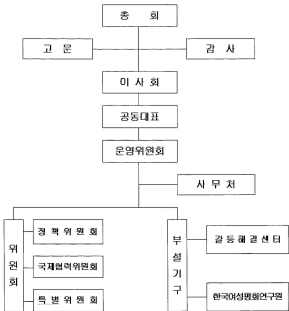
1.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1997. 3. 28 제정

1998. 2. 10 1차 개정

1999. 3. 4 2차 개정
2000. 1. 25 3차 개정
2002. 1. 25 4차 개정
2003. 1. 28 5차 개정
2004. 1. 9 6차 개정
2010. 1. 20 7차 개정

【 부록 】 평화들만드는여성의 조직 현황



【 부 록 】 2018년 성명서 목록

| 날 짜 | 제 목 |
|------|--|
| 3/1 | [기자회견문] 격화되는 한반도의 군사위기. 여기서 멈추어야 합니다. '평화롭고 안전한 한반도 만들기'를 호소합니다. |
| 3/15 | [결의문] 한미 당국의 사드 배치 강행 즉각 중단하라 |
| 3/16 | [기자회견문] 한미당국은 불법 반입 사드 레이더를 즉각 철거하라! |
| 3/17 | [기자회견문] 대북 제재와 압박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에 나서라! 불법적인 사드 배치 강행 중단하라! |
| 3/20 | [성명서] 사드 원천무효! 사드 가고 평화 오라! 폭력으로는 평화를 절대 빼앗을 수 없습니다 |
| 3/24 | [성명서] 막무가내 사드 배치를 중단시킬 골든타임.회는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라 |
| 3/28 | [기자회견문] 금이 사드 배치를 중단시킬 골든타임.회는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라 |
| 4/13 | [기자회견문] 반도 전쟁도박 중단하라! 우리 여성들은 전쟁대신 평화를 위해 행동한다 |
| 4/14 | [성명] 한반도 주민을 볼모로 하는 일체의 군사행동에 반대한다 |
| 4/13 | [기자회견문] 사드배치, 트럼프의 한반도 전쟁위기 조성과 대선개입을 규탄한다! |
| 4/17 | [성명] 미 펜스 부통령의 방한에 즈음한 우리의 입장 |
| 4/21 | [성명] 한미 당국의 사드 부지 공여 합의는 원천무효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

| 날 짜 | 제 목 |
|------|---|
| 4/25 | [기자회견문]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 찬성 당론을 즉각 철회하라! |
| 4/26 | [기자회견문] 민심 짓밟고 사드 배치 못박으려는 한이 당국 규탄한다! 불법 반입한 사드 장비 즉각 철거하라! |
| 4/26 | [성명] 대통령 후보들의 동성애 혐오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
| 4/28 | [기자회견문] 대국민 사기극 사드 배치 원천무효 사드 비용 요구한 미국을 규탄한다! 미국은 불법, 기습 반입한 사드 장비를 즉각 철거하라 ! |
| 5/10 | [논평] 새 대통령에게 바란다 |
| 5/17 | [기자회견문] 우리는 계속되는 말하기와 행동으로 더 많은 변화를 만들어갈 것이다 |
| 5/24 | [요구문] 5월24일 평화와 균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문재인정부에 보내는 여성들의 요구문 |
| 7/7 |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는 '성평등'을 위한 국민적 약속을 이행하라! |
| 7/7 | [기자회견문] "성평등" 대통령은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행정관, 박헌민을 경질하라. |
| 7/11 | [성명서] 금강산관광 중단 10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
| 7/24 | [호소문] 일제의 국가범죄를 총결산하기 위한 전민족적운동을 과감히 전개 해 나가자 |
| 7/27 | [기자회견문] 한반도 평화협상 시작하여 전쟁종식과 평화체제 구축으로 나아가자! |
| 7/27 | [호소문] 문재인 대통령에게 드리는 호소문 : 우리 여성들은 평화협정을 원합니다 |

| 날 짜 | 제 목 |
|-------|--|
| 7/31 | [성명서]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계획을 철회하라 성주예, 김천에 사람이 살고 있다 |
| 8/10 | [기자회견문] 남-북-미 모두 일체의 군사위협 중단하고,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
| 8/15 | [선언문] 사드반대, 전쟁반대,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여성선언 |
| 9/8 | [성명서]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평화와 민주주의는 어디 있는가 |
| 9/21 | [논평] '완전한 파괴' 거론한 트럼프, 적극 동조하는 청와대 한반도 전쟁 선동하는 무개념 막장 발언과 정책 중단하라! |
| 9/25 | [논평] 한반도 주민 불모 삼는 위험천만한 미군 B-1B 무력시위 용납할 수 없어 |
| 9/27 | [공동호소문] 10.4선언 발표 10주년에 즈음한 공동호소문 |
| 10/10 | [성명서] 농민들의 쌀값 1kg 3천원 보장, 농정개혁, 농민헌법을 적극 지지한다. |
| 10/11 | [성명서] 사드 배치 앞당겨 안보를 정치에 이용한 김관진을 수사하라 |
| 10/19 | [성명서] 전쟁을 부르는 한미해상훈련 반대, 트럼프 방한 반대 긴급여성행동 성명서 |
| 10/26 | [논평]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한미군사훈련 중단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
| 11/27 | [논평]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 이행을 담보하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을 환영한다 |
| 11/29 | [성명서] 송영무 국방장관의 부적절한 성희롱 발언을 규탄한다 |

| 날 짜 | 제 목 |
|-------|---|
| 12/4 | [기자회견문] 한미공군합동훈련 중단 촉구 여성평화행동 기자회견문 |
| 12/28 | [성명서] 문재인 정부는 한일'위안부'합의 검증 TF 결과 수용하여 지금 당장 2015한 일합의 폐기하라! |

[기자회견문]

격화되는 한반도의 군사위기, 여기서 멈추어야 합니다.

'평화롭고 안전한 한반도 만들기'를 호소합니다.

냉전대결 체제가 여전히 명위를 떨치는 동아시아에서 군사적 긴장이 새로운 단계로 격화되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이 통상, 영토문제 등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일본은 재무장에 한층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남북, 북미간 모든 대화가 중단된 것은 물론, 한반도 핵갈등 또한 해결의 기미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와 한반도 전쟁구조의 악화와 이에 따른 상시적 군사위기가 날로 확장되어 왔으며, 한반도는 미중 등 강대국들의 군비경쟁과 대치의 최 일선에서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날로 격화되는 한반도 군사위기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평화는 물론이고 나라의 주권과 생존권조차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우리는 뼈아프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전쟁구조와 군사위기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군사적 압박과 제재, 그리고 군비경쟁은 위기의 가중만 불러올 뿐, 어떠한 갈등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지난 10여 년간 명확히 검증되었습니다. 온간 제재와 압박에도 북한의 핵능력은 비약적으로 성장되었고,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는 국지적 분쟁이 아니라 '핵선제타격'을 걱정해야 할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미국 내에서도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신임 트럼프 행정부도 대북정책 재검토를 시작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 또한 새로운 사회를 향한 대장정에 올라 있습니다. 천만 시민들의 뜻을 향정으로 이 땅의 비상식과 비민주를 일소하고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평화의 토대에 선 한반도를 건설해야 한다는 열망이 온 사회를 뒤덮고 있습니다.

한반도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전환점에서, 가장 절실한 것은 격화되는 한반도 군사위기를 지금 여기서 멈추게 하는 일입니다. 군사위기를 진정시키고 평화의 물꼬를 트는 '대 전환'을 시작하는 것이야말로 훗날 향경의 본령을 잇는 것입니다.

'평화롭고 안전한 한반도 만들기'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하나. 한반도 일대에서 군사적 긴장을 격화시킬 모든 군사적 행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지금 한국사회는 촛불 항쟁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과 조기 대선을 눈앞에 둔, 가장 민감한 시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봄 이시기는 한미연합 키리졸브-독수리 훈련을 둘러싸고 한반도의 군사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민감한 전환의 시기에 한미 양 당국이 2월 초부터 선제적으로 군사훈련 강화를 선언하고 추진하는 것은 극히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한미 당국은 최소한 군사훈련을 한반도 역내에서 공개 무력시위 형태로 집행하는 것만은 반드시 중지해야 합니다. 지난 2월 12일 북극성 2형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 북한 또한 더 이상의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시험 등 추가적 긴장조성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 당사국간 긴장완화와 평화를 위한 협상을 신속하게 시작해야 합니다.

지난 10여년간 한반도에서 대화와 협상이 중단된 만큼 군사적 긴장도 격화되어 왔습니다. 일방적인 군사적 압박과 행동으로는 결코 어떠한 갈등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드러난 만큼, 당사국간 양자, 다자 방식으로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실현을 위한 대화와 협상을 신속하게 시작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하나. 남북대화와 인도적 지원, 민간교류를 재개해야 합니다.

대화와 교류는 갈등 완화와 해결을 위한 첫 단계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심지어 전쟁국면에서도 대화는 필요하며, 인도적 지원과 민간교류 역시 계속되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남북 대화 통로가 모두 단절된 상황에서는 사소한 갈등이 군사적 충돌로 비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며 상호간 불신과 대결의식만 강해질 뿐입니다.

남북 당국간 대화를 재개하여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민간의 다양한 교류와 인도지원 또한 갈등 완화와 신뢰 회복의 견지에서 적극 보장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군사위기와 전쟁구조, 그리고 냉전의 직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우 일관되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사회와 언론, 정당 등 정치사회 모두가 높은 자각을 가지고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사회에서 최근 이른바 '북한 위협'을 앞세운 안보 장사, 갈등 조장 행태가 횡행하고 있고 더구나 정부와 일부 정치세력이 그에 앞장서고 있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정당과 정치사회가 이런 안보장사와 갈등유발 행태에 제대로 제동을 걸지 못하고 심지어 무비판적으로 추수하고

있는 것 또한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유엔안보리조차도 제재와 대화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말하는 마당에, 유력 대신주자들 누구도 즉각적인 대화와 관계개선 노력을 진지하게 촉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사활을 걸고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한반도 군사대결을 현재화시킬 한미의 첨단 전략무기 투입과 공개 무력시위에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제재와 강경정책으로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비전을 밝힐 수 없으며, 대화와 협상을 선도하지 못하는 정치세력은 이 복잡한 분단체제를 결코 극복할 수 없습니다.

중대한 이 전환기에 평화의 대세를 형성하기 위한 정치권의 역할을 촉구합니다.

2017년 3월 1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사드 배치 강행 중단 촉구 비상 시국회의 결의문]

한미 당국의 사드 배치 강행 즉각 중단하라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파면되었습니다. 시민들이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승리의 기쁨을 뒤로하고, 침담한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박근혜 정권 최악의 외교안보 참사로 꼽히는 사드 배치가 강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6일 저녁, 한미 당국은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정세를 틈타 사드 체계 일부를 주한미군 오산기지에 들여왔습니다. 미군에 부지를 공여하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조기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사드 배치를 되돌릴 수 없도록 만들려는 한미 당국의 행태를 지켜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으로부터 탄핵당한 정권이 군사작전을 하듯이 강행하고 있는 사드 배치는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한국 어디에도 사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 방어용이 아닙니다. 사드 배치는 한국이 한미일 MD에 참여하여 중력을 견제하기 위한 미-일 군사동맹의 하위 파트너가 되겠다고 공식화하는 결정입니다. 한반도-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할 것이 명백한 이 선택 때문에 한국은 미-중 갈등의 희생양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경제 보복을 시작했고 동북아에는 질적으로 다른 군비 경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는 사드 배치의 명분인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뿐 아무런 이익이 없는 사드 배치는 철회되어야 합니다.

사드 배치로 평화롭던 작은 마을이 어느 날 갑자기 최전방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드 배치로 미군기지가 들어서게 되는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는 평화를 교리로 하는 원불교의 성지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성주와 김천의 주민들은 '한국 어디에도 사드 배치는 안 된다'고 외치며 작년 7월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평화의 촛불을 밝혀왔습니다. 원불교 교도들 역시 매일 국방부 앞에서 평화의 기도를 올려왔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 모든 목소리를 무시한 채 골프장 인근에 철조망을 치기 시작했고, 군 병력과 경찰이 출입 통제에 나섰습니다. 성주-김천 주민들과 원불교 교도들은 앞으로 사드 배치 관련 모든 장비와 공사 차량을 온몸으로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11(토)부터는 골프장 진입로에서 철야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드 배치 절차를 당장 멈출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대선 후보들과 제 정당은 사드 배치 중단과 원점 재검토를 한미 정부에 분명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탄핵당한 정부의 잘못된 결정을 재검토하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사드 배치에 관한 한미 합의는 아무런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원천 무효입니다. 주민 동의도, 국회 동의도, 사회적 공론화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과정은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했습니다.

곧래 사드가 배치된다면 한반도 평화는 더욱 요원해질 것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바라는 대선 후보와 정당이라면 사드 배치를 원점 재검토해야 합니다. 이에 동의한다면, 우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절차를 중단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정치권은 사드 배치를 밀어붙이고 있는 황교안 권한 대행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헌법을 위반하고,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 사드 배치를 강행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탄핵되어야 합니다. 한미 동맹만을 맹신했던 현 정부에는 의고가 없었습니다. 국회와 국민의 우려도 무시했습니다. 정부는 사드 배치에 따른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피해에 대한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거 시기 안보 논란을 조장하려 한다는 의혹도 지울 수 없습니다. 정부의 무능력과 무책임의 대가를 또다시 국민이 감당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전국의 시민들에게 호소합니다. 사드 배치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의 안위, 평화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사드 배치를 온몸으로 막아내겠다는 성주, 김천 주민들과 원불교 교도들의 결박한 호소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주시길 요청합니다. 평화를 원하는 시민들의 행동이 지금 절실합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3월 18일 토요일, 성주로 달려갑니다. 많은 분들이 전국에서 평화버스를 타고 평화의 발걸음에 나서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이후 전국 곳곳에서 이어질 평화행동과 국회가 나설 것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도 힘을 모아주시고, 사드 배치를 철회시키는 것이 이 땅의 평화를 위한 길이라 믿습니다.

2017년 3월 15일

사드 배치 강행 중단 촉구 비상 시국회의 참가자 일동 (개인 / 단체 총 697인 연명)

한미당국은 불법 반입 사드 레이더를 즉각 철거하라!

1. 한미양국은 지난 6월 발사대 2기와 일부장비를 반입했으며, 오늘 사드의 핵심 장비인 X밴드 레이더를 반입할 예정이다. 이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사드 배치를 되돌릴 수 없게 하려는 한미당국의 불손한 정략적인 의도에 따른 것이다. 한미 양국은 한미간의 합의사항이라며 사드배치를 강행하고 있지만 한미간 합의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원천무효이며 불법이다. 이에 우리는 사드 레이더를 비롯하여 불법적으로 반입된 사드 장비를 즉각 철거할 것을 한미양국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2. 지난 10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했다. 그러나 한미양국은 조기 대선을 포함한 국내 정치 상황과는 상관없이 사드 배치를 최대한 빨리 끝내겠다고 밝히고 있으며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사드 장비의 반입을 막무가내로 진행하고 있다. 이는 사드 배치를 박근혜-최순실의 최악의 적폐로 규정하고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해온 촛불의 민심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다. 또한 사드 배치 철회를 위해 2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촛불을 지켜온 성주, 김철 주민들과 원불교 고도들의 요구를 철저히 짓밟는 행태로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3. 한미양국은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 근거로 사드배치는 한미동맹의 결정이며, 한미간의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제프 데이비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10일 미국은 한국으로 사드 장비를 계속 보낼 것이라고 밝히면서 "(사드배치에 대한) 합의를 이행하는 데 애진하겠다." 고 밝혔다. 그러나 사드 배치에 대한 한미간 합의라고 하는 것은 실재도 없고 법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원천무효이며 불법이다. 지난 3월 1일 한민구 장관과 비공개 면담을 진행한 바 있는 더불어 민주당 송영길 의원에 따르면 "사드 문제와 관련해 국방부와 외교부 등에 관련 합의문서가 존재하는지 확인했는데, 결론적으로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고 밝혔다. 사드 배치에 대한 국제법적 지위를 갖는 외교 문건이 없다는 것이다.

4. 한미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하여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한미 공동 실무단 운용결과 보고서'는 적법한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해 서명되고 국내법적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작성되는

한미간 조약도 아니며 한미 국방당국간의 기관 간 약정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높은 국회 동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 따라서 사드 배치에 대한 한미간 합의의 근거로 사드장비를 반입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며, 즉각 사드 장비를 철거해야 한다.

5. 또한 한미양국은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 근거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가시화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한국 배치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 방어에 무용지물이다. 사드 한국 배치는 미국과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MD에 한국 편입과 한미일 동맹의 구축의 전인차가 될 것이다. 결국 사드 배치로 한국은 미국과 일본을 지켜주기 위한 전초기지로 전략하게 될 것이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는 위협받게 될 것이며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불러오게 된다.

6.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이끌어냈던 국민들은 파면된 박근혜의 부역자들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드배치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한미당국에게 지금이라도 군사적 효용성도 없고, 법적근거도 없이 불법적으로 추진되는 사드 배치를 중단하고 반입된 장비를 즉각 철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3월 16일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반대단체군추방평택시민행동

대북 제재와 압박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에 나서라!
불법적인 사드 배치 강행 중단하라!

텔러슨 미 국무장관이 17일 방한하여 황교안 총리와 윤병세 외교장관을 만나 북핵공조와 사드 배치 문제를 논의한다. 그러나 이 의제들은 자기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 수립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면당한 박근혜 정부의 부역자들이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는 것은 가당치 않다. 더욱이 박근혜 정부를 파면으로 이끌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건설을 요구하고 있는 촛불 민심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 왔던 대북 적대정책의 전환과 사드배치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한미당국이 촛불 민심에 따라 대북 적대정책을 폐기하고 사드 배치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미 당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빌미로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강화해 왔다. 이번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도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과 세컨더리 보이콧을 포함한 중국을 대북 압박으로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나아가 한미 당국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과 체제 붕괴까지를 노리는 한미연합연습이 진행되고 있다. 대북 선제공격의 핵심 전력이라고 할 수 있는 핵 항공모함이 부산항에 입항했으며, 전략폭격기 B-1B도 한반도에 전개되어 영일 훈련장에서 폭격훈련을 진행하였다. F-35B도 조만간 한반도에 전개될 예정이다. 그런데 이 같은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은 북핵 문제를 해결해오지 못하고 오히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강화로 이어졌다. 텔러슨 미 국무장관 스스로도 "지난 20년간 미국의 대북정책이 실패했으며 북한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며 미국의 대북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있다.

최근 미국 전직 관리들을 중심으로 북미간 '트랙 1.5'(반민관) 대화를 위한 물밑접촉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키리졸브 독수리연습이 끝난 후 북미 대화가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도 제기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말로 한미당국이 핵문제 해결을 위하여 조건 없이 대화와 협상에 나서야 할 때다. 한미당국은 이제라도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을 중단하거나 대폭 축소하고 북한도 이에 상응하여 핵과 미사일 실험을 유예함으로써 대화에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나아가 양자, 다자회담을 재개해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폐기와 한반도 비핵화를 함께 실현하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나서야 한다.

한편 한미당국은 불법적으로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있다. 지난 6일 사드 발사대 2기와 일

부 장비를 반입했으며, 사드의 핵심 장비인 X밴드 레이더도 곧 반입될 예정이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는 한국의 정치적 상황에서 한미당국이 사드 배치를 기습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정권교체 이후에도 이를 되돌릴 수 없도록 하려는 사드배치 '대못박기'라 할 수 있다.

한미당국은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 근거로 사드 배치가 '미국과 한국이 공동으로 한 동맹 결정'이며 '한미간의 합의사항'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제프 데이비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10일 미국은 한국으로 사드 장비를 계속 보낼 것이라고 밝히면서 "(사드배치에 대한) 합의를 이행하는 데 빠진다고 했다." 고 밝혔다. 그러나 한미간의 사드 배치에 대한 국제법적 지위를 갖는 외교 문건이 전혀 없다. 이는 한국의 국방부와 외교부도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실체도 없고 최소한의 법적 근거도 갖추지 못한 사드 배치에 대한 한미간의 합의는 원천무효이며, 이를 근거로 추진되는 사드 배치는 불법이다.

또한 한미당국은 사드 조기 배치를 강행하는 또 하나의 근거로 점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비를 내세운다. 그러나 한국 배치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남한을 방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중국을 적으로 돌려 우리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된다. 이미 중국의 경제보복은 시작되었으며, 계속 사드 배치가 강행된다면 중국은 이미 공언한 대로 추가적인 군사적 조치에 나서게 될 것이다. 군사적 효용성도 없고 우리에게 그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 백해무익한 사드 배치는 철회되어야 한다.

파면된 박근혜의 부역자들은 대북 적대정책의 강화와 사드 배치 강행 등 미국의 요구를 추종함으로써, 미국을 뒷배 삼아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나아가 정권재창출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 미국은 이 틈을 악용하여 사드 한국 배치를 비롯한 한미일 MD 및 동맹 구축을 통해 중국을 포위하려는 자국의 패권전략에 한국을 동원하고 있다. 그러나 1700만의 촛불은 이 같은 한미당국의 행태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고 자주적이고 평화로운 나라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한미당국에게 대북 제재와 압박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의 핵과 평화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불법적인 사드 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3월 17일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 국민행동,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성명서]

사드 원천무효! 사드 가고 평화 오라!
폭력으로는 평화를 절대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참담한 현실에 슬픔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 롯데골프장에 국방부를 비롯한 단핵당한 정부와 미군이 자기를 마음대로 불법적으로 사드를 들여놓으려고 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경찰을 내세워 도로를 통제하고 기도하는 원불교 성직자와 시민들에게까지 폭력을 사용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지난 3월 18일 토요일 이곳 소성리에는 전국에서 수천 명의 촛불 시민들이 모여 사드배치 철회의 목소리를 함께 내며 롯데골프장으로 평화집회를 하고 평화행진을 했다. 평화행진 대오가 원불교 교무들의 기도장소에 천막을 치고 진밭교를 지나 숫자가 적어졌을 때였다. 평화롭게 천막을 치고 종교인들과 시민들이 앉아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경찰병력이 증원되고 "밀어버려, 들어서 모두 밀어버려"라는 경찰 지휘관의 명령과 동시에 사건 경고나 통고도 없이 세워진 천막을 에워싸고 기도 중인 원불교 성직자들이 위협을 느낄 정도로 무지막지하게 밀고 들어와 천막을 부수었다.

이를 막아선 시민들에게 크고 작은 상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에게 항의하는 여성을 실신하게 만들어 119구급차로 병원에 실려가게 만드는가 하면, 여성 성직자를 남자경찰들이 막무가내로 밀어내면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기도 했다. 또한 여성 활동가가 원불교 성직자 분들이 밭힐 수 있으니 뒤로 물러서라고 호소하는데도 개의치 않고 오히려 남자경찰들이 수명이 밭꿈치로 찍어누르고 밀고들어오면서 천막을 때려부수는 데만 급급해 시민의 안전이나 인권을 전혀 염두에 주지 않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천막을 무지막지하게 부순 경찰들은 곧 뒤로 물러섰지만 제대로 된 경찰 지휘관의 해명이나 사과 없이 다시 시민들이 새로 천막을 쳤다는 이유로 시민들을 위협하며 강제해산을 종용했다. 다시 철야연좌기도터에는 평화천막 설치가 완료된 상태였고, 경찰이 아닌 시군 관계자가 행정 집행해야 한다는 법학자와 변호사가 범칙 근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시민들을 위협하는 경고 방송을 멈추지 않았다.

불법으로 이 평화로운 마을 소성리에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것도 통탄스러운 일인데, 이렇게 원불교 성직자들에게 위협을가하는 폭력 상황이 벌어지는 상황이라면 앞으로 나이 든

소성리와 마을 주민들에게 어떤 폭력을 행사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여성들이 섞인 평화집회와 행진에 여경 배치도 없이 최소한의 안전 대응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천막을 쳤다는 이유만으로 사전에 협의나 대화도 없이 시민들에게 일방으로 폭력을 사용하도록 지시한 경찰 책임자는 마땅히 이 폭력 사태에 대해 해명하고, 공개사과와 함께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경찰은 이러한 폭력사태의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할 것이며, 경찰을 포함한 모든 불법 조장 세력에게 평화를 원하는 시민과 종교인을 상대로 더 이상 폭력 상황을 조장하거나 일으키는 우를 결코 범하지 말 것을 강력하고 엄중하게 경고한다.

또한 우리는 사드가 우리 성주 소성리에서 한반도에서 완전히 물러갈 때까지 모든 폭력적 상황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며, 모든 법적 대응을 불사해 맞서 나갈 것이며, 인권을 유린 당하는 사태를 절대 묵고하지 않고 결사의 결의와 연대로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2017년 3월 20일

사드배치철폐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집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천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원회(가)

[성명서]

막무가내 사드 배치를 중단시킬 골든타임
국회는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라
권한쟁의심판 청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야3당 특위 구성과 종합적인 검증 시급해

1. 만행당한 정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사드 배치를 막무가내로 강행하고 있다. 지난 3월 6일, 한미 당국은 미군에 부지 공여도 전에 사드 장비 일부를 한국에 반입했다.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 그러나 국회는 작년 7월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지난 8개월 동안 사드 특위 구성은커녕 사드 배치에 대한 기본적인 검증도 하지 못했다. 국회에 거짓을 보고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한미군 국방부 장관의 책임도 묻지 못했다.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책임을 사실상 방기한 것이다.

2. 사드 배치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 환경을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주권을 침해하며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사안으로 '조약'으로 체결되어야 한다. 국회 동의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의 한미 간 합의는 합의문도 없고 법적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 조약도, 기관 간 약정도 아니다. 주민 동의도, 국회 동의도, 사회적 공론화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과정은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했다. 모든 절차가 불법과 편법으로 얼룩져있다. 이 잘못된 정책을 국회가 중단시키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지 않은가.

3. 국회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정부의 일방적인 특주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그동안 정세균 국회의장을 포함해 수많은 의원이 국회 동의 절차를 밟으라고 요구해왔다. 군사적인 효율성과 절차의 불법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수차례 있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를 철저히 무시했다. 이러한 정부의 행위는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 명백하므로 국회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이대로 사드가 배치된다면 그 피해는 모두 국민이 당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따라서 사드 배치 결정의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도 하루속히 신청되어야 한다.

4. 더불어 야3당은 작년 8월에 이미 합의한 야3당 사드 대책 특위를 빠르게 구성하고 검증에 나서야 한다. 한미 당국은 현재 부지 공여를 위한 SOFA 합동위원회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외교부는 협상 개시를 승인한 문서의 정보 공개를 거부했고, 협상 계획이나 입정도 일체 공개되지 않았다. 「국방-군사시설사업법」에 따른 사업계획 공고,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의 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그뿐인가. 기본 설계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이미 진행하고 있다. 사드 배치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해당하며, 국방부는 사드 기지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멋대로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상황이 이 지경이 될 동안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 약정서,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 결과 보고서, 부지 평가 보고서 등 기본적인 문서를 국방부가 한미 2급 비밀로 지정하여 비공개한 것을 포함해 그 어떤 것도 국민과 국회에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 국회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사드 배치에 대한 종합적인 검증에 나서야 한다. 현장 방문과 조사도 시급하다.

5. 사드 배치 결정으로 평화롭던 작은 마을이 어느 날 갑자기 최전방이 되어버렸다. 160여 명이 살던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에 현재 집계는 2천여 명의 경찰과 군인이 상주하고 있다. 성주·김천 주민들과 원불교 교도들은 앞으로 사드 배치 관련 모든 장비와 공사 차량을 온몸으로 막겠다고 밝혔다. 골프장 진입로에서 철야 농성이 2주째 이어지고 있다. 국회는 언제까지 정부의 독주를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인가?

6.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면서 국회는 첫 번째로 헌법 제1조를 언급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지금이 바로 국민이 부여한 그 권한을 행사할 골든타임이다. 국회는 최선을 다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라. 끝.

2017년 3월 24일

사드배치철폐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지금도 사드 배치를 중단시킬 골든타임, 국회는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라

탄핵당한 정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사드 배치를 막무가내로 강행하고 있다. 지난 3월 6일 한미 당국이 미군에 부지를 공여하기도 전에 사드 장비 일부를 한국에 반입한 것을 포함해 현재 사드 배치 과정은 온통 불법 루성이다. 그러나 지금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작년 7월 한미 당국이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한 이후 지난 8개월 동안 국회는 사드 특위 구성은커녕 사드 배치에 대한 기본적인 검증도 하지 못했다. 불법과 편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드 배치 절차에 대해서도 방기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국회는 행정부를 제대로 감시, 견제하라고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야 한다.

현재 정부의 행위는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 명백하므로, 국회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정부의 일방적인 독주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사드 배치 합의는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대한 재정적 부담 지우는 조약'을 체결하는 것에 해당하지만, 국회는 헌법 60조에 보장된 동의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했다. 국방부는 890억 원 규모의 군 재산을 롯데에게 주고 사드 배치 부지인 골프장을 확보했고, 국방부는 시설을 건축과 운영에 드는 비용을 방위비분담금을 통해 충당할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명백히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는 사업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정세균 국회의장을 포함해 수많은 국회의원이 국회 동의 절차를 밟으라고 요구해도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야당 일각에서 검토 중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더 이상 늦추어서는 안 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방부가 주민 동의, 국회 동의, 사회적 공론화도 없이 사드 배치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위헌적 행위이다. 국방부는 「국방·군사시설사업법」에 따른 사업계획 공고,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뿐만아, 사드 배치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해당하며, 국방부가 사드 기지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기본 설계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이미 진행하고 있다. 국방부 스스로 국내법을 전혀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위법 행위의 연속이다.

야3당은 작년 8월에 이미 합의한 야3당 사드 대책 특위를 빠르게 구성하고, 국회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보 공개를 요구하여 종합적인 검증에 나서야 한다. 아무런 별

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드 배치에 대한 한미 간 합의부터 조사되어야 한다.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 약정서,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 결과 보고서, 부지 평가 보고서 등 기본적인 문서를 국방부가 한미 2급 비밀로 지정하여 비공개한 것을 포함해 어떠한 것도 국민과 국회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부지 공여를 위한 SOFA 합동위원회의 협상 관련해서도, 외교부는 협상 개시를 승인한 문서의 정보 공개를 거부했고, 협상 계획이나 일정도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회 차원의 현장 방문과 조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사드 배치 결정으로 평화롭던 작은 마을이 어느 날 갑자기 최전방이 되어버렸다. 160여 명이 살던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에 현재 말제는 2천여 명의 경찰과 군인이 상주하고 있다. 성주-김천 주민들과 원불교 교도들은 앞으로 사드 배치 관련 모든 장비와 공사 차량을 은폐으로 막겠다고 밝혔다. 골프장 진입로에서 철야 농성이 2주째 이어지고 있다. 국회는 언제까지 정부의 독주를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을 반핵 소수하면서 국회는 첫 번째로 헌법 제1조를 언급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지금이 바로 국민이 부여한 그 권한을 행사할 골든타임이다. 국회는 최선을 다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라.

2017년 3월 28일

사드배치철폐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한반도 전쟁도박 중단하라!
'우리 여성들은 전쟁대신 평화를 위해 행동한다'

지난달 부산항에 입항하여 독수리 훈련에 참가한 후 싱가포르에 배치되었던 미국 원자력 항공모함 칼빈슨함(CVN-70)이 예정 경로를 변경하여 한반도 인근으로 재배치된 후,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과 공동으로 훈련하는 방안을 마일 양국이 조정 중이라는 언론보도가 이어졌다. 미국 태평양사령부는 감에 있던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RQ-4) 5대를 다음 달부터 일본 도쿄 요코다 기지에 전진 배치하면서 "일본의 안보와 지역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미중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국가안보회의(NSC)가 트럼프 미국대통령에게 '남한 핵 배치·선제공격'을 제안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맞서 모든 선택지를 열어놓고 있으며 행동할 때는 단호하게 할 것'이라는 미 백악관 대변인의 발언, '중국이 나서지 않으면 미국 혼자서 하겠다'는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수차례 경고 발언 등 북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미국의 다층적이고 강도 높은 압박이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군사적 행동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기본 입장으로 고수하고 있으나, 서해에서 훈련 중이던 중국 항공모함 라오닝호는 한반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해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이른바 '한반도 4월 위기설'에 대해 국방부와 외교부는 근거가 없다고 하지만, 불안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칼빈슨호를 재배치 하는 등 미국의 군사적 행동이 북한을 타격하려는 움직임일 수 있다는 우려는 한반도의 평화와 대한민국의 국가안보가 미국과 주변 강대국의 이해관계 속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국가안보가 미국 주도의 전쟁위협이나 군사행동으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언론 또한 연일 한반도 전쟁가능성에 대해 경정적으로 보도하고 있지만, 이 중 일부는 거짓이거나 근거없는 가짜뉴스로 확인되기도 했다. 전쟁불안감을 조장하는 차원을 넘어서 대동맹선거를 앞두고 의도적인 선거개입은 아닌지 의심하기에 충분한 상황이다.

우리 여성들은 전쟁의 참화가 여성과 아이들에게 어떤 고통을 가져왔는지 기억하고 있다. 또한 민생과 민주주의 파괴, 인권유린을 묵인하고 합리화한 것이 바로 전쟁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기억하고 있다. 우리 후손에게 더 이상 민족상잔의 비극을 물려줄 수는 없다는 사실도 분명히 알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전쟁대신 평화를 염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반드시 2017년에는 적 폐청산과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겠다는 결심으로, 우리 여성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미국의 군사적 행동 반대한다
- 적대정책 폐기하고 대화와 협상에 나서라!
- 전쟁 위협 중단하고 평화협정 체결하라!
- 대선 앞둔 안보위기 조장행위, 즉각 중단하라!

2017년 4월 13일

사드반대 전쟁반대 세계여성평화행동

[긴급제언]

“한반도 주민을 불모로 하는 일체의 군사행동에 반대한다” 한반도 무장충돌 방지와 남북관계 단절 극복을 위한 시민사회의 긴급제언

한반도가 또 다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북한의 판도미사일 발사로 군사적 위기가 고조된 지 채 얼마 지나지 않아 ‘한반도 4월 위기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핵실험이나 ICBM 공개 가능성을 내비치는 북한과 전략자산을 한반도와 그 인근에 집중시키면서 선제타격 가능성마저 시사하는 미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하기 힘든 행보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불안감 역시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무례시위 한 가운데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주민들, 대통령 파면과 조기 대선을 이끌어낸 주권자의 목소리가 전달될 통로는 막혀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외면한 채 군사적 대결만 내세우는 지금의 한미 당국과 북한에게 더 이상의 자극적 군사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북한은 한반도와 동아시아를 군사적 갈등으로 치달게 하는 핵미사일 시험을 중단해야 합니다. 어떤 국가도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인 핵무기를 개발, 보유하고 이를 운반, 발사하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전술핵무기 재배치와 대북선제타격론 논의는 더욱 용납할 수 없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명분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 주민들을 무장충돌의 비극으로 끌어넣을 수 있는 무책임한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일각에서 제기되는 선제공격론은 과연 우방국 정부가 이 땅에 실제로 살아가는 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존중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극도의 긴장 속에서는 어느 측의 사소한 오해나 우발적인 행동이 심각한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충돌의 가장 큰 피해자는 북한의 김정은 정권도 미국의 트럼프정권도 아닌 한반도 주민인 우리 자신이 될 것입니다. 이 엄중하고 부조리한 상황 앞에서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시민사회가 각별한 지혜와 의지를 발휘해야 합니다. 현 상황을 냉정하게 진단하여 최소한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고 가능한 수준에서 위기를 해소하고 문제를 해결할 돌파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우선,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한반도의 위기가 과연 군사력 부족이나 무력 사용을 공언하면서 상대를 압박하는 적대행위가 부족해서 초래된 것인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도리어 무력과 억지만이 해법이라는 군사일변도의 시각이야말로 지금의 위기를 만들어낸 근본 원인일 수 있습니다. 군사적 대결상태 속에서는 상대방을 굴복시켜야 한다는 군사주의가 힘을

얻고 신뢰구축과 협상을 모색하자는 목소리는 힘을 잃게 됩니다. 요즘처럼 남북 간의 핫라인조차도 완전하게 단절된 상태에서는 서로의 행위에 대한 주관적 예측이 난무하게 되고 이것이 또 다른 오해와 불신으로 확대되기 쉽습니다. 이러한 남북 간 관계의 완벽한 단절과 대결일변도의 상황은 주변강국들에게 한반도 상황에 간여할 빌미를 주고 패권추구를 정당화할 구실을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한반도를 패권경쟁의 불모로 만들고 한반도 주민들의 민주적 자기결정권과 평화적 생존권을 제약하는 악순환을 야기합니다.

군국적 해법에 대한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에 사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 땅에서 군사적 충돌이 재발되어서는 안된다는 분명한 원칙에 합의할 수는 있습니다. 더 불어 최소한 불필요한 오해나 불신으로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예방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들을 재건하는 것도 함께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행동이 신뢰와 협력을 되살리는 작은 물꼬가 되어 점차 남과 북, 그리고 한반도 주변의 나라들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대전환을 야기할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 군사위기의 해소와 평화 구축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동포시민들에게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호소합니다.

하나, 한반도에서 어떠한 무력의 사용도 절대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한반도에 조성된 위기가 어느 일방의 무장공격이나 군사적 충돌로 비화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선제공격 같은 수단이 한반도 주민들의 합의 없이 사용되는 것을 결단코 막아내야 합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에 대해 단호한 반대의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나아가 무장충돌의 가능성을 키우고 한반도 주민들의 평화롭게 살아갈 권리를 훼손하는 어떠한 종류의 군사적 위협, 적대 행위, 과잉대응에 대해서도 단호히 반대해야 합니다. 상대를 힘으로 굴복시키겠다는 발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도 국민의 안전도 지킬 수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 남북 당국은 우발적인 군사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단절된 군사 핫라인을 재연결해야 합니다.

적대적 상황이 지속될수록 불필요한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수단이 절실합니다. 현재 남북 간에는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군사적 소통창구마저 차단된 상태입니다. 국민들은 아무런 조기경보나 예고 수단도 없는 상태에서 전쟁위기의 불모가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의 군사적 충돌을 원하지 않는 대다수 국민들의 바람에 호응하고자 한다면 한반도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군사 채널부터 시급히 복구해야 합니다.

하나, 남북 간 대화를 조건 없이 재개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심지어 전쟁국면에서도 대화는 필요합니다.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있습니다. 각각의 정점들은 하나같이 오랜 적대와 갈등관계에서 비롯된 것들로 누적된 불신의 벽을 단번에 허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화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에서 매우 중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차기 정권을 담당할 후보들은 어떤 경우에도 최소한의 대화 창구를 이어가겠다는 것을 공약해야 합니다.

하나, 인도주의 협력과 사회문화 교류는 조건 없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도적 협력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국제사회는 제재를 이유로 인도주의 협력이 제한되어서는 안된다고 일관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과거 박근혜 정권도 인도주의 협력만큼은 조건 없이 지속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당국 간 관계단절을 이유로 최소한의 사회·문화적 민간 교류마저 단절될 이유도, 근거도 없습니다. 당국 간 갈등관계가 지속되더라도 민간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 한반도 문제의 해결은 궁극적으로 남과 북, 특히 남한의 민주적·평화적 역량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가올 대선에서 주권자인 국민을 솔직하게 만들고 위험에 빠뜨릴 무모한 힘 자랑 대신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지혜로운 대통령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드 배치나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와 같이 중대한 외교·국방 결정을 내리기 전에 국민과 국회에게 먼저 그 타당성을 묻고 그 뜻을 따르는 행정부 수반을 찾기를 원합니다. 남북관계의 단절을 조금이나마 완화하고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지금보다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들에 대한 건설적인 토론이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무엇보다도 주권자인 국민들의 평화적 생존권과 민주적 자기결정권이 온전히 존중되고 행사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평화적인 촛불혁명을 이끌어낸 시민의 역량이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일에도 발휘될 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017년 4월 14일

한반도 평화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기자회견문]

사드배치, 트럼프의 한반도 전쟁위기 조성과 대선개입을 규탄한다!

지금 대한민국에 큰 재앙이 자라고 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대대로 일궈온 모든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명마저도 맞아갈 수 있는 위협한 전쟁이 외세에 의해 자행되려는 움직임이 있다.

우리는 미국과, 미국을 추종하는 매국세력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사드배치에 절단코 반대한다. 그리고 작금에 미 대통령 트럼프에 의해 조성되는 한반도 전쟁위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트럼프 행정부에게 더 이상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해치는 그 어떤 행동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그리고 트럼프의 기행이 충추는 황교안을 비롯한 이 정권의 허수아비 관료들에게도 경고한다. 그대들은 어느 나라, 누구의 공복인가?

이제 더 이상 사드배치를 진척시키지 말라.

야무 범적 근거도, 국민적 합의도 없이 임의적으로 사드배치를 추진함으로써 이 나라를 다시금 전쟁의 참화로 몰아넣는 매국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가장 무거운 벌로 다스려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 국민의 의사에 반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깨뜨리려는 나라 안팎의 그 어떤 기도와 결정도 거부한다.

2017. 4. 13

장준하부활시민연대 공동대표 김범태, 여인철,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미 펜스 부통령의 방한에 즈음한 우리의 입장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의 플로리다 정상회담 후 평화구축을 바랐지만 한반도의 전쟁 위기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어지는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 시진핑의 새로운 대북제재, 트럼프의 사전공격명령 등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일촉즉발의 현상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은 답답하고 침담하기 이를 데 없다. 북핵 방어용이라고 하는 한반도의 사드 배치 전략은 오히려 평화를 위협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17일 미 펜스 부통령이 방한을 하면서 동행한 외교안보보좌관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 차기 대통령이 결정할 일”이라는 말을 했다는 소식이 국내 언론에 의해 널리 알려졌다.

촛불의 민심은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린 박근혜 정부를 파면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에 우리들은 한미 당국이 촛불 민심을 받들어 사드 한국 배치를 철회할 것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길을 열어 나갈 것을 촉구한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우리 국민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지 않고 이뤄지는 모든 협의나 결정은 무효이며, 우리 국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임을 다시 한 번 엄중히 경고한다.

온전한 평화를 위해 사드배치 지역에서 24시간 뜬눈으로 기도하며 싸워 나가고 있는 우리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파면당한 박근혜 정부의 부역자인 황교안, 한민구, 윤병세, 김관진 등은 불법 사드배치 정책 질차를 즉각 중단하라!
2. 사드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미국과 한국 정부는 사드배치 관련 절차를 즉각 멈추고 차기 선출된 대통령 및 새로운 정부와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3. 한반도에 전쟁위험 가중시키는 어떠한 힘의 논리나 행위에 단호히 반대하며, 미국과 중국, 북한 그리고 한국은 지금 당장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개적이고 실질적인 대화에 나서라!
4.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려는 대신 후보들에게 요구한다. 강대국의 입장에 기대지 않고 주권재민의 입장에서 사드 문제 해결을 위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해결 소통의 시스템을 즉각 가동하라.

2017년 4월 17일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공동성명]

〈한미당국의 사드 부지 공여 결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

한미 당국의 사드 부지 공여 합의는 원천무효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1. 4월 20일, 한미당국은 사드 부지 공여 절차를 마무리 했다. 이로써 미국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주도권을 행사하고 우리는 30여만㎡에 달하는 땅을 미군기지로 내주게 되었다. 우리는 우리의 영토주권을 침해하고 주변국을 위배하면서 추진된 한미당국의 사드 부지 공여 합의는 불법으로서 원천 무효임을 선언한다.

2. 주한미군에게 사드 배치에 필요한 부지를 공여할 경우, 해당 공여지에 대하여는 우리의 통제력이 사실상 전면적으로 제한된다는 점에서 영토주권에 심각한 제약을 가져오게 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중대행위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외교안보 당국자들에 의해, 그것도 파면당한 박근혜 정부의 부역자들에 의해 국회와 주민동의도 없이 강행된 것은 최소한의 정당성마저 결여한 것으로 원천 무효이다.

3. 사드 배치는 '차기 대통령이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여론이다. 그런데도 대신을 불과 19여일 앞두고 강행된 사드 부지 공여는 권력의 원천인 주권자를 철저히 무시하는 '사드 압박기'로 차기 대통령의 선택을 제한하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는 국익과 주권을 외면한 채 오로지 대미 의존의 우충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것을 통해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해보려는 외교안보 관료들의 무책임성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4. 또한 사드 부지를 미군에 무상으로 공여하는 것은 국유재산특별관계법 강행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법적 근거가 전혀 없기에 원천 무효이다. 한미 사이에는 주한미군의 사드 도입과 배치와 관련하여 권리와 의무를 창설하는 국제법적 지위를 갖는 합의문이 없다는 점에서도 불법으로 원천 무효이다.

5. 이에 우리는 국방부의 사드 부지 공여를 강력히 규탄하며 불법적인 사드 부지 공여를 즉각 무효화하는 한편 사드 배치 관련한 일체의 행위를 중단할 것을 정부 당국에 요구한다. 우리는 박근혜 파면을 이끌어 냈던 촛불시민들과 함께 불법적이고 정당성을 결여한 사드 부지 공여를 무효화시키고 사드 배치 즉각 중단과 철회를 위해 온몸을 던져 싸워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2017년 4월 21일

사드배치철회성주부경위원회,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완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 찬성 당론을 즉각 철회하라!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상임 선대위원장장을 맡은 박지원 대표가 24일 사드 한국 배치와 관련하여, "사실상 당론이 (찬성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사드 찬성 입장에 대해서 주승용 원내대표와 합의를 해 일단 서면으로 결의를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안 후보가 사드 반대 당론 수정을 요구했다"면서 이를 검토하겠다고 한 발언을 실행에 옮긴 것이다. 우리는 국민의당이 주민들을 배신하고 국가의 안위를 내팽개치면서 사드 찬성으로 돌아선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다'며 사드 배치에 대한 국민투표까지 주장했던 안철수 후보는 조기 대신이 가시화하면서 사드 찬성 당론 채택을 주도했다. 안 후보는 자신의 입장 변화에 대해 상황이 변화했다면서 지난 해 10월 20일 47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의 한미 국방장관 간 '합의'와 지난 해 9월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을 들고 있다. 그러나 SCM에서 나온 공동성명은 18개항 중 "사드 배치 공약을 재확인"한다는 문구가 들어있을 뿐 법적 구속력을 갖는 합의가 전혀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는 "사드 관련한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보고서를 제외한 별도의 합의서는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다. 또한 사드로는 북핵 미사일로부터 남한을 방어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사드 한국 배치 찬성의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결정적으로 안 후보는 이를 '상황 변화' 이후인 지난 해 11월 13일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대선에서 보수층 지지를 얻기 위해 사드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앞뒤가 맞지 않는 근거를 대고 있는 것이다.

안 후보는 국익을 내세우면서 "한미 간 사드 배치 협약을 함부로 뒤집는 것은 국가 간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미 간 사드 배치에 관한 법적 구속력을 갖는 합의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이런 주장은 애초부터 성립하지 않는다. 최고 수준의 국가 간 합의인 조약도 일반적으로 수정과 폐기 조항이 있다는 점에서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합의를 바꿀 수 없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의 주권을 제약하고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며 경제에 심각한 타격과 부담을 주고 주민생존권을 해치는 사드 배치가 불법적으로 강행되는 것을 그대로 용인하는 것이야말로 국익을 해치는 것이다. 안 후보의 이런 주장은 한일 위안부 아합을 외교적 참사라고 규정하고 폐기를 주장하는 자신의 입장보다 배치되는 것이다. 미국 요구에 따라 주한미군기지가전협정을 개정하거나 한미FTA를 재협상한 사례도 있고, 트럼프 정부도 한미FTA 재협상을 거론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 후보의

주장은 설득력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사대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만 하다.

우리는 지난 해 8월 상주를 직접 방문하여 사드 반대를 목청껏 외쳤던 박지원 대표와 국민의당의 모습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지난 1월 성주·김천·원불교가 진행한 <사드 한국 배치의 국회 동의를 요구하는 국회의원 서명운동> 당시 국민의당 21명의 의원이 "사드 한국 배치 결정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사안이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드 배치 절차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내용에 서명한 사실도 잊지 않고 있다. 그러던 국민의당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외롭고 험겨운 싸움을 전개하고 주민들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그들이 내세우는 국익을 훼손할 것이 뻔한 사드 배치 찬성으로 돌아서는 것은 도의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정당성도 전혀 없는 행위이다. 우리는 나라의 운명이 걸린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철학과 소신도 없이 당리당략에 따라 무책임하게 당론을 뒤바꾸는 국민의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사드 배치 찬성 당론을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2017. 4. 25.

사드배치철회성주부정위원회,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민심 짓밟고 사드 배치 못박으려는 한미 당국 규탄한다!
불법 반입한 사드 장비 즉각 철거하라!

오늘(26일) 새벽, 한미 당국이 사드 레이더와 발사대 등 주요 장비들을 소성리 롯데 골프장으로 전격 반입하였다. 이번 사드 장비 반입은 사드 부지 공여에 대한 한미간 합의가 있는 지 불과 6일만에 이뤄진 것으로, 공여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된 명백한 불법 조치이다.

한발을 틈타 기습적으로 사드 장비를 반입하는 과정에서 군당국은 경찰병력을 대거 동원하여 소성리로 향하는 모든 길을 봉쇄하고 평화기도회를 진행중인 원불교 고무들과 종교인들, 주민들을 폭력적으로 끌어내는 등 군사작전을 망분게 한 탄압을 서슴지 않았고, 결국 세명의 주민들이 병원으로 후송되고 수십명이 부상을 입는 등의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공여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기본설계와 시설공사는 시작조차 안한 상태에서 이처럼 폭력적이고 기습적으로 사드 관련 장비들을 우선 반입한 것은, 대선시기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며 대선 후 검토가 거론되고 있는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도록 못박기 위한 것이라고 밖에는 달리 해석할 수 없다. 한미 당국이 사드 장비 반입의 근거로 말하는 '북한의 위협'은 어제 오늘의 일이 결코 아니고, 최근의 4월 위기 또한 칼빈슨호 관련 거짓말 등 오히려 미국과 일본이 불을 지핀 사실이 속속 확인되는 등, 대선을 불과 2주 앞둔 지금 사드 장비를 기어이 반입해야 할 이유로는 결코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한미당국은 지난 주 펜스 미 부통령 방한을 전후하여 사드 배치는 환경영향평가와 시설공사 이후에나 될 것이라면서 사실상 대선 이후에 장비가 배치될 것이라고 언론에 거듭 밝히기까지 하였다. 한미당국이 협력하여 사드 장비 반입을 위한 대국민 사기극을 펼친 것에 다음 아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각계가 주권과 평화를 파괴할 조치라는 점에서 강력히 반대해 왔고, 대선 이후 차기 정부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압도적인 상황이었던 만큼, 대통령 파면상태의 사실상 과도정부인 황교안 대행체제나, 동맹국의 주권을 존중해야 할 미국 정부는 우리 국민의 결정을 기다려 겹쳐히 따라야 마땅하였다.

사드 장비를 기습적으로 반입함으로써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사드 배치 문제를 기정사실로 못 박으려는 한미 당국의 행태에 대해, 우리는 민심을 외면하고 주권과 자결권을

것밖은 조치로서 강력히 규탄한다!

한미 당국은 사드 장비 불법 반입 및 주민들에 대한 폭력 탄압에 대해 사과하고, 불법 반입한 사드 장비들을 즉각 철거하라!

사드 장비의 반입이 얼마나 진척되든, 사드 배치는 반드시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하며, 무효화 되어야 한다.

우리는 일방적이고 불법적인 사드 장비의 도둑 반입을 결코 인정할 수 없으며,

사드 배치 무효화를 위해 국민들과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주권과 자결권을 무시한 오늘의 이 폭거를 해결하고 사드 배치를 저지하는 데 대선후보들도 그 사명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4월 26일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사드한국배지지저지전국행동

[성명서]

대통령 후보들의 동성애 혐오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4월 25일에 열린 '2017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군대 내 동성애로 인한 국방력 약화'를 운운하며 동의를 구하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의 질문에 대해 극각 '동의'를 표시하면서 "나는 동성애를 반대한다.", "동성애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성혐오적인 발언과 성폭력 범죄 공모 관련하여 후보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홍준표 후보의 동성애 '혐오' 발언 요구에 '혐오' 발언으로 동조한 인권변호사 출신 문재인 후보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현재 여론조사 지지율 1위인 문 후보는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지속적으로 반동성애 행보를 보였다. 지난 2월 13일 보수 교계 연합기구 대표에게 "동성애나 동성혼을 위해 추가적인 입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라"는 입장을 전달했고, 그 직후 열린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제7차 포럼'에서는 자신의 성평등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성소수자 단체 활동가들의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에 거듭 자신의 반대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

동성애에 대해 그 누구도 찬성이나 반대의 입장을 가질 권리는 없다. 현재 군대에서 진행되는 동성애자 색출과 처벌은 반인권적 만행이다. 이에 동조하는 일부 대통령 후보들의 행태는 한국의 인권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반여성, 반소수자 후보인 홍준표 후보는 성폭력 범죄 공모에 가담한 자로 이미 후보 자격이 없다. '동성애 때문에 에이즈가 창궐되었다.'는 등 혐오 조장 발언을 하는 대통령 후보가 계속 존재하는 한 이 사회에 혐오로 인한 차별과 폭력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홍준표 후보는 혐오를 선동하는 선거 전략을 당장 멈추고, 사퇴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 문재인 후보는 여성을 포함한 소수자 혐오 세력에 기대어 성소수자의 치열한 인정 투쟁의 역사를 모욕하고 인권 수준을 퇴행시키는 저열한 선거 전략을 당장 멈춰야 한다. 모든 인간은 존엄하고 자유와 평등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성소수자 역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며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할 존재이다. 대통령 후보로서 동성애자를 반대한다는 인사를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것은 향후 우리 사회를 갖가지 이유로 차별과 혐오, 배제로 분열시켰다는 것이 다름 아니다.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대선 주자는 성평등 운운할 자격이 없다. 문

재인 후보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문 후보의 선거 캠프는 성소수자 권리를 보장하는 성평등 정책을 당장 공개하라.

2017. 4. 26.

한국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남여성회 기독교여성회 대구여성회
대전여성회 부산성폭력상담소 새울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제주여성회 제주여성인권연대 권덕정치연구소 여.세.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친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7개 지부 28개 단체)

대국민 사기극 사드 배치 원천무효
사드 비용 요구한 미국을 규탄한다!
미국은 불법, 기술 반입한 사드 장비를 즉각 철거하라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에 사드 한국 배치 비용 10억 달러(1조 1301억 원) 지불을 통보했다고 알려졌다. 사드 배치가 박근혜 정권의 대국민 사기극임이 드러난 것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오로지 미국과 일본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영토주권을 침해하고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며 한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과 부담을 안기는 사드 배치를 강제하더니 이제는 사드 비용까지 받아내겠다고 한다. 이는 한국이 부지와 기반시설만 제공하고 도입비와 시설비, 운영유지비는 미국이 부담할 것이라는 한국 정부의 주장을 뒤집는 것이다. 결국 사드 배치와 관련된 모든 부담을 한국이 떠안게 되는 것이다. 불법과 탈법, 꼼수와 거짓말로 사드 배치가 강행되었다는 것이 또 다시 확인되었다.

우리는 한미당국의 불법과 폭력, 사기와 전횡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의 주권과 생존을 위협하는 미국의 무도한 패권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사드 배치 강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사드 배치 강행에 앞장서온 김관진, 한민구, 윤병세 등은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임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한미 정부 간 합의(?)라는 구실을 내세워 사드 배치 용인해왔던 모든 대선 후보들의 각성을 촉구하며 즉각적인 사드 배치 중단과 철회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예초 사드 배치 합의는 조약의 형식으로 체결됐어야하나 지금 밝혀진 바로는 한미 국방부 당국자 사이의 임의합의에 불과한 것이었다. 법적 근거도 없고 국회와 주민동의 과정 없었던 불법적인 사드 배치에 이어 미 측의 사드 배치 비용 지불을 요구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사드 배치를 중단하고 철회해야 할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당국자들에 의해 저질러진 전횡과 독단을 손 놓고 지켜보던 국회와 정치권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 약정과 보고서, 청와대 NSC 회의록, 관계부처 장관회의 속기록 모두 공개하고 검증해야한다. 국회는 한미간 이면합의 가능성 등을 포함해 사드 배치에 관한 정부의 불법적 행위를 전면 조사하고 관련 책임자를 처벌하는데 앞장서라!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상식과 관련법을 뛰어넘어 불법과 거짓말로 일관된 한미당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 우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저지할 것이며, 국민들과 함께 미국의 패권적 행태를 바로잡을 것이다.

2017년 4월 28일

사드배치철폐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공동논평]

새 대통령에게 바란다

마침내 19대 대통령이 탄생했다.

이번 조기 대선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과 적폐세력 청산을 요구한 준엄한 촛불혁명의 결과다. 겨우내 광장을 밝힌 촛불 시민들은 적폐로 인해 도탄에 빠진 민생과 혐오와 차별이 난무하는 이 사회를 바꾸라 명령했다. 새로운 대통령은 이 부름에 응답해야 한다.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동안 성평등 의제는 국가 정책에서 실종되거나 주변화 되었다. 사실상 젠더거버넌스는 파기되었고, 성평등이라는 가치와 철학은 배제되었다. 그 결과 지난 보수 정권 10여년 동안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차별은 심화되었고, 소수자에 대한 혐오는 일상이 되었다. 소위 '준비된 여성 대통령' 시절 동안 여성의 지위는 세계적으로 최하위에 머물렀고, 여성에 대한 혐오와 폭력은 극악해졌다.

차별과 혐오, 여성에 대한 폭력은 새로운 대통령과 정부가 청산해야 할 가장 오래되고 강력한 '적폐'다. 대선 운동 기간 동안 많은 후보들이 '적폐 청산'을 내세웠지만, 차별과 혐오에 대해선 망각하거나 침묵했다. 거리 유세 현장에서 여성은 대상화되어 소비됐고, TV토론회장에서 소수자는 그 존재를 부정당했다. 하루가 멀다하고 대선후보들의 젠더의식 없음에 유권자들은 경악해야 했다.

'페미니스트 대통령'은 몇 개의 공약으로 얻을 수 있는 이름이 아니다. 일상의 폭력과 차별에 맞서 힘써 싸우며, 끊임없이 성찰하는 이들과만 가질 수 있는 이름이다. '해일'과 같은 일상에서 '살아남은' 여성들이 외치는 '페미니즘'에 무임승차해서는 안된다.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해 성평등 실현은 국가의 목표이자 의무이다. 이를 위해 새 정부와 새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약속했던 젠더 공약 이행하라.
선거운동 기간 약속하지 않았던 성평등 과제 실현하라.
강력한 성주류와 정책 실행으로 젠더 불평등을 타파하라.

한국여성단체연합 7개 지부와 28개 회원단체는 불평등과 차별, 혐오를 종식시키기 위해 새 정부의 성평등 실현을 촉구한다.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2017년 5월 10일

한국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교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썬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함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7개 지부 28개 단체)

우리는 계속되는 말하기와 행동으로
더 많은 변화를 만들어갈 것이다

1년 전 오늘 5월 17일, 한 여성이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화장실에서 무참히 살해됐다. 가해자는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려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동기를 '여자들이 자신을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한순간 삶을 잃어버린 피해여성의 넋이 편히 잠들 수 있기를 가슴 깊이 기원한다. 또한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 1주기를 기해 전더폭력으로 살해된 여성들을 잊지 않을 것이며 그 본질인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날까지 우리의 싸움을 계속 이어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은 여성폭력과 살해에 무감했던 우리 사회를 뒤흔들었다. 여성들은 전국 추모 공간을 펼쳤을 3만 5천여 개의 포스트잇으로, 잇따른 추모 집회와 거리 발언으로 피해여성을 추모하며 일상에서 드러내지 못했던 불편한 느낌들과 이해될 수 없었던 차별과 폭력의 경험들을 함께 나누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열등하게 취급받고, 부당하게 대우받았던 경험들이 터져 나왔다. 거리에서, 온라인에서 욕설과 위협을 당하고, 성적으로 대상화되고, 폭력과 착취 피해를 입은 이야기들이 가득 채워졌다. 피해경험을 말했지만 도리어 비난받았던 경험들이 벌어진 살갓 틈의 상처처럼 아프게 흘러나왔다. 여성들은 이러한 문화가 이 사건의 본질임을 지적하며, 지난 5년간(2011~2015, 경찰청 범죄통계) 1,002명의 여성이 살해되고 1,037명의 여성이 살해될 위험에 놓였던 한국에서 우연히 살아남아 '나는 너다'라고 외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지독하게도 '여성살해'의 본질을 보려 하지 않았다. 대책을 논의해야 할 때에 경찰과 정부는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이 여성혐오에 기인한 범죄가 아님을 주장하는 데 급급했고, 사건을 '정신질환자의 문지마 범죄'로 규정하여 가해자를 때때만 성차별적 사회의 책임에 집중했다. 오히려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강화하는 방식의 대책만을 강조하여 또 소수자에게 책임을 전가하였다. 언론은 관철 없이 받아쓰기에 바빴다. 추모행동에 참여한 여성들의 사진과 영상이 비방을 목적으로 인터넷사이트에 게시되고 수백 개의 욕설과 헐뜯 댓글이 달리며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했지만, 온라인상 여성혐오와 폭력이 일상적으로 자행돼 온 사회는 무감각하게 반응했다.

하지만 여성들은 두려움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다. 말하고 행동했다. 모이고 행진하고 외쳤다. 새롭게 그리고 자발적으로 결성된 수많은 페미니스트 그룹들이 생겨났고, 서로의 존재

는 용기가 되었다. 여성들은 SNS를 통한 '#00_내_성폭력' 해시태그 운동으로 공동체 내 성차별과 여성폭력을 고발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로 이어진 촛불집회에서 자행된 여성 및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폭력을 규탄하며 평등한 집회문화를 만들기 위해 행동했다. 성차별 철폐 없이는 민주주의도 없음을 외쳤다. 여성들은 성차별과 폭력에 저항해온 이야기들을 서로 나눴다. 여성들은 피해자를 명예훼손-무고 등으로 고소하여 밀하기를 가로막으려는 가해자의 공격과 성차별적 사법권력에 맞선 경험들을 나눴다. 목소리를 모으고 대응기구를 만들어 공동체의 변화를 이끌어낸 경험들을 나눴다. 여성폭력 의제는 사회적 논의의 장에 주요하게 떠올랐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더는 살해되지 않는 사회를 원한다. 이를 위해 여성폭력과 살해를 멈출 수 있도록 책임성 있는 정부대책이 필요하다. 여성폭력과 살해는 일상에 만연한 여성에 대한 무시, 혐오와 차별에서 기인한다. 성평등과 인권이 실현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근본적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전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 1주기에 기해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우리는 여성폭력의 근본적 원인이 성차별적인 사회구조와 문화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정부는 여성을 혐오하는 성차별적 사회구조와 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우리는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서, 그리고 일상에서 성평등의식의 변화를 만들어갈 것이다.

우리는 다짐과 연대로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과 폭력 없는 사회를 만들어갈 것이다.

2017년 5월 17일

강남역10번출구,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녹색교통, 녹색당, 녹색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범패미네트워크, 부산여성단체연합, 불꽃페미액션, 사회진보연대, 생대지평,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평등교육연구원, 수원여성회, 시민평화포럼, 여성환경연대, 울산여성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전국이주여성센터협의회, 전주 여성주의 독서모임 리본, 제주여성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픽스페미, 참여성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훈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한국두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환경정의, 풍사단, KYC

[요구문]

5월24일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문재인정부에 보내는 여성들의 요구문

전쟁 없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공동체 실현을 염원하며 2017년 5월24일 진행된 여성평화
심포지엄에서 여성평화경기 조직위원회 30여단체와 심포지엄 참가자들은 새 정부에 다음
과 같이 요구한다.

- 하나,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남북대화와 협상을 즉각 재개하라
- 하나, 중단된 남북교류협력을 재개하고 고통 받는 이산가족들의 재결합을 하루 빨리 추진
하라
- 하나, 평화통일 정책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남녀 동수로 확대하라
- 하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여 군비 경쟁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민의 복지에 사
용하라
- 하나, 비극의 땅 DMZ의 평화적 이용을 보장하라
- 하나, 순수목적의 남북문화예술교류를 제도화하라

2017년 5월24일
2017여성평화경기조직위원회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는 '성평등'을 위한 국민적 약속을 이행하라!

1.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가 실질적인 총괄조정기능이 가능하도록 제대로 설치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성평등 사회를 위해 '대통령(직속)성평등위원회(이하 성평등위원회)'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했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이에 대한 세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늘, 이 시점에 여성계가 요구하는 것은 성평등위원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명확한 위상과 역할을 부여하라는 것이다. 그동안 여성계는 행정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업무적 한계를 현장에서 경험했고, 부처별 칸막이 등으로 인해 여성 정책이 전 부처를 관통해 통합적으로 추진되지 않는 현실을 비판해 왔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성평등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고민해 온 것이다.

우리 사회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문화적인 관습이라는 이유로 행해 온 여성에 대한 차별을 드러내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조정해 실질적으로 현실을 변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부처보다 높은 위상과 독자적인 사무국을 설치해 각 부처의 업무를 통합, 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성평등 관점으로 각 부처의 여성관련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성평등위원회의 위치와 역할을 마련해야 한다. 기존 여성관련 정책이 구체화되어 여성이 현실에서 체감하도록 제대로 일하는 정부조직이 필요하다. 이것이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2. 통합적 성주류와 관점에서 실질적 성평등을 중점과제로 선정하라!

성차별 개선을 위한 법과 제도가 마련되고 있지만, 우리 사회 여성의 현실은 아직도 극복하지 않다. 노동시장에서의 차별로 성별임금격차는 십 수 년째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여성 혐오는 나날이 증가하고, 여성 대표성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이러한 여성의 열악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성평등 사회를 위한 관련 정책은 늘 후순위로 밀려난다. 성차별 문제를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아닌 개인적인, 사소한 문제로 치부하는 인식을 때문이다. 이러한 낮은 인식이 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

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의 삶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성평등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실천해야 할 국정 중점과제가 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인 나라다운 나라, 개혁과 통합은 성인지적 관점 없이는 전진할 수 없다. 국정과제에 성평등은 후순위나 '나중예'와 같은 선후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 관점이 관철될 수 있어야 한다. 여성들은 성평등을 국정철학에 반영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각 부처별 정책을 통합하여 중점과제로 선정할 것을 요구한다.

3. 공직 인사 검증 기준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라!

공직 인사 검증 기준에 성평등 관점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차별적이고 비상식적인 여성관을 가진 인물을 반복적으로 등용해 여성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특히 탁월한 행정관에 대해서는 여성계를 넘어 비판과 사퇴의 목소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이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지 않으면서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성평등 국가 실현은 한국사회에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각 분야의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고, 갈수록 심해지는 혐오를 멈추는 일이다. 따라서 '성평등'은 국정 전반을 관통하는 철학으로 기능해야 하며 국가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는 우리 사회가 당면한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회복하는 길이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 국정을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성평등 의식과 인권 감수성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중요한 자질이다.

또한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가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성평등 가치가 내면화되고 실질적 성평등을 이뤄감으로써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할 때,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성평등 의식은 분리되기 어려운 자질이다. 따라서 공직 임용에 있어서 성평등 감수성과 의식은 반드시 검증 기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정부는 인사 전반에 적용되어야 할 기준으로 성평등 의식을 확립해야 하며, 성평등한 인사정책의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4. 초기 내각 여성 30% 공약 미이행을 규탄한다!

지난 7월 3일 문재인 정부의 1기 내각 인선이 마무리됐다. 17개 부처의 장관 중 임명 또는 내정된 여성 장관은 단 4명, 23.5%에 그쳤다. 초기 내각 여성 장관 30%를 달성하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은 결국 무산됐다. '임기 내 동수내각'이라는 대통령 공약 이행에 대한 여

성들의 우려는 더욱 커졌다.

취임 이후 문재인 정부의 여성 인선은 파격적이었다. 청와대 인사수석과 외교부, 국토교통부 장관 임명은 '최초의 여성'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주요 보직에 여성을 임명함으로써 단순한 구색 맞추기가 아닌 실질적 성평등을 위한 인선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청와대 수석 중에 여성은 단 1명, 여성 장관은 23.5%(4명), 청와대 실장과 수석까지 포함하면 여성 비율은 16.7%(5명)에 불과하다. 차관 인선이나 각종 정부 위원회의 여성 비율 또한 매우 저조한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은 '실질적 성평등 사회'를 위해 여성 대표성 확대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동수내각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임원 추천위원회 및 이사의 30% 여성합당외무화, 중앙 및 지자체 여성 관리직 공무원 목표제 적극적 시행, 국·공립대 여성교수 및 여성교장·교감 임용목표제 적극적 추진과 공표를 약속했다.

하지만 새 정부의 성평등, 여성대표성에 대한 철학과 원칙을 가늠할 수 있는 1기 인선에서부터 문재인 정부는 낙제를 면치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여성 대표성 확대 공약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정부는 임기 내 동수 내각을 비롯해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한 실질적 정책을 마련하고 실현해야 할 것이다.

-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의 실질적 총괄조정기능 확보하라!
- '성평등'을 국정 중점과제로 삼아라!
- 공직인사 검증 기준에 성평등 관점 반영하라!
- 동수 내각을 포함한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로드맵을 마련하라!

2017년 7월 7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정남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독교여성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제주여성회 제주여성인권연대 경기정치연구소 여.세.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7개 지부 28개 단체)

“성평등” 대통령은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행정관, 탁현민을 경질하라.

더 이상 탁현민의 자발적인 사퇴를 기다리지 않겠다.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들어라. 여성에 대한 폭력과 성적 착취는 청산되어야 할 적폐이다. 탁현민을 당장 퇴출시켜라.

문재인 정부는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겸임교수 탁현민을 청와대 의전 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임명했다. 탁 행정관은 과거 저술한 다양한 책에서 여성을 남성의 성적 도구로 대상화하고,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와 폭력을 성적 자유와 문화라고 포장하며, 여성 혐오를 실천하는 남성 문화를 옹호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자를 대통령의 의견을 담당하는 자로 임명하는 것은 여성 주권자에 대한 모독이다. 이에 아당, 여당의 여성 의원들을 비롯한 여성 운동 세력과 시민사회 각계 인사들은 입을 모아 탁 행정관의 즉각 퇴출을 요청해온 바 있으나, 한 달 반의 시간 동안 우리가 목격한 것은 청와대 안팎의 지인들과 일부 문재인 지지자들의 옹호이며, 청와대와 대통령의 일관적인 묵묵부답이다. 현 상황은 한국 여성의 낮은 지위가 민주화의 과정을 겪은 후에도 개선되지 않고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가의 원인을 방증한다. 이런 비상식적인 남성 연대의 고리를 끊지 않고 검찰개혁-정치개혁은 요원하고, 적폐의 숙주는 죽지 않는다.

한국 사회에 만연한, 그릇된 남성 문화는 여성 인권의 신장을 가로막는 적폐이며, 당연히 타파되어야 할 대상이다. 그러나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될 것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선 전의 약속이 무색할 정도로 여성 혐오와 적폐를 방관하는 문재인 정부의 태도는 한편 충격적이나 다른 한편 ‘동성애 반대’의 입장과 일관적이라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 여성을 동등한 인간으로 바라보지 않는 탁현민을 비호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과연 사회적 약자에 대해 논할 수 있는가?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요구한 적폐 청산을 위해 과거의 약속과 결별함으로써 미래 세대에 걸맞은 공직상을 제시할 의무가 있다. 하물며 국민이 적폐로 규정된 박근혜 정부조차 공직자 윤리에 어긋나는 처사를 했던 윤창중과 나향욱을 파면한 바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탁현민 행정관에 대한 비판이 무대응으로 일관해 감동을 심화하며, 그런 자에게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주는 것은 여성 혐오적 시각과 남성 문화의 적폐를 정부가 용인한다는 것의 의미와 다르지 않다.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말라.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고 싶다면 스스로의 적폐를 엄격하게 청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박현민 행정관은 즉각 내려오라. 그리고 여성 주권자에게 엄중하게 사과하고 반성하라. 당신이 변화했다면 그 변화를 실천하고 증명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박현민을 경질하고 지금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바에 대해 해명하고 여성 주권자에게 사과하라. 공직자 인선에 성평등 기준 마련과 더불어 “성평등” 대통령으로 무엇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로드맵을 제시하라.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라면 이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난 15년 동안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여성의 정치참여와 민주주의의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해왔다. 여성의 정치 참여는 남성중심적인 정치 권력과 문화의 극복 없이 그 목표를 이룰 수 없다. 민주주의는 손수 따르는 커피의 제스처로 완성되지 않는다.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여세연이 개시한 즉각 퇴출 시명운동은 6월 29일부터 7월 5일까지 6일간 진행되었으며 총 7,542명의 다양한 시민이 참여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안을 모았다.

- “성평등” 대통령은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행정관, 박현민을 경질하라.
- 그를 임명하고 비호하여 주권자를 모독한 문재인 정부 각성하라.
- 박현민을 즉각 퇴출하라.

문재인 정부는 상식적인 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하라. 박현민 퇴출은 더 이상 여성혐오 문화를 승인하지 않겠다는 성평등 정부의 의지이자 이 나라에 만연한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겠다는 민주주의 국가가 저야할 마땅한 책임의 그 시작이다.

2017년 7월 7일

박현민퇴출을촉구하는상식을합계한사람들 일동

[설명서]

금강산관광 중단 10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민족 동질감 회복과 상호공존, 나아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마중물로 삼아야

오는 12일은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지 10년이 되는 날이다. 금강산관광은 남북 주민들이 서로 대화하고 직접 접촉할 수 있는 대북사업이었다. 더불어 남과 북의 민족 동질감 회복과 상호공존, 더 나아가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마중물이었다. 그러나 지난 2008년 금강산관광 중단 이후 관광 재개를 위한 어떠한 논의도 진행되지 못했다.

지난 10년간 관광 중단으로 인해 투자기업 49개 업체가 입은 매출 손실은 6,500억원, 투자금 손실은 3,000억원에 달한다. 또한 강원도 고성 지역 역시 관광객 감소 등으로 입은 피해는 직간접적으로 3,000억원에 이른다. 투자기업과 관련 지자체는 막대한 피해로 여전히 신음하고 있으며, 시간이 갈수록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환경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우리 15개 시민·사회단체는 금강산관광 중단 10년을 맞아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문재인 정부는 조속히 금강산관광 재개에 나서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관계 복원에 대한 기대가 한껏 높아졌다. 남북 민간교류 유연 검토, 민간단체의 방북 허용, 남북경협 기업 피해 보상 추진 등 이전 정부와 달라진 대북정책의 기초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지난 6일 문 대통령은 '베를린 평화구상'에서 '비정·지·군·사적 분야 교류협력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즉 쉬운 부분에서부터의 관계 복원을 이뤄나가자는 것이다. 그 쉬운 부분이 금강산관광 재개라 될 수 있으며, 관광 재개가 남북관계 복원의 단초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해 넘어야 할 장애물은 너무도 많다. 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정책, 잇따른 북한의 미사일 도발, 5.24조치, 북한의 금강산관광 재산 동결과 물수 조치와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제정 등이 바로 그것이다. 결국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정부의 전향적이며 조속한 정책 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금강산관광 재개와 함께 남북관계 복원을 기대하기 어렵다. 때문에 정부의 남과 북의 화해·협력을 위한 전향적 대북정책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금강산관광 재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며, 본단의 아픔을 넘어서 한반도 긴장 완화를 이루는데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금강산관광은 남북의 평범한 주민, 즉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대북사업이다. 그 어떠한 대북정책도 만남과 대화 보다 우선할 수 없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야 남과 북이 하나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금강산관광은 반드시 재개돼야 한다.

둘째, 교류·협력 재개를 통해 남북관계를 복원해야 한다.

이명박·박근혜 보수 정권 9년 간 모든 남북관계는 단절됐다. 대화와 교류·협력이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각종 통일 구호만 난무하는 사이 남북관계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말았다. 남과 북이 서로 비난하고, 갈등하면서 만남과 평화를 잃어버리고 허송세월 시간만 보낸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 교류·협력에 적극 나서야 한다. 금강산관광 재개를 넘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위한 과정을 차근차근 밟아가야 한다. 남북 간의 대화가 그 시작이 되어야 하며 남과 북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남북관계를 복원해야 한다. 더불어 5.24조치 해제, 금강산·개성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가동 등 전향적인 대북정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대내외 환경을 이유로 들어 대북정책 전환에 있어 신중함을 보이고 있지만 시간을 지체하기에는 남북관계 악화로 인한 한반도 불안정성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우리가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지 않고서는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이 불가능함을 지난 보수 정권 9년을 통해 뼈저리게 경험하였다.

현재 대한민국은 심각한 저성장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으며, 최악의 실업난에 그 고통은 나날이 더해가고 있다. 때문에 금강산관광 재개를 포함한 남북경협 사업 정상화 및 남북경협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 남북경협 사업을 통해 새로운 경제모델을 창출해내고, 이를 통해 남과 북이 함께 번영의 길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2017년 7월 11일

경실련통일협회,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고양통일나무, 금강산투자기업협회 남북경제협력포럼, 대전평화여성회, 시민평화포럼, 참여연대, 통일맞이, 평화네트워크,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평화 3000,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YMCA 생명평화센터 (15개 단체)

[호소문]

일제의 국가범죄를 총결산하기 위한 전민족적운동을 과감히 전개 해 나가자
- 일본의 《정미7조약》 남조 110년에 즈음하여 해내외의 온 겨레에게 보내는 호소문

일제가 침략적인 '정미7조약'을 남조한 후 110년의 세월이 흘렀다. 친일 매국노들을 사주하여 강압적으로 조작한 '정미7조약'은 우리나라의 내정을 완전히 장악하고 '통감정치'를 전면 실시함으로써 국권을 통째로 강탈했다.

이후, 40여 년간에 걸친 일제의 야만적인 식민지 통치로 인해 840만 여명의 조선청년들이 일제가 일으킨 아시아대륙 침략전쟁에 강제연행되고 죽음의 노역장들에서 중세기적 노예노동에 시달렸으며 무려 100여만명이 목숨을 잃었다. 20만명의 무고한 조선여성들이 강제납치 되어 전쟁터에 끌려 다니며 인간으로서의 상상할 수 없는 온갖 치욕을 강요당하였다.

일제침략자들은 우리나라의 귀중한 문화재와 자원들을 다치는 대로 파괴약탈 하였으며, 우리 민족을 완전히 없애버리기위한 전대미문의 민족말살 책동까지 감행하였다. 일제가 저지른 만고죄악은 세월이 가고 세기가 바뀌어도 결코 잊을 수 없으며 우리 민족에게 끼친 특대형 국가범죄에는 시효가 없다.

하지만 일본은 과거죄악에 대한 제대로 된 사죄와 배상 대신 침략역사를 왜곡할 뿐 아니라 재침략의 야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군국주의 부활로 질주하고 있다.

남과 북, 해외의 우리 여성들은 일제의 '정미7조약'남조 110년을 맞이하여, 일본의 과거죄악을 총결산하기 위한 투쟁에 앞장서겠다는 굳은 의지를 표명하면서 해내외의 온 겨레에게 열렬히 호소한다.

1.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점하고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국가범죄를 끝장내기 위한 투쟁에 우리 모두 적극 나서자!

일본은 전범국, 전패국으로서 마땅히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우리 민족에게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요한

국가범죄에 대해 제대로 사죄하고 배상하여야 할 법적, 도덕적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일본지배층은 과거범죄를 부정하고 은폐해 왔으며 지금에 와서는 공공연히 침략역사를

미화하고 합리화하는데 매달리고 있다. 일본의 파렴치하고 뻔뻔스러운 행위는 온 겨레의

치솟는 적분을 자아내고 있다.

조선인 강제징용, 징병 및 집단학살과 문화제약탈을 비롯하여 우리 민족에게 끼친 일본의 과거죄악을 규탄한다.

또한, 이를 위한 연대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려나가자!

일본의 만고죄악을 묵인하고 비호하는 친일파의 사대패국행위를 단호히 배격해나가자!

2. 전대미문의 일본군성노예범죄 해결을 위한 거족적인 투쟁에 떨치나서자!

일본군 성노예범죄는 일제가 관권과 군권을 동원하여 감행한 천인공노할 특대형 반인륜적 국가범죄이며 우리 민족의 치욕이다.

그러나 일본은 박근혜정권과 아합하여 그 무슨 '합의'라는 것을 조작하고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 '일본의사과는 더 이상 없다.'고 떠들어대면서 성노예 피해자들을 극도로 모독하고 있다. 성노예 피해자들의 피땀한 원한과 인생파탄의 대가는 그 무엇으로도 만회할 수도, 보상할 수도 없다.

일본의 성노예범죄 진상을 만천하에 폭로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덮어버리려는 일본의 파렴치하고 교활한 책동을 단호히막아내자!

일본과 체결한 굴욕적인 일본군성노예 '합의'를 전면무효화하고 폐기해 버리자!

일본군성노예범죄에 대한 일본의 사과와 배상을 통해 피해자들의 피땀한 한을 기어이 풀어 주자!

3.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기도와 재침야망을 배격하고 우리 민족에 대한 부당한 적대행위를 반대하는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리자!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침략야망은 어제도 오늘도 변하지 않았으며 내일도 결코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일본에서는 지금도 '독도는 일본고유의 영토'라는 망언이 매일같이 터져 나오고 '방위백서'와 교과서들에 벚꽃이 맵기되고 있으며 집권자들이 '야스쿠니진자'에 물러다니며 군국주의 망령을 되살리고 있다.

이는 우리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이며 과거의 침략죄악에 대한 전면부정이다.

해내외의 온 겨레는 일본의 철면피한 독도강탈 책동을 추호도 용납하지 말고 철저히 배격하자!

일본과의 '군사협정'체결과 '동맹강화'를 저지시키기 위한 활동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가자!

재일동포들은 일본에 강제로 끌려가 갇은 민족적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고역을 치른 강제징용자, 징병자들의 후손들이다.

일본당국은 마땅히 그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생존을 보장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지만 이

를 의면하고 우리 동포들의 민족적 존엄과 권리를 무참히 짓밟고 있다.

총권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일본당국의 부당하고 비열한 정치적 탄압과 인권유린행위를 반대하여 온 민족이 떨쳐나서자!

남과 북, 해외의 여성단체들은 온 겨레가 일본의 과거범죄를 종결산하고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거족적인 애국투쟁에 적극 나서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한다.

2017년 7월 24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여성본부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여성분과위원회
재일한국민주여성회,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

한반도 평화협상 시작하여 전쟁종식과 평화체제 구축으로 나아가자!

정전협정 체결 64년이 되었다.

정전협정의 체결로 3년간 지속된 전쟁의 포화가 멈추었으며, 우리 민족은 절멸의 위기와 극한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정전협정 이후 당연히 따라와야 할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못하면서, 우리 민족은 3년의 전쟁의 고통에 더하여 64년 간 '전쟁 미종료'에 따른 추가적 고통을 겪어왔다. 하루빨리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한반도에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이다.

정전협정 체결 64주년이 되는 올해, 우리는 그간 열원해왔던 평화체제 구축의 전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목도하고 있다.

그동안 미국은 '전략적 인내'라는 이름 아래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주요한 문제들을 뒤로 미룬 채 대북 압박 위주의 정책을 구사해왔으나, 최근 '전략적 인내' 정책의 실패를 공식 선언하고, 군사적 수단을 통해서이건, 협상을 통해서이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군사적 수단은 한반도 당사자인 우리가 결코 수용할 수 없는 방안임을 생각할 때, 이 국면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근본적 대화의 시각을 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또한 남북 교류의 전면적 차단, 그리고 대북 전쟁 불사 정책으로 이 땅의 평화를 훼손하고 통일의 길을 한층 멀어지게 만든 박근혜 적대세력들 역시 촛불항쟁으로 물러났다. 전쟁이나 평화나의 갈림길에서 이 땅의 전쟁 위험을 막고,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도 마련되었다.

'전략적 인내' 정책이 실패로 돌아간 지금, 실패한 제재와 압박 정책에서 벗어난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 한반도 핵문제는 북미간 적대관계를 비롯한 냉전체제로부터 기인한 것이므로, 이 문제들을 함께 해결하는 평화협상을 시작하여 한반도 평화의 디딤돌을 마련해야 한다.

역지사지의 자세가 필요하다. 미국과 남측 정부가 북측의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을 중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듯, 북측 역시 세계 제일의 패권국인 미국 군대의 한반도 주둔과 수십년간 계속돼 온 대규모 군사훈련, 북측에 대한 고강도 제재와 압박을 중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현재의 문제를 일방의 잘못으로 간주하고 상대를 악으로 보는 방식은 공정하지도, 효율적이지도 않으며, 평화와 통일의 길을 더욱 멀게 만들 뿐이다. 상대의 처지를 인정한 토대위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상호 우려를 해소해 나간다면 이 땅의 항구적 평화가 정착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한미당국은, 최근 중국은 물론 미 외교협회 등 각계에서 군사적 행동의 상호 중단, 즉 <핵-미사일 발사 중단>과 <한미연합군사훈련 및 전략자산 전개 중단>을 첫걸음으로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제 한달 후면 다시 대규모 전쟁연습이 시작되고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러한 긴박한 상황에서, 전쟁연습을 중단하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조치를 단행함으로써 평화협상이 시작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

남북관계의 전면적 개선은 한반도 평화실현을 선도하는 중요한 첫 걸음이다. 한반도 당사자들의 대화가 복원되지 않는다면, 실령 평화협상이 시작된다 해도 성과를 거두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 땅에서의 전쟁을 막고, 지긋지긋한 전쟁 상대를 종식하여 이 땅에 영구적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은 온 겨레의 긴박한 과제인 만큼, 정부는 한반도 핵문제의 진전에 남북관계를 결박시킨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를 우선 진전시켜 평화를 선도해야 할 것이다.

남북은 이미 7.4 남북공동성명으로 통일의 원칙을 합의하였고, 6.15-10.4선언으로 통일의 경로도 합의한 바 있으며,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20여년간의 교류와 우여곡절의 경험도 갖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의지 뿐이다.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이행하여 외세의 간섭과 전쟁의 긴장이 없는 평화롭고 통일된 조국을 후대에 물려주자!

2017년 7월 27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호소문]

문재인 대통령에게 드리는 호소문 : 우리 여성들은 평화협정을 원합니다

오늘은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4년이 되는 날입니다. 분단 72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되지 못한 상태에서 한반도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전쟁과 갈등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은 한국전쟁과 그 결과로 빚어진 냉전의식은 사회 전반에 깊은 상흔을 남기며 많은 희생자와 희생양을 양산해 왔습니다. 여성들에 대한 폭력과 혐오는 분단과 전쟁으로 인해 빚어진 군사주의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분단과 전쟁은 여성들을 특수위안대로 그리고 미군기지촌여성으로 내 몰았으며, 전쟁미망인,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낳았고 이들은 굶핍과 공포, 폭력으로 점철된 피폐한 삶을 살아내야 했습니다.

7·4남북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그리고 10·4선언 등 평화와 화해를 추구하는 남북정부의 노력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가동은 남북한의 건설적인 협조와 합의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만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이 모든 노력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가을부터 시작된 촛불시민주권혁명의 힘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제는 전 한반도 사람들이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해 평화와 정의의 행진을 시작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 행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정전협정입니다. 만일 우리가 냉전체제의 비극과 적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다시금 한반도와 동북아를 전쟁으로 내 몰 것입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여성들은 내전이자 국제전이었던 한국전쟁을 종식시키고 한반도에 인간안보가 실현되어야 하며, 모든 정부부처와 기업, 군대, 사회분야가 힘을 합쳐 이 땅의 갈등과 비극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1.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시오. 조건없이 북한과의 협상 테이블에 앉으시고 앞서 있었던 수많은 합의서와 공동선언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주십시오.
2. 남북한의 모든 민간인 교류와 협력사업을 전면 허용하십시오. 단절된 여성교류의 맥을 잇게 하십시오.
3. 한반도문제해결을 위한 협상단에 50%의 여성 참여를 보장하십시오. UN안보리결의안 1325에 따르면 갈등예방과 평화정착에 여성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4. 과도한 국방예산을 여성, 청년,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복지비로 전환하십시오.
5. 해외평화민주활동가들의 입국금지 조치를 전면 해제하십시오.

2017년 7월 27일

(사)우리누리평화운동,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여성본부, WCC(세계교회협의회), WomenCrossDMZ(Christine Ahn, Organizer of WCD/Ann Wright, retired US Army Reserve Colonel and a former US diplomat/Ewa Eriksson Fortier, former head of an international humanitarian organization based in Pyongyang/Meri Joyce, staff of Peace Boat and Northeast Asia Regional Liaison Officer for the 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GPPAC), 경기여성단체연합, 두레방, 문화세상이프토피아, 에큐메니칼청년네트워크,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전국여성연대(경기자주여성연대,경남민주행동여성위원회, 경남여성연대, 고양여성회, 관악여성회, 광주여성회, 구로여성회, 구리여성회, 남양주여성회, 남해여성회, 민주노동경남본부여성위원회, 부산여성회, 부천여성회, 분당여성회, 사천여성회, 서귀포여성회, 서울여성연대(준), 성남여성회, 수원일하는여성회, 안성여성회, 안양나눔여성회, 양산여성회, 양주여성회, 오산여성회, 용인여성회, 울산여성회, 의정부두레여성회, 이천여성회, 전국여성농민회 경남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 제주여성회, 진주여성회, 진해여성회, 창원여성회, 천안여성회, 하남여성회, 함안여성회, 화성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통일연대,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교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어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제주어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쉼터정치연구소 여.세.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전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햇살사회복지협의회

[성명서]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계획을 철회하라
성주에, 김천에 사람이 살고 있다

지난 7/28(금) 국방부는 사드 배치 문제 관련 범정부 합동 TF의 결정으로 사드 부지에 대해 전략 환경영향평가가 아닌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이며, 최종 배치 여부는 일반 환경영향평가 이후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인 7/29(토)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왜관 주한미군기지에 보관 중인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를 지시했다. 이어 국방부는 사드 발사대 임시 배치를 조속히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늘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조속 결정을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발사대 추가 배치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사드 발사대의 추가 배치는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의 대응책이 아니다. 북한의 ICBM은 미국 본토를 겨냥한 것으로 중단거리 미사일 요격용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의 요격 범위와는 무관하다. 따라서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 지시는 아무런 타당성이 없으며, 북한의 ICBM을 빌미로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로 만들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결국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는 방법이 될 수 없다. 한반도 핵 문제를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 북한의 핵 개발과 미국 MD의 적대력 공생이 한반도에서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지난 10년이 이미 충분히 증명해주지 않았는가?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한미연합군사훈련의 동시 종단을 적극 제안하여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적 해법에만 집착하는 것은 또 다른 실패를 예고할 뿐이다.

둘째, 문재인 대통령은 그토록 강조했던 사드 배치의 절차적·민주적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했다. 주민들은 사드 발사대를 추가 배치할 것이라는 사실을 또다시 TV를 보고 알게 되었다. 사드를 성주에 배치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던 박근혜 정부와 마찬가지로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정부가 '촛불로 탄생한 정부'이며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또한 작년 7월 사드 배치 결정 직후부터 재검토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공약집에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추진'을 명시하기도 했다. 이에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재검토와 공론화, 진상조사, 국회 동의 등을 책임 있게 추진할 것이라 기대했다. 그것이 적폐 청산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주민들은 서주석 국방부 차관과의 면담에서 사드

배치의 효용성, 타당성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제안한 바 있다. 사드 배치가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 충분한 토론을 통해 결정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사실상 사후 정당화 조치인 요식적인 일반 환경영향평가 결정과 법과 절차를 무시한 발사대 추가 임시 배치 통보였다.

셋째, 약속했던 진상조사는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 사드 발사대 4기 반입 보고 누락과 전담 환경영향평가 회피를 위한 부지 조개기 2단계 공여가 드러난 이후, 사드 배치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범정부 합동 TF가 구성되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도 언급한 사실상 탄핵과 대선 국면에서 누군가의 결정으로 사드 배치가 빨라졌다는 것을 포함해, 사드 배치 과정 전반의 불법성에 대한 진상조사는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취하는 조치는 법적 근거 없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인정하고,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그대로 덮어두고 가겠다는 의미다.

성주 소성리에서는 환경영향평가도 하지 않고 미군이 장비를 가동하고 있다. 이제 문재인 정부의 결정으로, 소성리는 언제 공사 장비나 사드 발사대가 반입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에 다시 놓이게 되었다. 우리는 공사 장비나 사드 장비 반입을 끝까지 막을 것이며, 오늘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부지 조개기로 근거 없이 진행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반례하라
사드 장비 가동 즉각 중단, 철거하고 재검토와 공론화부터 진행하라
사드 배치 과정 전반의 위헌, 불법 행위에 대해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2017년 7월 31일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
산경남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성명서]

남·북·미 모두 일체의 군사위협 중단하고,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또다시 한반도 위기입니다. 요동치는 한반도 정세에 우리의 평가가 질식당하고 있습니다. 가공할 무기를 앞세워 군사행동도 불사하겠다는 북한과 미국의 공격적인 언사들이 연일 뉴스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인질 삼고 위협하는 북한과 미국 당국의 태도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한반도나 광 인근에서나 그 어떤 무력행동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믿는 우리는, 남·북·미 모두에게 군사위협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서 북한은 연이어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감행했습니다. 이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대응은 강도 높은 대북제재결의안 2371호를 채택하는 것이었습니다. 8월 21일 시작될 을지프러텀가디언(UFG) 한미합동군사훈련에서 한미 당국은 미국의 전략자산을 총동원하여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미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핵전쟁을 연상시키는 발언으로 겁박하고, 북한은 광 주변 해상수역에 포위 사격을 준비하겠다고 응수합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의 한반도는 과거 실패한 접근법을 반복할 정도로 한가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핵미사일 능력을 강화하고 있는 북한을 제재와 압박으로 굴복시킬 수 없다는 것은 전혀 새로운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북한의 군사행동과 한미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은 도들이표처럼 반복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5차례 핵실험과 수많은 미사일 실험발사를 하는 동안 유엔 안보리는 모두 8번의 대북제재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한미 당국은 매년 최대 규모의 군사훈련과 무력시위를 전개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끝내 대량살상무기를 끌어안고 정권의 안정을 보장받겠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도 제재와 압박으로 북의 핵포기를 이끌어내겠다는 발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전쟁의 참화가 또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는 지금은 대화보다는 더 많은 제재와 압박을 가할 때라고 말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한반도 핵갈등을 해결하고 평화체제를 모색하자고 했던 6자회담이 중단되었던 10년 동안,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미 본토까지 위협하는 수준으로 고도화되었습니다. 얼마 전, 한 외신은 북한이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핵탄두 개발에 성공했다는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의 평가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는 북한의 핵포기는 물론 협상 재개의 문턱도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북한

의 선제적인 조치를 전제조건으로 삼아서는 대화 테이블에 앉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다가 남북관계 개선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핵 능력을 강화해 대미 협상력을 끌어올리려는 북한은 문재인 정부의 군사회담과 적십자 회담 제의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면적이고 과감한 정책의 전환 없이는 문재인 정부의 배울린 구상도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위기는 문재인 정부가 대담한 정책전환을 이룰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남·북·미 모두 일체의 군사행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북한은 추가적인 핵,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동시에 한미 당국도 북한을 겨냥한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을 결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중국과 러시아뿐만 아니라 북한과 미국 일각에서 검토되고 있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일촉즉발의 한반도 위기를 완화시키고 대화와 협상을 재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나가기 위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조만간 있을 UFG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좋은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북한 미사일 방어용으로 작동할 수 없는 사드 배치를 철회해야 합니다. 한미일 MD체계의 일환으로 작동될 사드 배치는 중국을 더욱 자극하고 동북아 군비경쟁을 촉진할 뿐입니다. 지금이라도 사드 장비 가동과 공사를 중단하고 박근혜 정권에서 불법적으로 강행된 사드 배치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북미 당국은 물론 남북이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었던 시기는 대화와 협상이 부재했던 시기와 일치합니다. 한반도 주민들에게 공포와 불안 상태를 감내하라고 요구하면서, 오랜 핵 갈등과 적대적 관계를 심화시킬 뿐인 압박과 제재만을 고집할 이유가 없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돌파구를 마련했던 것은 언제나 대화와 협상이었습니다. 북미 모두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없는 선행 조치를 요구하지 말고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당장 나서야 합니다. 남북 간의 대화 역시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가 남북 간의 적대 행위와 비방을 중단하기 위해 제안했던 회담을 북 측이 외면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장 우발적인 군사충돌을 막기 위한 조치 마련과 민간교류 재개를 시작으로 남북관계의 복원과 발전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북측은 적극적으로 화답하고 남측도 대화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민 행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한국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드높이고 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남북 간의 경제협력과 사회문화교류의 재개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오는 10월 10.4 선언 10주년에 즈음한 남북공동행사도 추진할 것입니다. 남북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또한, 전쟁상태의 종식을 앞당기기 위해서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시민 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핵위협이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해 핵무기의 개발과 반입, 이동,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비핵시대 실현을 촉구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연대할 것입니다. 한반도 주민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쪽주하는 대결과 반목을 중단시키기 위해 우리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17년 8월 10일

(사)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 경제를넘어, 국제민주연대, 남북경제협력포럼, 대전평화여성회, 동북아평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시민평화포럼, 원불교 인권위원회, 원불교 평양교구,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전국학생행진, 주권자전국회의, 참여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익산참여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참여연대, 통일맞이, 평화3000, 평화네트워크, 평화여성회,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총 44개단체)

[선언문]

사드반대, 전쟁반대,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여성선언

지금, 전쟁의 악몽이 살아나고 있다. 이미 북측과 미국은 발연 수위를 높아가면서 말폭탄을 주고받고 있다. 지금 당장 화염이 발생한다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다. 전쟁에 대한 위협이 높아가는 가운데, 우리 여성들은 위험천만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실현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사드배치, 즉각 철회해야 한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 왜 한반도에 사드배치를 절정하는가?

이미 사드는 미국을 위한 미국의 무기일 뿐 우리의 안보와는 하등 상관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트럼프 비대통령은 '전쟁이 벌어진다면 한반도에서 벌어질 것이다. 만약 수천 명이 죽는다고 해도 거기서 죽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우리 땅을 전쟁터로, 우리 국민을 희생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미국의 안전을 위해 위험천만한 사드를 배치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사드배치는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주권자인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전자파 측정, 기만적인 미군사과, 모두 필요없다.

사드배치 즉각 철회하라.

제재와 한미군사훈련으로 전쟁을 막을 수 없다, 대화의 문을 열어야 한다.

미국이 주도한 대북제재는 북핵을 저지하는 대신 도리어 북핵 고도화에 기여했다,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재는 답이 아니라는 사실도 이미 오래전에 증명되었다.

더욱이 매년 8월이면 핵함고, 핵전라폭격기, 핵잠수함, 20만명 이상의 병력 및 공무원이 동원되는 울지프리엄가디언 훈련을 실시하면서 선제공격, 지도부 제거를 공언하고 있다. 북도 광 주변 30~40Km에 4발을 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위험천만한 상황이다.

전쟁을 멈추는 가장 쉬운 길은 총부리를 내려 두고 대화하는 길밖에 없다. 일부 보수세력이 우려하는 '코리아 패싱'을 피하는 것은 한미중속동맹이 아니라 민족의 한쪽 주체로서 당당히 주권을 선언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요구한다.

전쟁연습을 중단하고 평화협정체결, 대화를 위한 대북특사를 파견하라.

2015 한일합의, 한일군사보호협정을 파기해야 한다.

박근혜정권의 외교분야 국정농단 중 하나가 2015한일합의와 한일군사보호협정이다. 이는 미일동맹을 선차적으로, 한미동맹을 하위동맹으로 하는 미국의 동북아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 중 그 누구도 우리의 군사정보를 일본과 공유하도록 허락한 적 없으며, 배상은 커녕 제대로 된 사과조차 없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모독해 온 2015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승인한 적은 없다.

진정한 광복은 일본과 불합리한 외교부터 청산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

대한민국 주권자인 여성들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2015 한일 일본군 '위안부합의', 한일군사보호협정 즉각 파기하라!

올해는 광복 72주년이다, 하지만 총독부 건물에서 일장기가 내려가고 성조기가 올라간 후 진정한 광복, 진정한 해방은 오지 않았다.

우리는 일제강점기의 완전한 청산과 분단적폐, 당당한 주권국가, 평화통일을 위해 심없이 투쟁할 것이다.

사드가고 평화오라! 재래대신 대화하라! 전쟁연습 중단하고 평화협정체결하라!

한일일본군 위안부합의 한일군사보호협정 즉각 파기하라! 대북평화특사파견하라!

2017년 8월 15일

사드반대, 전쟁반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여성대회 참가자 일동

[성명서]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평화와 민주주의는 어디 있는가

2017년 9월 7일, 문재인 정부가 끝내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강행했습니다. 소성리에 모인 주민들과 시민들이 18시간 동안 있는 힘을 다해 저항했지만 동원된 8천 명의 경찰력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장의 주민들과 시민들, 그리고 현장에 오지 못해 애통하는 마음으로 지켜봐야 많은 이들에게 이 18시간은 울분과 통탄의 시간이자,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산산이 깨져버린 시간이었습니다. 민주주의가 무너진 시간이었습니다. 출범한 지 4개월도 안 된 문재인 정부가 오로지 한이동맹에 충실한 정부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한밤중에 대규모 공권력을 동원하여 주민들과 활동가들을 강제 진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불법·부당한 사드 배치 강행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어제(9/7) 오후 송영무 국방부 장관, 김부겸 행안부 장관 그리고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합동 브리핑을 열어 사드 추가 배치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드 배치가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박근혜 정권이 했던 주장과 다르지 않습니다. 당시 문재인이라는 정치인은 사드 배치의 실익이 없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에는 잘못된 추진 과정에 대해 조사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공언했었습니다. 이제 와서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강변하는 문재인 정부 앞에 우리는 아연실색할 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촛불을 들었던 성주, 김천 주민들과 원불교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의 일말의 기대와 호소를 저버렸습니다. 사드를 배치해도 북한이 남한을 겨냥해 가용할 수 있는 미사일 운용 수단은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애초 북한 핵·미사일 방어와는 무관한 사드 배치를 강행한 결과 우려했던 대로 중국의 반발은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에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는 정부가 그 기대에 반하는 조치를 강행한 것입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군사적 긴장은 더욱 격화될 것입니다. 한반도 군사적 위기를 빌미로 미국은 사드 보호를 위한 추가 무기 구입 등 더 많은 무기 구입 명세서를 한국에 청구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우리는 박근혜 정권의 저궤였던 사드 배치 문제가 이제는 온전히 문재인 정부의 실책과 책임임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불법·부당하게 사드 배치를 강행한 정부는 더 이상 민주적 절차나 주민 소통을 앞세우며 국민을 우롱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이미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사드 추가 배치는 박근혜 정권이 위법적으로 진행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사후적으로 정

당화한 것입니다. 게다가 어제 정부는 2차 부지 공여 이후에나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앞으로 '성주, 김천 지역주민들과 진정성 있게 소통'하면서 지역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이며,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엄정한 원칙과 절차를 적용해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사드 배치 이전에 실시해야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셀 수 없는 경찰력으로 주민들을 제압한 후 지원 대책 운운하는 정부가 도대체 박근혜 정권과 무엇이 다르다는 말입니까?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배치 강행 이후 우리가 선택할 다른 길은 없습니다. 비록 사드 반입을 저지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배치된 사드가 철거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사드 가동과 공사 저지를 위해 강고한 저항을 이어갈 것입니다.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이 정부의 불법성을 알려 나가겠습니다. 보여주기식으로 입관된 정부의 일방적인 '소통' 제안에 응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것이고, 훼손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또한 한미동맹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정부가 '국가안보'를 내세워 국민들을 희생시키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7년 9월 8일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설명서]

**‘완전한 파괴’기론한 트럼프, 적극 동조하는 청와대
한반도 전쟁 선동하는 무개념 막장 발언과 정책 중단하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9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미국과 동맹국을 방어해야만 한다면 우리는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을 것”이라며 유엔 총회장에서 공공연하게 전쟁과 전멸을 위협하였다. 이에 대해 각국 외교관들의 비판이 빗발치는 가운데, 정작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이른바 북핵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 것이라면서 문제될 것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북에 대한 완전한 파괴는 곧 전멸과 한반도 전면전을 말하는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은 선제공격을 부정하고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우선시하는 유엔현장을 미국 스스로 얼마나 하찮게 생각하는가, 주권과 생존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의 존엄과 미래를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무도한 막장 발언의 극치이다.

우리는 한반도 전면전과 전멸을 위협하고 이 땅의 주권과 존엄을 짓밟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유엔현장과 국제법도 무시한 채 한반도의 완전한 파괴를 운운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청와대가 ‘미국 정부가 북핵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를 잘 보여 주었다’며 한껏 추켜세운 것은 더욱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막말에 대해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결코 허용할 수 없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청문회에서 부정한 것일 뿐 아니라 이 땅의 평화와 존엄을 짓밟은 무도한 발언으로 항의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주권과 평화를 지켜야 할 정부 책임을 스스로 던져버린 것이며, 미국에게 한없이 굴종하는 굴욕적이고 한심한 태도의 극치이다.

이 땅에서의 전쟁은 어떤 이유로도 거론해서는 안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도하고 호전적인 발언과 대북압박을 중단하고 대북적대정책 철회와 관계 정상화, 평화협정 체결에 즉각 나서야 하며, 문재인 정부 또한 굴욕적인 대미 추종과 대북제재 강화 정책을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협상을 선도하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

그것만이 한미당국이 그토록 열망하는 한반도 핵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길이다.

2017년 9월 21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한반도 주민 불모 삼는 위협천만한 미군 B-1B 무력시위 용납할 수 없어
미국의 독단적 행동이어서, 한미 협의 사항이라도 모두 심각한 문제
우발적 충돌 부르는 미국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 단호히 거부해야**

1.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9월 23일 밤 미군의 B-1B 전략폭격기가 동해 상 북방한계선(이하 NLL)을 넘어 비행하며 무력시위를 했다고 한다.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한반도 주민을 위협에 빠뜨리는 위협천만한 군사행동이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한미 간에 조율이 있었다'고 설명하지만 그렇다고 이번 군사행동이 문제가 없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한국민의 의사와는 관계없는 미국의 독단적인 행동일 경우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한반도에서의 무력 충돌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던 문재인 정부가 NLL을 넘어 무력시위를 하는 데 동의했다는 것도 용납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우리 시민단체들은 한미 당국에 한반도를 위협에 빠뜨릴 더 이상의 어떠한 자극적인 무력시위도 하지 말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이는 북한에도 해당하는 요구이다.

2. 전략폭격기를 동원한 이번 무력시위는 최근 북미가 연일 최고 수위의 위협을 가하며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던 것을 고려하면 더더욱 있어서는 안되는 결정이었다. 만약 B-1B 무력시위에 북한의 대응이 있었다면, 국지전 발발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주지하듯이 북방한계선은 유엔사가 남북 간 충돌방지를 목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해군 및 공군의 초계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이 선을 넘어 군사 활동을 하는 것은 우발 충돌의 우려가 있으니 자제하라는 의도인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NLL 인근은 여러차례 남북 간 교전이 발생하여 인명피해까지 있었던 한반도의 화약고 같은 곳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위협천만한 무력시위를 단호히 저지했어야 마땅했다.

3.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미국과 북한 모두 일체의 군사행동을 중단할 것을 다시금 강력히 요구한다. 유엔 무대에서 한국민의 의사는 전혀 개외치 않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매우 부적절한 발언 뿐만 아니라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 더해 태평양 상의 수소탄 시험 등의 위협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북한의 태도 모두 개탄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 북한과 미국 모두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냉정을 되찾고 군사적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주 유엔에서 밝혔듯이 한반도에서 긴장을 격화시키거나 우발적 충돌로 평화가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미국과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 그래야만 이 땅에서의 분쟁을 막을 수 있다.

한국의 시민사회도 전쟁으로 한 발 더 가까이 가는 어떠한 군사 행위도 단호히 거부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2017년 09월 25일

시민평화포럼, 참여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통일맞이, 한국YMCA평화통일운동협의회

[호소문]

10.4선언 발표 10주년에 즈음한 공동호소문

남북(북남)관계 발전과 평화변영의 청사진을 담은 10.4선언 발표 10주년이 되었다.

10.4선언은 역사적인 통일이정보 6.15공동선언에 기초하여 남북(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조장하는 법, 제도의 정비 문제를 비롯한 남북(북남) 신뢰 강화 조치들, 경제, 사회, 문화, 체육 등 남북(북남)관계를 전방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들, 한반도(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과 조치들을 천명한 거래의 소중한 성과물이다.

10.4선언이 제대로 이행되었다면 남북 북을 오가며 거둔 단합의 성과들이 평화변영의 미래를 힘차게 열어젖혔을 것이며, 거래는 머지않아 통일로 진입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10.4선언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으며, 어렵게 쌓아올린 남북(북남)공동선언 이행의 성과들마저 처참하게 짓밟히고 말았다. 한반도(조선반도) 긴장을 부추겨 저들의 패권을 실현하려는 의세의 움직임과 남북(북남)공동선언을 외면한 적대정권의 민족대결 책동으로 말미암아 남북(북남)관계의 전면 단절은 물론 한반도(조선반도)의 군사적 긴장도 날로 고조되었다. 대규모의 촛불항쟁으로 새로운 정부가 등장했지만, 여전히 전임정부들의 민족분열, 대결정책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남북(북남)관계 발전과 평화변영의 길을 열어젖히지 못하고 있다.

역사적인 10.4선언 발표 10주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북남)관계가 단절되고 한반도(조선반도)의 군사적 위기가 극에 달한 지금,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는 고조된 위기를 해결하고 남북(북남)관계 발전과 평화변영의 새로운 전망을 열어나가기 위해 다음과 같이 호소한다.

남북(북남)간 상호 존중, 신뢰관계의 회복을 위해 대결시대의 남은 정책을 남김없이 청산해야 한다. 동족을 적대시하는 제재정책에 동조하면서 대화와 협력, 신뢰회복은 있을 수 없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기초하여 민족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며, 남북(북남) 분열을 조장하는 일체의 법적, 제도적 장벽을 없애 나가야 한다.

한반도(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 수립은 민족의 사활이 걸린 과제이다. 최근 북측 전역에 대한 '완전한 파괴'를 운운하며 군사력 사용을 공공연히 위협하는 미국 정부의 발언

과 군사행동은 우리 민족의 존엄과 미래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며 훼손이다.

겨레의 운명과 이익을 외세에 내맡겨서는 결코 민족의 미래를 개척할 수 없다. 수십 년 간 이 땅에 도아리틀 뜬 채 겨레를 고통에 빠뜨린 전쟁체제를 청산하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온 겨레의 앞에 나선 가장 중대한 과제이다. 모두가 민족의 안녕을 지키며 조국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적극 행동에 나서자!

2017년 9월 27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성명서]

농민들의 쌀값 1kg 3천원 보장, 농정개혁, 농민헌법을 적극 지지한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오늘(10일), 벼를 심은 화물차 50여대를 타고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쌀값 1kg 3천원, 농정개혁, 농민헌법 쟁취'를 위한 투쟁을 전개한다. 만물의 곡식이 결실을 맺는 추석 이후, 수확을 기다리는 논 대신 아스팔트에서 다시 투쟁을 하는 농민의 심정은 참담할 것이다. 한 톨의 쌀을 생산하기 위한 농민의 피와 땀을 알고 있기에 쌀값 인상 등을 요구하는 전농의 투쟁을 지지한다.

우리는 벌써 1년이 지난, "쌀 수매가 현실화 공약을 지켜달라"는 고 백남기 농민의 염원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쌀값은 농민의 노고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며, 농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하지만, 박근혜정부는 본인이 공약으로 제시한 금액보다 낮게, 30년 전 가격(80kg 120,000원=1kg당 1,500원)으로 쌀값을 폭락시킨 주범이다. 농민의 노고, 쌀에 대한 가치, 농업의 중요성을 외면한 것이다.

지난 겨울, 팽창을 가득 채운 웃불은 정부를 고쳐줬다.

문재인정부는 농정공약의 첫 번째를 '쌀값 안정'으로 정하고, 지난 정부보다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 쌀 수확기 대책으로 일부 진전된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쌀값 목표를 낮게 책정(80kg 150,000원=1kg당 1,875원)하고 있다. 농가소득 증대에 대한 농민의 기대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쌀값 목표를 낮게 책정한 것은 소비자의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다. 조중동과 일부 경제신분은 정부의 쌀값 지원책으로 소비자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수입쌀이 증가하고, 밥쌀 이용량이 줄어들고 있기에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기존 정부정책의 실패 책임을 농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일정규모의 쌀을 매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WTO 규정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농민에게 쌀값 3천원은 노동자의 최저임금과 같은 것이다. 최소한의 가격보장이 되어야 지역균형과 국민경제가 유지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쌀값 보장과 농산물 가격 보장은 단순히 농업정책의 일환이 아니라, 국민주권, 식량주권의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이는 우리사회가 지향하는 기본적인 가치가 집적되는

헌법에도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전농의 주장은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기본적인 전제조건을 만들자는 것이기에 적극 지지한다.

'쌀값 1kg 3천원, 농정개혁, 농민헌법 쟁취'를 위한 농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앞으로도 계속 연대 해 나갈 것이다.

받은 하늘이다.

문재인 정부는 쌀값 1kg, 3천원 보장으로 농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정부는 쌀 1kg 3천원을 즉각 보장하라 !

2017년 10월 10일

전국여성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민중연합당엄마당, 새민중정당여성본부

[성명서]

사드 배치 앞당겨 안보를 정치에 이용한 김관진을 수사하라
비정상적인 사드 배치 지금이라도 철회하라

1. 오늘(10/11) '사드 배치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앞당겨졌'던 이유가 드디어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실에 따르면, 탄핵과 조기 대선 국면에서 사드 배치 임정이 급속도로 빨라진 것은 모두의 예상대로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지시였다. 국회사와 국민을 철저히 무시한 채 대선 직전 불법적으로 사드를 기습 배치한 것은 '안보'를 정치에 이용한 행위로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

2. 김관진 전 안보실장은 탄핵과 조기 대선 국면에서 미국을 방문해 사실상 사드 배치 시기를 직접 조율했다. 유력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후보가 사드 배치는 자기 정부에서 최종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히던 때였다. 김관진 전 실장이 나선 결과는 대선 직전 4월 26일 새벽의 기습 배치였다. 당시 한미 정부는 경찰 병력 8천여 명을 동원해 주민과 종교인, 활동가들을 폭력적으로 고착시킨 채 핵심 장비 일부를 부지에 반입했다. 환경영향평가도, 기반 공사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장비만 달달 갖다 놓은 것이었다. 모든 것이 비정상적인 절차였다.

3. 뿐만 아니다. 지난 5월 언론 보도에 의해 김관진 전 실장이 2016년 말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로부터 사드 배치 비용 부담을 한국 정부에 요구하는 문서를 받고도 이를 은폐했다는 사실도 드러난 바 있다. 비용 부담 합의의 진실이 무엇인지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 오늘 이에 더해 사드 배치 임정에 대한 한미 간 2차례 합의인(2016년 11월 1차, 2017년 3월 2차)이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라도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미 간 어떤 합의들이 있었는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4.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이미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국고손실),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으로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수사는 아직까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성주, 김천, 원불교, 전국행동은 사드 배치 합의·결정, 부지 취득과 공여, 환경영향평가 회피, 관련 자료 비공개 등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전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와 비민주성을 정리하여 감사원에 국민감사도 청구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감사원의 답변 역시 아직 감감무소식이다. 국방부는 새로운 장관 취임 후 내부 혐의를 통해 사드 배치에 대한 자체 조사와 감사원에 직무 감찰을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방부 자체 조사를 시작했다는 소식도 들을 수 없다.

5.전상 규명이 시급하다. 김관진이 누구인가. 2012년에도 군 사이버사령부 선거 개입을 주도한 것이 드러나 현재 수사 대상에 올라있는 자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사드 배치를 앞당겨 강행한 건 역시 어떤 의도였는지 철저히 수사되어야 한다. 나아가 사드 배치 전 과정의 위헌과 불법에 대한 수사도 이제 시작되어야 한다. 이를 덮어둔 채 사드 추가 배치를 강행한 것은 결국 현 정부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사드 배치를 철회해야 한다.

2017년 10월 11일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성명서]

전쟁을 부르는 한미해상훈련 반대, 트럼프 방한 반대 긴급여성행동 성명서

한반도에 전쟁의 유령이 배회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막말과 대규모 한미군사합동 해상훈련은 한반도를 전쟁의 위협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반대합니다.

여성들은 전쟁과 분쟁과 갈등 지역에서 늘 피해자로 남겨져야 했습니다. 한국전쟁으로 인해 한반도 여성들은 '특수 위안대'로, 전쟁 '미망인'으로, 이산가족으로, '기지촌 여성'으로, 고리안 디아스포라로 치참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내야 했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연습을 반대합니다.

때마다 벌어지는 대북억제와 방어라는 이름의 연례 한미군사합동훈련도 모자라 최근에는 미국의 '군사적 옵션'을 과시하듯이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이 NLL을 넘어 북한을 위협하고, 핵잠수함 '무산' '미시건' 핵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 호 등을 필두로 한 미국의 대량살상무기들이 이 땅에 전개되어 한미합동해상훈련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쟁연습은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우리 여성들은 트럼프의 방한에 반대합니다.

스스로를 "미쳤다(This guy's so crazy)"고 표현하고, 약자에 대한 조롱, 성차별과 인종차별적인 발언 등 천박한 혐오발언으로 인해 흑인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트럼프가 그동안 북한을 상대로 한 막말은 한반도 전쟁위험을 한층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막말 제조기'인 트럼프의 "미국과 동맹국들을 방어해야 한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 밖에 없다"는 유엔 연설은 '명백한 선전포고'로 받아들여져 한반도의 전쟁 위험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나는 거래를 위해 거래한다. 남이 갖지 않은 영향력을 발휘해야 이긴다"라는 기업가 시질의 상술을 동원하여 국제정치를 농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트럼프가 '최대 압박'정책이라는 미명 아래 한반도에 전쟁위기를 고조시켜 미-군산복합체의 이익을 위해 무기 장사에 나서고 있음을 간파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반도에 전쟁이 나서) 수 천 명이 죽어도 한반도에서 죽지 미국에서 죽지 않는다"라는 트럼프의 가장스런 발언에서 확

인원 밖 있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한반도 문제를 한갓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트럼프의 방한이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해서는 백해무익한 것임을 천명합니다. 북한을 악마화하고 조롱하며 증오와 적대시 정책을 펼치는 트럼프의 방한을 반대합니다.

우리 여성들은 대화와 평화를 원합니다.

전략자산의 전개와 합동군사훈련 등 무기와 무력시위가 아닌 대화와 평화를 원합니다. 우리 여성들은 각종 막말과 전략자산의 전개 등 군사력을 동원하는 위협적 행동을 수반하는 어리석은 '치킨 게임'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생명·평화·상생의 여성주의적 패러다임을 통해 한반도에 전운이 걷히고 새로운 평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실현에 여성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칼로써 흉한 자 칼로써 망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분단의 굴판을 걷어 치워야 할 때입니다.

분단의 빗장을 빼 버리고 평화통일의 대문을 활짝 열어야 할 때입니다.

북한을 평화협상의 테이블로 나오게 하려면 군사적 압박과 위협이 아닌 조건없는 대화 제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어리석은 무기경쟁을 중단하고 평화를 일구는 작업에 나서야 합니다.

우리 여성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전쟁광 트럼프, 한반도에 오지마라!
- 전쟁 부르는 핵감수함, 핵항공모함 필요없다!
- 전쟁위기 고조, 무기강매, 미국을 반대한다!
- 전쟁위기 지경다! 평화협정 체결하라!
- 대북적대정책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라!

2017년 10월 19일

사드반대·전쟁반대 세계여성평화행동

참가단체: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여성분부, 전국여성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평화어머니회, 경기자주여성연대, 고양여성회, 광주여성회, 구리여성회, 남양주여성회, 부천여성회, 분당여성회, 성남여성회, 수원일하는여성회, 안성여성회, 안양나눔여성회, 양주여성회, 오산여성회, 용인여성회, 이천여성회, 평택여성회, 하남여성회, 화성여성회, 경남여성연대- 전국여성농민회경남연합, 남해여성회, 사천여성회, 양산여성회, 진주여성회, 진해여성회, 창원여성회, 함안여성회, 광주여성회, 구로여성회, 부산여성회, 울산여성회, 천안여성회, 서울여성연대(준.)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수독어머니회, 대구여성회, 대전어머니회, 부산성폭력상담소,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제주어머니회, 제주여성인권연대, 포항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함께하는부부모임, 한국한부모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WomenCrossDMZ,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여성위원회, 사드배치철폐성주투쟁위원회여성위원회, 원불교평화여성위원회, 민중당

[성명서]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한미군사훈련 중단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미군사훈련, 미 전략자산 배치 등은 위기 가중시킬 뿐
군사행동 중단이라는 선제적인 조치로 협상의 여건 마련해야

오는 10월 27~28일, 제49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이하 'SCM')와 한미군사위원회(MCM)가 열린다. 한미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내년 한미연합군사훈련의 규모와 일정, 미 전략자산 한반도 배치 문제 등을 사실상 결정하게 된다.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가 극도로 고조된 지금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우리는 한미 정부가 한반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군사행동이 아니라, 위기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결단할 것을 촉구한다. 북한이 핵무장 능력을 완성하기 전에 대화와 협상의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서 한미연합군사훈련과 미 전략자산 한반도 순환 배치 중단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SCM 이후 11월에는 한미, 마중, 미일 정상회담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ASEAN+3과 동아시아정상회의(EAS) 그리고 내년 2월에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예정되어 있다. 이 시기를 활용하는 것은 매우 절실하고 중요한 일이다. 특히 정부는 지난 9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의 올림픽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적대행위와 무력분쟁을 중단 하자는 '올림픽 휴전 결의안'을 유엔에 제출했다. 이러한 제안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 중단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평창 올림픽에 북한이 전폭적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남북간 대화를 추진하고, 매년 2~3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극대화했던 키 리졸브·독수리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이 그것이다. 평창, 동경, 그리고 북경 올림픽 전에 관련국간의 군사대화도 추진을 검토할 만하다. 이는 평창 올림픽의 평화롭고 안정적인 개최뿐 아니라 한반도 위기를 완화하고 북한과 대화와 협상의 여건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번 SCM의 주요 의제인 미 전략자산의 정례적 순환 배치 계획은 위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방안으로 폐기되어야 한다. 전략 폭격기, 핵추진 잠수함, 핵추진 항공모함 등은 사실상 선제공격을 포함한 맞춤형 억제전략을 뒷받침하는 공격적인 무기이다. 이러한 전략무기들을 정례적으로 전개하는 것은 북한의 핵무장 논리를 정당화해주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극도로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지난 9월 미군의 전략폭격기 B-1B가 NIL을 넘어 무력시위를 했던 위험천만한 상황이 또다시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그 직후 북한은 미국의 전략폭격기들이 영공을 채 넘어서지 않더라도 자위권 차원에서 격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만에 하나 발생할 우발적인 충돌의 피해는 오롯이 한반도 주민이 입을 것이다.

무엇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군사행동을 차제하고 상호간의 위협을 줄이는 것이다. 그리고 더 늦기 전에 대화와 협상 국면으로의 전환을 이루어내야 한다. 이를 위해 한미 양국은 이번 SCM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등의 선택적인 조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다시 한번 한미 양국의 진정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2017년 10월 26일

계성공단기업비대위, 고양통일나무, 남북경제협력포럼, 대전평화여성회, 시민평화포럼, 원불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통일맞이, 평화3000, 평화네트워크, 평화여성회,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화해·통일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 생명평화센터

[설명서]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 이행을 담보하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을 환영한다

2017년 11월 24일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은 여성-평화와 안보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325에 따른 국가행동계획 수립 및 이행평가-심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는 분쟁 예방·관리·해결과 평화 과정에서 여성 참여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분쟁 및 성폭력을 예방하고,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평화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채택하고, 분쟁이후 국가에서 여성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에 관한 국가행동계획' 과 관련한 법적인 근거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나, 이 개정안이 통과함으로써 양성평등법을 근거로 정부는 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에 따라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양성평등위원회에서는 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에 따라 수립한 국가행동계획의 이행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해야한다.

우리는 이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을 환영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새로운 '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에 관한 국가행동계획'에 예산, 지표, 이행체계, 민간협력 등을 포함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2014년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에 따라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재검토하고 있다. 앞으로 수립될 제2기 국가행동계획은 평화와 안보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와 여성의 권한 강화를 실질적으로 담보해야 할 것이다.

- 성평등위원회를 신설하고, 성평등위원회가 "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에 따라 수립한 국가행동계획의 이행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신설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무총리 소속의 양성평등위원회가 아니라 성평등위원회가 1325호 국가행동계획을 심의해야 한다.

- 성평등위원회에 “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유연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에 따라 수립한 국가행동계획의 수립, 이행, 개선방안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신설하라.

-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적극적으로 1325호 국가행동계획을 이행하라. 현 정부에서 부활한 국가안보실은 외교·국방·통일·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국가안보실이 여성, 평화, 안보 의제를 수행해야 한다.

2017년 11월 27일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성명서]

송영무 국방장관의 부적절한 성희롱 발언을 규탄한다

최근 JSA 구역 내 판문점을 넘어 온 북한군 병사 건과 관련하여 11월 27일에 현장을 방문한 송영무 국방장관은 공인으로서의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성희롱 발언을 하여 여성계를 경악케 하고 있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해당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유엔군 판문점자와 스위스, 스웨덴 중립국 감독위 판문점자 등 외국인들과 함께 JSA 경비대대 2초소를 방문한 후 있었던 식사 자리에서 "식사 전 예기와 미니스커트는 짤수록 좋다"는 발언을 하였다. 통역으로 전해진 "the shorter, the better"는 동성한 외국인들의 실소를 유발시켰다.

일국의 국방장관이란 자의 이 같은 발언은 여성의 존엄과 인격을 저질히 무시하는 처사로서 대외적으로도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는 단순한 말실수가 아닌 본인의 평소 성의식과 여성에 대한 편견을 그대로 노출한 것으로서, 아주 저급한 젠더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국방장관은 공인으로서 품위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석에서나 함 범한 수준 낮은 표현을 공식석상에서 사용하였고, 이는 여과 없이 그대로 언론매체에 보도됨으로써 여성계뿐만 아니라 시민평화인권단체들로부터도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송영무 국방장관은 7월 13일 취임 이후 양성평등법 등 4개 법률에 의거하여 국방부에서 연 4회 분기별로 진행되는 성인지역 향상을 위한 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근현대사에서 한반도의 무수한 여성들은 일제 강점기, 분할과 전쟁, 그리고 분단으로 인해 피폐한 삶을 살아야 했다. 군국주의와 군사주의의 피해자였던 여성들은 '일본군 위안부' '한국군 위안부' '미군 위안부'로 불리며 신산한 삶을 살아야 했고, 또 다른 이름인 '미망인'과 이산가족, 그리고 해외이산동포의 삶 역시 녹록치 않았다.

더 이상 이 땅에서 여성이 피해자로서만 살아갈 수 없다. 소수 특권층의 전유물로 인식되고 있는 '안보'는 더 이상 1700만 촛불시민들이 원하지 않는다. 이제는 '군사안보'가 아닌

'시민안보'·'여성안보'가 주류를 이루어야 한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담보되고 무력과 전쟁이 아닌 대화와 협상을 전제로 한 진정한 의미의 '시민안보'가 이 땅에 자리 잡아야 하며, 이와 더불어 여성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고 성평등한 사회에서 자유를 누리며 받거리 안전이 확보되고 군사주의의 산물인 가정·사회·군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여성안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성평등 지수가 바닥인 나라. 여성의 '안보' 분야 정책결정자가 거의 전무한 나라. 유연안보리걸의 1325호 등 유엔의 권고가 무색한 나라에서 송영무 국방장관 같은 남성 공인의 출현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결과일지 모르나 앞으로는 절대 용인되어서는 안 될 악폐임이 분명하다. 정부는 최근 고위공직자 원천배제 7대 원칙 중 하나로 성범죄를 추가한 바 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성인지력 향상 교육의 경우에서 보듯이 정무직은 처벌조항을 따르 두지 않음으로써 이번과 같은 송영무 국방장관의 성희롱 발언 과 같은 유사한 사태가 재발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에 여성계는 송영무 국방장관과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송영무 국방장관은 국민 앞에 공식 사과하라.
2. 정부는 남성 공직자들의 뿌리깊은 성차별의식 표출 방지를 위해 정무직을 포함한 전 공무원을 상대로 강력한 처벌조항을 둔 성인지력 향상 교육을 철저히 시행하라.

2017년 11월 29일

한국여성단체연합 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독교민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제주여성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기자회견문]

'한미공군합동훈련 중단 촉구' 여성평화행동 기자회견문

불안해서 못살겠다. 최대규모 한미공군합동훈련 지금 당장 중단하라!

오늘 12월 4일부터 8일까지 한국 전역에서 미군의 최첨단 전략무기인 스텔스 전투기 F-22와 F-35A를 비롯하여 한미 항공기 230여대와 미 해군과 해병대 1만 2천여 명의 병력이 참가하는 한미공군합동훈련을 실시한다고 한다.

군사분계선을 불과 수분이면 넘을 수 있는 첨단 전투기들의 군사행동은 자칫 심각한 충돌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더욱이 정부는 지난 12월 1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제거하는 일명 '잠수 부대'인 특수임무여단을 창설하여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지난 9월21일 문재인대통령은 UN연설에서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는다."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이나인위적인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평화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아 안타까울 뿐이다.

제재와 군사훈련으로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 정부는 지금당장 평화협상 시작하라!

그동안 북핵문제 해결 방향은 한축으로는 B-1B, F-35를 동원한 폭격 훈련, 핵잠수함, 핵항공모함을 최대 규모로 배치함으로써 군사적 압박을 하였으며 또 한 축으로는 해상, 금융 봉쇄를 비롯한 국제적으로 '최고 수준의 제재'로 북을 압박하였다. 제재와 압박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더욱이 전략무기 한반도 배치의 군사적 긴장을 격화시킬 뿐 아니라 우리 경제에도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미 내년 국방예산이 30% 넘게 증액된데 이어 트럼프 미대통령 방한시 F-35A 합동타격전투기, KF-16 전투기 성능개량, 패트리엇 PAC-3 성능개량, AH-64 아파치 대항공격헬기, 글로벌호크 고고도 정찰용 무인기, 이지스 전투체계 등 공동연준발표문에 적힌 미국의 무기를 구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7조 8천 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군사훈련은 중단해야한다!

2018년 2월이면 몇년 전 부터 전국인이 개최를 위해 애써온 평창올림픽이 시작되고 올림픽은 그 정신부터 '전쟁중단 평화'이다. 제72차 유엔총회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개막 7일 전부터,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폐막 7일 후까지 '휴전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그러나 평창올림픽이 끝난 후 대규모 한미전쟁 연습인 키리졸브 훈련이 예정되어 있어 국민들을 더욱더 불안케하고 있다.

평화의 상징인 올림픽 앞두고 대규모 전쟁훈련이 진행되는 조건에서 평창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오직 평화' '전쟁 불가'를 언급하며 UN연설에서 "평화는 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분쟁을 평화로운 방법으로 다루는 능력을 의미한다"라고 밝혔듯 지금 당장 그 말대로 행동해야 한다. 해답은 명백하다. 군사훈련 중단, 평화협상 시작하라. 평화가 가장 절박한 것은 바로 우리다.

총 전략자산을 전개하여 실제와 가상으로 치러지는 이번 한미공군합동군사훈련은 평화를 가져오기보다 북을 자극하여 전쟁위기를 부추길 뿐이다. 대체 언제까지 군사훈련, 전쟁연습으로 우리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할 것인가. 대체 언제까지 한미동맹의 그늘아래서 군사주권, 경제주권을 능욕당할 것인가.

우리 여성들은 전쟁의 참화가 여성과 아이들에게 어떤 악몽을 가져다주었는지 잘 알고 있다. 미국과 정부에게 강력하게 요구한다.

- 한미공군합동훈련 당장 중단하라!
- 대북적대정책 철회하고 평화협상 시작하라!
- 미국은 더 이상 한반도에 개입 말라!
- 우리 민족끼리 평화일구기에 적극 나서라!

2017년 12월 4일

사드반대 전쟁반대 여성평화행동

**문재인 정부는 한일'위안부'합의 검증 TF 결과 수용하여
지금 당장 2015한일합의 폐기하라!**

1. 외교부 한일'위안부'합의 검증 TF 검토 결과 평가

지난 7월 31일 외교부 장관 직속으로 출범한 검증 태스크포스(TF)의 5개월에 걸친 검증결과가 궁극적인 2015한일합의 발표 2주년을 하루 앞둔 오늘 발표되었다. 우리는 오늘 공개된 TF 결과 보고서에 그동안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과 정대협, 정의기억재단을 비롯한 지원단체들이 제기했던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조사결과가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하며 검증 TF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과 보고서가 담고 있는 2015한일합의 내용 평가 중 오류에 대하여 지적하고 대응방향을 밝히고자 한다.

검토 결과보고서는 일본의 '법적책임' 이나 '책임인정'이라는 말을 이끌어 내지는 못했으나 '책임통감'이라는 표현을 통해 진전을 이루었으며, 일본정부 예산에서 거출된 10억 엔이 일본정부의 법적책임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피해자들과 지원단체가 주장해온 법적책임 인정은 전쟁범죄의 '가해내용의 구체적 명시와 인정', 그리고 '책임주체의 구체적 명시'를 토대로 한 법적책임 인정'이었다.

따라서 고노 담화와 아시아여성기금 당시 일본총리의 편지에 담겨있던 '도덕적'이라는 수식어가 삭제된 '책임통감'이라는 표현은 진전이라 평가될 수 없으며 피해자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못한 검증 TF의 자의적인 평가일 뿐이다.

또한 아베와 기시다 외무상 역시 2015한일합의 발표 직후 이는 법적책임 인정이 아님을 밝혔으며 박근혜 정부 역시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힌 적이 없을 뿐 아니라, 2015한일합의 내용에도 가해주체, 책임의 범위와 내용에 대한 구체적 명시는 빠진 모호한 문구로만 표현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진전을 이루었다는 평가는 검증 TF 출범 당시 일본군성노예제를 오랜 기간 연구해온 법,역사,여성학 전문가들을 배제한 것에 대해 정의기억재단이 제출했던 우려가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한다.

2. 외교부 한일'위안부'합의 검증 TF 검토에서 드러난 2015한일합의 문제점

검토 결과 보고서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피해자 중심주의 접근의 부재

해당 보고서는 실제 2015년 12월 28일 양국의 외교장관이 공동기자회견으로 합의내용을 발표하기 이전인 2015년 4월 11일 이미 잠정협의를 도출되었다. 그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외교부는 협상에 임하면서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국제사회 비난,비판 자체 등 한국정부가 취해야 할 조치를 포함한 전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입장을 반영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구체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데 실패하여 오히려 피해자 중심이 아닌 정부입장중심의 합의였음을 지적하고 있다.

2) 민주적 절차와 과정의 부재 그리고 주무부처의 무능

국민적 관심사인 일본군성노예제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와 정상회담 개최를 연계하는 우를 범하여 이를 외교문제의 전부로 비화시켰고, 주무부처인 외교부는 배제한 채 이병기 국가정보원장을 협상의 대표로 임명하여 외교정책의 무능함을 온 천하에 드러냈다. 뿐만 아니라 일본군성노예제라는 인권문제를 모든 경제,문화,안보,외교와 연계시키면서 미국이 한,미,일 군사안보동맹을 목적으로 인권,역사문제에 대해 개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버렸다.

결과적으로 2015한일합의에 대한 모든 정책결정 권한은 대통령에게 집중되게 되었다. 이로 인해 2015한일합의의 결과물인 화해치유재단 설립에 있어서도 '조용하고 신속하게 설립을 추진하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여승가족부는 화해치유재단 설립계획을 외교로부터 통보 받고 재단 설립절차를 이례적으로 신속히 처리하고 적극적인 예산지원만을 집행하는 허수아비로 전락했다.

3) 비공개 합의 내용의 문제

그동안 피해자와 지원단체들은 지속적으로 평화의 소녀상을 둘러싼 합의여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해당 내용 공개를 요구해왔다. 이 역시 사실로 드러났다. 비공개 합의는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에 대한 한국정부의 설득 노력, 제3국의 기밀비 지원을 포함한 일본대사관 평화의 소녀상 철거 노력, '성노예' 표현 사용 반대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해자와 지원단체들은 일본정부의 빈번한 사과변복의 사례를 들어 일본의 사죄가 있다면 그것은 '되돌릴 수 없는' 사죄가 되어야 함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실패한 외교 전략으로 한·미·일 외교관계에서 외통수에 물리게 되자 피해자들의 요구에 반하여 일본의 구도대로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표현을 수용해버린 것이다.

또한 우리는 검증 TF 발표를 통해 박근혜 정부가 해외 기금비 설치와 관련한 정부차원의 지원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을 함의했음을 첨하면서 그간 2015한일합의 이후 외국의 한인회 단체들이 외교부로부터 '소녀상 관련 활동 일체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받았다는 재보가 사실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간 국제기구에서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을 지칭하는 공식명칭인 '성노예'라는 표현에 대해 지난 11월 개최된 제28차 유엔 국가별인권정책검토에서 일본정부가 주장했던 강한 반발의 근거도 오늘 검토 결과를 통해 확인하게 되었다.

3. 문재인 정부에 대한 우리의 권고

2015한일합의는 협상과정과 합의결과 그 어디에도 피해자는 없었으며, 피해자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은 없었다. 정권이 바뀐 지금까지도 2015한일합의에서 한국정부가 약속했던 '국제사회에서 비난, 비판 자제'는 여전히 남아 한국정부의 침묵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한국정부의 침묵에 맞서 자신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피해자임을 용기 있게 밝히며 싸워왔던 이들은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 자신들이었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굴욕적인 2015한일합의에 맞서 싸워온 김복동, 김원옥, 안점순, 이옥선,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들의 힘으로 오늘의 외교부 한일·위안부'합의 검증 조사가 나올 수 있었음에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 이는 지난 27년간 거리에서 세계 곳곳에서 일본군성노예제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요구했던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외침, 그리고 그 외침에 응답한 국민들의 동행의 결과이며, 우리는 오늘 다시 희망의 역사를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에 서게 되었다.

이제 공은 문재인 정부에게 돌아갔다.

2015한일합의 폐기, 화해치유재단 해산, 10억 엔 반환의 근거는 명확해졌다.

문재인 정부는 오늘 발표된 TF 결과와 피해자들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여 더 이상 2015한일합의 무효화를 미루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2015한일합의를 근거로 한 반인도적 전쟁범죄인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왜곡, 부정' 중단, '2015한일합의를 정치, 외교 입지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삼는 일체의 언행' 중단, '피해자들을 배제한 채 위로금 10억 엔으로 체결된 2015한일합의 이행강요를 주장하는 일체의 행위' 중단을 아예 일본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일본정부의 간계에 부화뇌동 하지 말고 반인도적 전쟁범죄의 희생자로 전후 72년간의 세월을 고통 속에 보내온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피해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문제해결을 위한 행동에 나서길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피해자 배제, 국제인권기구 권고 무시 2015한일합의 지금 당장 무효화하라!
- 범죄사실 부정, 은폐, 범죄책임 면죄부 준 일본정부의 '위로금' 10억 엔 지금 당장 반환하라!
- 위로금 수령 풍용, 위로금 부정 지급 화해치유재단 지금 당장 해산 조치하라!
- 국제기구권고에 따라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완전한 인권회복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라!

2017년 12월 28일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여성교회전국연합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전국여교역자회, 기독교여민회, 대한예수교장로회전국여교역자연합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여성교회, 원불교여성회, 이화민주동우회, 전국여성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한국기독교장로회여교역자협의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여성대회전국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전교회, 한국여성학자협의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나눔의 집, 일본군'위안부' 할머니와함께하는마창진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 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경제시민모임,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화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평화비전국연대(고창군평화의소녀상, 평양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구미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금천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김포평화나비, 대구평화의소녀상건립시민추진위원회, 부천시민연합, 서산평화의소녀상보존회, 성남평화나비, 세종평화의소녀상건립시민추진위원회, 속초평화의소녀상건립시민추진위원회, 수원평화나비, 순창평화의소녀상추진위원회, 안양평화의소녀상네트워크, 양평평화의소녀상, 오산평화의소녀상, 용인평화나비, 원주시민연대, 일본군강제성노예피해자전주평화기림사업회, 일본군'위안부'할일협정무효외교로평화의소녀상건립을위한주민모임, 전남평화의소녀상연대(목포, 여수, 순천, 해남, 나주, 곡성, 담양), 전남평화의소녀상인권강사단, 천안평화나비시민연대, 춘천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충북평화의소녀상시민추진위원회, 평택평화나비연대회의, 평화나비대전행동, 해남평화나비)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천주교 전국행동(천주교 광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대구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마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수원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의정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작은형제회 정의 평화 창조보전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한국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장상협의회)

한일'위안부'합의무효와정의로운해결을위한제주행동(곶자왓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민주노동 제주본부,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4.3도민연대,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나비,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참교육 제주학부모회)

평화나비네트워크(서울 평화나비, 경기 평화나비, 충청 평화나비, 춘천 평화나비, 원주 평화나비, 부산 평화나비, 제주 평화나비, 광주 평화나비(준))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대학생겨레하나, 우리겨레하나되기부산운동본부, 우리겨레하나되기울산운동본부, 전북겨레하나

아이앰소비자활동연합회,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중당, 사월혁명회, 육지사는제주

사들, 전국칠거민협의회중앙회,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일본군'위안부'연구회, 평화재향군인회, 한국정신대연구소, 한국진보연대, 한미평화재단, 4.9통일평화재단,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6.15공동선언실천전북본부, 국민주권연대, 국제노동자교류센터(ICLS), 극단고래, 노동인권회관,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더불어이웃,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양주지회, 민족민주연사회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통일당추진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일본군'위안부'문제 대응TF,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바락소리, 불교평화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 전국칠거민연합), 새로하나, 예수살기,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인천여성회, 전국노점상총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조국통일법민족연합남측본부, 천주교부안교구정의평화위원회,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장장, 통일의길, 평화어머니회, 평화통일시민행동,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협정운동본부, 포항여성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청년연대, 시민평화포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회진보연대, 참여연대, 노동당

평화세상을 위한 아름다운 참여

평화여성회의 회원이 되시면,

- ❖ 문화행사, 토론회, 연구활동, 캠페인 등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 관심분야에 따라 자원활동 및 다양한 회원모임에 참여합니다.
- ❖ 정기회비 납부로 평화여성회 활동을 후원합니다.
- ❖ 소식지와 자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 원 가 입 서

| | | | | | | | |
|-------|--|--|--|------|--|--|--|
| 이름 | | | | 주민번호 | | | |
| 이동전화 | | | | 전자메일 | | | |
| 집 주소 | | | | | | | |
| 거래은행 | | | | 예금주 | | | |
| 계좌번호 | | | | 약정금액 | | | |
| | | | | 이체일 | <input type="checkbox"/> 10일 <input type="checkbox"/> 25일 | | |
| 관심 분야 | <input type="checkbox"/> 정세대응 <input type="checkbox"/> 통일과제 <input type="checkbox"/> 국방과제 <input type="checkbox"/> 남북교류 <input type="checkbox"/> 갈등해결 <input type="checkbox"/> 전쟁반대 <input type="checkbox"/> 평화교육 <input type="checkbox"/> 평화문화 <input type="checkbox"/> 여성운동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 | | |
| 가입 동기 | | | | | | | |
| 가입 일자 | | | | | | | |

후원계좌 : 388-810005-03104 (하나은행) 예금주 : (사)평화를만드는여성회
 347-01-0018-351 (국민은행) 예금주 : (사)평화를만드는여성회

2018년 제22차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정기총회

발행일: 2018년 1월 29일

발행인: 안김정애

발행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07229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5길 6 여성미래센터 401호

전화 02-929-4847 / 팩스 02-929-4843 / 이메일 wmpeace@naver.com

홈페이지 www.peacewomen.or.kr / 페이스북 www.facebook.com/koreawmp

후원계좌: 388-810005-03104(하나은행) 예금주: (사)평화를만드는여성회
